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6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부산•경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 부산·경남 지역 -

2006.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최종보고서

- 부산·경남 지역 -

2006. 12.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장 동 표

공동연구자 : 유 영 국

공동연구자 : 정 승 안

일러두기

◇ 이 보고서의 연구대상 시기는 1948년(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1992년(문민정부 수립 이전)으로 한정한다.

◇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항목 목록'과 '단체 항목 목록,' 개별 '사건 항목'과 '단체 항목'의 조사 작성, '사건일지,' 그리고 '참고문헌'으로 구성된다.

◇ 이 보고서에 인용하는 각종 자료(선언문, 성명서, 결의문, 강령 또는 회칙, 회보, 신문, 팜플랫, 언론기사, 사진자료 등)는 자료마다 분류번호를 붙여 별도의 자료집에 수록한다. 자료집에는 이 보고서에 직접 인용하지 않는 자료들도 포함하여 수록한다.

◇ 민주화를 위한 저항과 투쟁은 물론, 그러한 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폭력 및 억압행위도 맥락상 중요할 경우에는 수록한다.

◇ 이 보고서의 '사건 항목'은 부문운동별-연월일순으로, '단체 항목'은 부문운동별-가나다순으로 하고, '사건일지'는 연월일순으로 정리하여 서술한다.

◇ 부문별 구분과 그 게재 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합운동-노동운동-농민운동-빈민운동-청년학생운동-통일운동-평화운동-종교계운동-시민운동-여성운동-환경운동-보건의료운동-언론운동-출판운동-교육운동-학술운동-문화예술운동-정치운동-인권운동-국제운동-기타. 단 3개 부문 이상에 걸칠 경우 '연합운동' 부문에 서술하고, 2개 부문에 걸칠 경우 '사건 항목'과 '단체 항목'의 경우 주된 부문에 서술하고 종된 부문에는 항목만 설정하고 주된 부문을 참고하도록 '☞'표시를 하며, '사건일지'의 경우 먼저 주된 부문을 표기하고 '/'뒤에 종된 부문을 표기한다(예: '노동/보건의료'라고 표기된 것은 '노동'부문을 주된 부문으로 분류한 것임).

◇ 사건 및 단체 조사 연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산・경남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과 단체에 한하되, 부산・경남지역의 사건 및 단체에 영향을 미친 타지역(중앙 포함)의 사건 또는 단체, 부산・경남지역의 사건 및 단체가 영향을 미친 타지역(중앙

포함)의 사건 또는 단체도 있을 경우 함께 다룬다. ‘사건일지’에서도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경우는 타지역 또는 전국적 사건(예컨대 ‘5・18광주항쟁’ 발생, ‘5・16군사쿠데타’ 발생)도 일지에 포함한다.

◇ ‘부산’은 1963년 1월 1일부로 정부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부로 부산광역시로 개칭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일지에 나타나는 지명 가운데 1963년 1월 1일 이전의 ‘경남’에는 부산이 포함되며, 그 이후의 ‘경남’은 원칙적으로 부산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산과 별개의 단위 지역으로 다룬다. 또한 ‘울산’의 경우 1997년 7월 15일부로 울산광역시로 승격된 바 있으나, 이 사건일지 작성의 시기 범위인 ‘1948년(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1992년(문민정부 수립 이전)’ 시기까지는 전 기간 경상남도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일지에서는 별도의 단위 지역으로 보지 않고 ‘경남’의 일부로만 다룬다.

◇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시청’ 또는 ‘부산시청’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중앙동에 있는 영도대교 앞 제2롯데월드 신축 터에 있던 청사를 가리키며, ‘도청’ 또는 ‘경남도청’은 현재의 부산광역시 토성동에 있는 부산지방 및 고등검찰청사의 주요 건물을 가리킨다.

◇ (사건발생)‘일자’의 경우 발생월이 불명인 경우는 해당 연도의 맨 앞에 ‘00.00’으로 표기하고, 발생일이 불명인 경우는 해당 월의 맨 앞에 00으로 표기한다.

◇ 신문보도 기사로부터 사건 정보를 따온 경우 (사건발생)‘일자’의 기록에 실제 사건 발생일보다 1~2일의 차이가 날 수 있다.

◇ 이 보고서의 ‘사건항목 기초조사’나 ‘단체항목 기초조사,’ ‘사건일지,’ 그리고 별도의 ‘자료집’ 인용자료 표기문 가운데 “부경”과 “청학”은 각각 “부산・경남”과 “청년학생”의 약호이다.

◇ 자료가 명백히 틀렸을 경우에도 자료 그대로 인용하되, 주석을 달거나 본문 내의 보충 서술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는다.

◇ ‘사건일지’의 ‘근거자료’난이 비어있는 경우는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을 근거자료로 작성된 것이다.

머리말

이 보고서는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남지역의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와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정부 수립 이후 이들 지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건 및 단체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을 우선으로 서술하였다. 이로써 향후 부산, 경남 지역의 민주화운동사를 편찬하는 데 사전적 참조가 될 것이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하는 데 나름대로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주지하듯이 부산과 경남은 울산과 함께 광역자치 단위의 지역으로 그 민주화 운동의 영역이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으며, 격변의 한국 현대사가 가진 특성을 잘 보여준다. 경남은 경상도가 19세기 말 경상남도와 북도로 나뉘면서 출발하였고, 최초의 개항지 부산은 1963년 부산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경남 지역에서 분화하였다. 1997년에는 경남에 소속되어 있던 울산시가 급속한 경제발전에 힘입어 인근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로 승격되었다. 부산과 경남 지역의 이와 같은 행정구역 변천은 동시에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한국 근현대사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우리 역사의 진정한 발전은 민족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부산은 19세기 후반 이후 외세의 침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지역으로 민족운동과 더불어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지역이었다. 울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게 한 중추지로서 특히 노동운동의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곳이다. 부산과 경남지역은 3.15마산의거와 4월혁명, 유신체제를 뒤엎은 부산과 마산의 민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자대항쟁 등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곳이었다. 이제 그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선 민주화운동의 전체 역사를 제대로 편찬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민주화운동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들이 더 이상 망실되기 전에 그를 최대한 수집 정리하는 일인 것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 취지 또한 거기에 있다.

본 보고서는 크게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건'과 '단체'의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였다. 또한 민주화운동 전체 사건과 단체를 개관하기 위하여 '사건일지'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모든 것을 포괄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넉넉하지 못한 관계로 모두 정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향후 계속 보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최종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 12.

부산 · 경남 지역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 연구책임자 장동표

목차

일러두기 ····· 1
머 리 말 ····· 3
작업진행 경과 ····· 5
사건 및 단체 항목 목록 ····· 6
1. 사건 항목 목록 ····· 6
2. 단체 항목 목록 ····· 9

Ⅰ. 사건 항목 기초조사 ····· 11
1.연합운동 ····· 11
2.정치운동 ····· 33
3.청년학생운동 ····· 39
4.노동운동 ····· 68
5.종교계운동 ····· 107
6.학술운동 ····· 111
7.인권운동 ····· 113
8.통일운동 ····· 121

Ⅱ. 단체 항목 기초조사 ····· 125
1.연합운동 ····· 125
2.청년학생운동 ····· 130
3.노동운동 ····· 135
4.종교계운동 ····· 139
5.교육운동 ····· 146
6.문화예술운동 ····· 149
7.인권운동 ····· 151
8.통일운동 ····· 153
9.시민운동 ····· 155
10.환경운동 ····· 157
11.보건의료운동 ····· 161

◉ 참고문헌 ····· 166

작업진행 경과

2006.04.19.(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장동표 민주주의사회연구소장 본 보고서 용역 계약체결

206.04.24.(월) / 민주공원에서 제1차 회의(공동 연구진 장동표, 유영국, 정승안 및 차성환 민주공원관장 참석), 계약체결사항 설명 공유, 작업계획 의견교환
- 1948-1961년까지(장동표), 1962-1979년까지(유영국), 1980-1992년까지(정승안)로 각각 나누어 <사건일지> 초고부터 작성하고 다음 진행사항 논의키로 함

2006.05.22.(월) / 부산대에서 제2차 회의(장동표, 유영국, 정승안)
- <사건일지> 초고 검토, 보완점 확인, <사건항목> 및 <단체항목>도 <사건일지> 작성시의 시기구분대로 분담 작성하기로 합의. 장비와 보조인력의 활용은 1980년대 부분에 집중하기로 하고, 1980년대 이전 시기에 대한 자료수집은 신문기사 및 기존의 문헌자료와 민주공원에 소장된 자료를 활용하기로 함

2006.07.24.(월) / 부산대에서 제3차 회의(장동표, 유영국, 정승안)
- 7월 28일의 중간발표 대비 사전 점검, <사건일지> 중심으로 발표하고 <사건항목> 및 <단체항목> 조사에 대하여는 작업 모델을 제시하기로 함

2006.07.28.(금) /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중간발표와 토론회 가짐
-- 보고서 작성상의 제 원칙 논의, 공유

2006.08.07.(월) / 부산대에서 제4차 회의(장동표, 유영국, 정승안)
- 중간발표 이후 작업결과 점검, 녹취 인터뷰 및 자료 사진촬영 등 향후 작업일정 논의

2006.11.06.(월) / 부산대에서 제5차 회의(장동표, 유영국, 정승안)
- 최종발표 대비 작업결과 점검

2006.11.09.(목) /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최종발표 및 보완사항 논의

2006.12.04(월) / 부산대에서 제6차 회의(장동표, 유영국, 정승안 참석)
- 최종제출본 보완사항 사항 점검 및 제출 일정 확정

사건 및 단체 항목 목록

1. 사건 항목 목록

연번	부 문	사 건 명	발 생 일	게재면
1	연합	부산 3 · 4월항쟁	1960.03.07~04.27	14
2	연합	마산 3 · 15의거	1960.03.15~04.13	19
3	연합	부마항쟁	1979.10.16~20	21
4	연합	6월항쟁	1987.06.10~29	23
5	연합	1991년 5월투쟁	1991.04.26~06.29	31
6	정치	경상남도 사회대중당 사건	1961.03.11~05.16	36
7	정치	6 · 8부정선거반대운동	1967.06.14~17	37
8	정치	3선개헌 저지투쟁	1969.01.08~10.17	40
9	청년학생	부산민주민족청년동맹 사건	1960.05.07~1961.05.16	43
10	청년학생	경상남도민주민족청년동맹 사건	1960.12.00~1961.05.16	44
11	청년학생	경상남도 반민주악법 반대 학생공동투쟁위원회 사건	1961.03.23~05.16	45
12	청년학생	한일협정 반대투쟁	1964.03.25~1965.08.26	46
13	청년학생	교련강화 반대 투쟁	1971.04.15~22	49
14	청년학생	「부산대학교자율화 민주실천선언문」 살포 사건(약칭 「4.19 선언문」사건)	1978.04.19	51
15	청년학생	부산대 반유신 페인팅 사건	1978.07.04	52
16	청년학생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1980.02.26~05.17	53
17	청년학생	계엄철폐요구 유인물 배포사건	1980.05.19	55
18	청년학생	민주선언문 배포시위 사건	1981.04.06	56
19	청년학생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1982.03.18	57
20	청년학생	해운대 전두환방일 반대시위	1984.08.15	61
21	청년학생	경성대 진성일 투신사망 사건	1986.11.05	61
22	청년학생	부산대 장재완 사망 사건	1987.03.27	62
23	청년학생	부산대 양영진 투신사망 사건	1988.10.10	63
24	청년학생	동의대 5 · 3 항쟁	1989.05.03	64
25	노동	부산 부두노동자 총파업	1952.07.17~31	73

연번	부 문	사 건 명	발 생 일	게재면
26	노동	전국미군종업원노조 임금인상쟁의	1954.05.27~1955.03.00	74
27	노동	제3부두 사건	1954.07.01	75
28	노동	현대조선소 폭동 사건	1974.09.19	76
29	노동	인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의 김영태 섬유노조위원장 통대 낙선운동	1978.05.16	77
30	노동	연합철강 노동자투쟁	1980.04.19~05.19	80
31	노동	동국제강 노동자파업	1980.04.28~30	81
32	노동	동명목재 노동자 파업농성	1980.05.11~17	82
33	노동	현대 노동조합 결성투쟁	1980.05.17	83
34	노동	부산택시기사 농성투쟁	1984.05.25~06.05	84
35	노동	연합철강노동자의 반동국제강 투쟁	1985.02.21~1986.08.14	86
36	노동	현대엔진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선출 투쟁	1986.00.00	87
37	노동	현대중전기 기능직 처우개악 시정요구	1986.00.00	88
38	노동	동양고무 노동자투쟁	1986.03.10~06.27	89
39	노동	대양고무 근로조건 개선요구 투쟁	1987.04.06~09	91
40	노동	1987년 현대계열 노동자대투쟁	1987.07.00~09.00	91
41	노동	대한조선공사 노조민주화투쟁	1987.07.25~08.31	94
42	노동	국제상사 노동자투쟁	1987.07.28~08.31	95
43	노동	부산택시지부 전국연대 총파업	1987.08.28~09.05	97
44	노동	대우정밀 노동자투쟁	1988.03.23~07.12	98
45	노동	노동법개정 투쟁	1988.06.13~11.03	100
46	노동	한독병원노조 파업사건	1988.12.01~1990.11.08	102
47	노동	백병원노조 파업사건	1989.03.06	103
48	노동	남천병원 노동자 탄압사건	1989.04.07~25	104
49	노동	동신화학노조 파업사건	1989.12.05~1990.03.00	105
50	노동	교도관 단체행동 사건	1990.02.05	106

연번	부 문	사 건 명	발 생 일	게재면
51	노동	(주)코파트 노동조합 탄압사건	1990.04.09~05.16	107
52	노동	풍산금속 노동자 투쟁	1990.09.08~1991.06.15	107
53	노동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의문사 사건	1991.05.06	108
54	노동	신발노동자 권미경 투신 사망사건	1991.12.17	111
55	종교계	중부교회『책방골목』필화 사건	1976.02.14	113
56	종교계	임기윤 목사 의문사 사건	1980.07.19~26	115
57	학술	부산대와 수산대 교수들의 교권수호 투쟁	1971.08.23~31	118
58	인권	마산피학살자유족회 사건	1960.07.12~1961.05.16	120
59	인권	밀양피학살자장의위원회 사건	1960.07.15~1961.05.16	121
60	인권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사건	1960.08.00~1961.05.16	121
61	인권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	1960.08.00~1961.05.16	123
62	인권	창원피학살자유족회 사건	1960.08.15~1961.05.16	124
63	인권	부산대재일교포간첩단 사건(일명 김오자 사건)	1975.10.10	124
64	인권	부림사건	1981.09.07~1982.04.00	126
65	통일	경상남도민족자주통일협의회 사건	1961.02.00~05.16	128
66	통일	6 · 10 남북청년학생회담개최 투쟁	1988.05.01~06.10	129
67	통일	8 · 15민족축전 기념행사	1989.08.12~15	130

2. 단체 항목 목록

연번	부 문	단 체 명	창립일	게재면
1	연합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1988.12.03	133
2	연합	부산민주시민협의회	1985.00.00	134
3	연합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9.08.28	135
4	청년학생	민주민족청년동맹	1960.06.12	138
5	청년학생	부산민주청년회	1988.05.29	139
6	청년학생	사랑 공화국(도깨비 집)	1978.03.00	140
7	청년학생	한얼	1969.12.00	141
8	노동	부산노동단체협의회	1989.04.01	143
9	노동	부산노동자연합	1989.04.16	144
10	노동	부산지역 노조연합회	1988.00.00	145
11	노동	부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	1989.09.30	145
12	종교계	부산기독교인권위원회	1984.00.00	147
13	종교계	부산기독교청년회(YMCA)	1945.00.00	147
14	종교계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YWCA)	1946.00.00	149
15	종교계	진주기독청년회	1947.03.15	150
16	종교계	진주여자기독교청년회	1978.06.23	151
17	종교계	천주교정의구현 부산교구사제단	1974.00.00	153
18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1989.05.28	155
19	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울주지회	1989.05.28	157
20	문화예술	민족문화협회	1954.00.00	159
21	문화예술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1989.03.28	159
22	인권	인권위원회 부산지부	1984.00.00	161
23	인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1985.12.12	161
24	통일	경남노인회	1960.04.00	163
25	통일	민족자주통일경상남도협의회	1961.04.15	163

연번	부 문	단 체 명	창립일	게재면
26	시민	부산흥사단	1963.10.05	165
27	시민	진주흥사단	1967.10.15	165
28	환경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1991.09.25	167
29	환경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1989.00.00	168
30	환경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1984.00.00	169
31	보건의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경남지부	1989.00.00	171
32	보건의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경지부	1989.00.00	172
33	보건의료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일꾼회	1991.08.00	174

Ⅰ. 사건 항목 기초조사

1. 연합운동

<개요>

본 보고서에서 '연합운동'이라 함은 세 가지 이상의 부문운동이 공통된 목표 아래 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결합되어 벌어진 경우로서, 주로 모든 운동세력의 대동참여가 요구되는 급박하고 비상한 국면의 대규모 시위 및 항쟁사건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4월항쟁이나 6월항쟁, 1991년 5월투쟁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대체로 청년학생운동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정치운동(정당), 학술운동(교수), 노동운동, 종교계운동, 통일운동 등이 함께 결부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현대 한국 정치변동의 역사는 민주화를 향한 고난의 행진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 정치변동의 역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억압적 독재정권의 권력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는 대규모 항쟁으로 민중들이 응징해 온 역사이고, 이는 곧 '4월혁명-부마항쟁-6월항쟁'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민주항쟁에 의한 민주화의 역사인 것이다. 부산·경남지역의 역사적 자산은 바로 이와 같은 한국 민주항쟁사와 함께 하는 것이며, 독재권력에 대한 부산·경남 지역민의 항쟁사는 한국 민주항쟁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민주항쟁이 독재정권을 직접 패퇴시키거나(4월혁명/6월항쟁), 독재권력 붕괴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을(부마항쟁) 때마다, 그 항거에는 어김없이 부산·경남지역의 대규모 참가와 결정적 공헌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부산·경남지역의 연합운동은 전국의 연합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여 왔다. 전국적으로 혹은 중앙에서 발생한 대규모 항쟁사건이 벌어진 시기에는 부산·경남지역의 대대적 참여가 항상 함께해 왔던 것이다. 4월항쟁 시기의 부산 3·4월항쟁과 마산3·15의거, 그리고 6월항쟁과 1991년 5월투쟁 등이 그러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의 18년 철권통치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마침내 10·26정변의 도화선이 되게 했던 부마항쟁의 경우처럼, 부산·경남지역의 운동사는 다른 지역이나 중앙과 무관하게 일어난 '외로운' 항쟁 또한 포함하고 있다.

<부산 3·4월항쟁>과 <마산 3·15의거>는 1960년 제4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과 자유당이 저질렀던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행위에 대한 항거운동이었다. <부마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폭력적 야당탄압(신민당 김영삼 총재의 국회의원 제명)과 급전직하로 곤두박질하던 당시 지역 경제상황이 맞물리어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민중항쟁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의 철권통치에 대한 정당성에 회의를 느끼며 박정희를 피살한 10·26정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로써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또한 <6월항쟁>과 <1991년 5월투쟁>은 각각 전두환 및 노태우 군사정권의 폭력적 통치행위에 항거하여 궐기한 대규모 시민항쟁이었다. 6월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대통령 전두환의 4·13호헌조치에 격분한 시민들이 한 달 가까이 끈질기게 투쟁한 조직적 항쟁이었으며, 1991년 5월투쟁 또한 전경의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살해된 강경대군 사망과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위원장 의문사 사건을 계기로 한 달 이상이나 지속된 시민들의 연합항쟁이었다.

A1 [사건명] **부산 3·4월항쟁**

A2 [사건 일시] 1960.03.07~04.27

A3 [사건 배경] 1960년 자유당의 부정선거는 선거운동기간부터 이미 극렬하게 자행되고 있었다. 중고교생들이 야당인 민주당의 선거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강행된 일요일 등교로부터 촉발된 대구 2·28사건은 부산의 중고생들에게도 곧바로 영향을 미쳐 자유당의 폭거에 항거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과 열망을 자극하게 되었다. 그 결과 3·15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1960년 3월에 들어서자 부산의 고교생들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A4 [전개 과정]

1960.03.10 부산시 동구청 지하의 곳곳에 많은 삐라 살포

1960.03.12 해동고등학생 130여명이 광복동에서 시위

1960.03.13 밤에 동래고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고 부산상고, 동성고, 혜화여고, 데레사 여고 학생 등 3백여 명이 서면 광무교 다리 밑에 집결하여 데모를 시도

1960.03.14 범내골 로터리에서 동래고, 부산상고, 항도고, 혜화여고, 영남상고, 데레사여고 등 북부산지구 학생들 7백~8백여 명이 모여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데모

1960.03.15 자유당이 총체적인 3·15선거부정을 저지르고, 마산에서는 선거당일 '3·15의거'가 발단하여 대규모 '3·4월 항쟁'의 도화선이 됨

1960.03.24 부산고생, 아침 9시경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돌연 삐라를 뿌리며 정문으로 또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가두시위

1960.03.25 상오9시 20분 시내 전포동 소재 동성고등학생 약 250명은 약 1시간 20분에 걸친 데모, 동성중학생 150여명이 상오 9시 40분경 스크럼을 짜고 범천동 광무교에서 시내방향으로 전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좌절

1960.04.09 민주당 경남도당 주최로 도당 건물 앞에서 도당 부위원장 崔泳謹의 '3·15는 불법이며 무효이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한 후 시위 행진

1960.04.18 동래고등학교생 등 부산 각지에서는 부정선거 규탄데모를 대대적으로 전개(동래고 4·18데모)

1960.04.19 민주당 부산시 동구을구당에서는 19일 상오 10시부터 당원 약 300명이 불법선거규탄 및 마산사건 조속수습을 부르짖는 시위를 계획

1960.04.19 부산 동아대생을 비롯한 경남공고생 등 2만 여명이 시위를 전개, 부산상고 학생들은 학교를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 때문에 교정에서 연좌시위, 좌천동에 있는 금성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위, 부산 데레사 여중고 학생 2천여명도 경남공고학생 일부와 함께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동포여 일어나라', '경찰은 마산사건의 책임을 져라'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 파출소를 투석으로 파괴하였는데, 이때 경찰의 발포로 경남공고생 姜壽永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14:00 부산시내를 소용돌이친 데모 대열은 하오 2시경 시내 범일동 자성대 파출소 앞에서의 경찰발포로 수명의 희생자를 낸 후부터 격분의 노도로 변하였다.

15:00 결국 부산진경찰서앞 로타리에서 총동원된 경찰화력 앞에 6명의 피살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피의 참극을 빚어내고 말았다. 각층시민들이 합류된 약 3천명의 데모군중은 돌만이 유일의 무기였지만 부산진서를 일시 점거하여 경찰서 3층 건물들을 완전파괴하고 서 앞에 세워진 경찰 찦차 두 대와 소방차한대 및 증원무장경찰을 싣고 오던 트럭까지도 불사르고 퇴각, 인근건물과 넓은 로타리를 빈틈없이 메우면서 경찰의 집단사격 속에서도 분산되지 않고 약 한 시간 동안이나 이와 대결하였다.

17:00 17시를 기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본격적인 검거가 이어졌다.

04.20 상오 10시 현재 동부산, 부산진 두 경찰서에 연행된 인원은 189명(부산진서 162명, 동부산서 27명). 계엄하에서도 독재정권에 대한 규탄시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경찰은 최루탄과 위험사격을 하자 이들은 다시 흩어지면서 이웃에 있는 부산소방서에도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했다.

1960.04.20 전일의 계엄령 선포로 말미암아 500여명의 동아대 학생들이 교문밖에 집결한 채 선언문 낭독과 결의문 채택은 계엄령 해제까지 연기키로 함.

1960.04.26 서울지역의 교수들의 시위에 호응하여 부산의 교수단 100여명도 4월 26일 시위에 들어갔다. 부산대, 동아대 등에 재직하고 있던 이들 교수들은 부산대 의과대학 정문 앞에 집결하여 우선 서울 교수단이 채택한 시국선언문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결의하고, 부산대 金鍾出 교수와 동아대 朴熙永 교수가 각각 자루를 치켜든 '부산 대학교수단'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앞장세워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해산

1960.04.27 군중의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이 시위 군중들은 텅 빈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하여 중요서류들을 탈취하고 나아가 건물을 파괴하거나 방화하기도 하였다.

A5 [사건 내용] 부산에서 고등학생 중심으로 20여명이 공명선거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3월 10일 밤 부산시 동구청 지하의 곳곳에 많은 삐라가 살포되었는데 모두가 '민권수호학생투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된 것인데 내용은 "학원에 자유를 달라, 학도들이여 피로써 민주주의를 사수하자, 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이 되자, 우리세대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부정과 항쟁하자."는 등의 내용이었다. 3월 12일에는 해동고등학생 130여명이 광복동에서 시위를 하였으나 경찰의 제지를 당한 후 12명이 연행되었다. 3월 13일 밤에는 동래고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고 부산상고, 동성고, 혜화여고, 데레사 여고 학생 등 3백여 명이 광무교 다리 밑에 집결하여 데모를 감행하려 하다가 미리 눈치를 챈 정사복 경찰에 의해 해산 당했다. 선거를 하루

앞둔 3월 14일도 범내골 로터리에서 동래고, 부산상고, 항도고, 혜화여고, 영남상고, 테레사여고 등 북부산지구 학생들 7백~8백여 명이 모여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데모를 벌이다가 정사복 경찰의 무력에 수많은 학생들이 구타당하였고, 여학생 20여 명과 동래고등학생 文東玉 외 다수가 연행 당한 채 데모대는 뿔뿔이 흩어졌다. 3·15부정선거가 끝난 사흘 후인 3월 18일 이후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규탄시위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부산고등학교 1, 2년 학생 약 900명은 3월 24일 아침 9시경 조회시간을 이용하여 돌연 삐라를 뿌리며 정문으로 또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노도와 같이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다. 3월 25일 상오9시 20분 시내 전포동 소재 동성고등학생 250여명은 약 1시간 20분에 걸친 데모를 했다. 이들은 학교 정문을 나와 간선도로를 따라 범천동 구름다리를 넘고 교통부 앞을 거쳐 좌천동 입구에서 경찰의 출동으로 해산되었다. 같은 날 동성중학생 150여명이 상오 9시 40분경 스크럼을 짜고 범천동 광무교에서 시내방향으로 전진하다가 경찰에 의해 좌절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고등학생의 시위가 중학생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구호나 전단이 24일의 부산고교의 삐라나 구호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차차 상호 연계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은 “동포여!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 일어나라,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 하라, 경찰은 학생 학살사건을 책임져라. 방관자는 비겁자다, 평화적 시위는 우리의 권리다, 경찰은 시위학생을 감금하지 마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저녁에는 전포동 일대에서 경남공고, 혜화여자고교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은 개학날인 4월 6일을 기하여 동교 교사 집단해직의 학교처사에 항의하는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경남도당 주최로 4월 9일 도당 건물 앞에서 도당 부위원장 崔泳謹의 ‘3·15는 불법이며 무효이다’라는 선언문을 낭독한 후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4월 18일에는 동래고등학교생 등 부산 각지에서는 부정선거 규탄데모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에 앞서 동래고 학생들은 4월 15일에는 경찰의 학원 출입과 감시에 반발하고 2학년 학생들이 데모를 하려다 학교 당국의 만류로 해산하였다. 4월 18일 교문을 뛰쳐나온 일단의 학생들은 동래 거리를 달려 동래여고 앞길을 통해 명륜동 사거리, 온천장으로 향해 달려 나가며 전단을 뿌리고 부정 선거를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외쳤다. 데모대 제1진이 교문을 빠져 나간 후 운동장에 갇히게 된 1천여 학생들은 동편 담에 어께를 대고 힘을 모아 밀어 붙여 담을 무너뜨리고 철조망을 뛰어 넘고 나와 모두 거리에 나섰던 관계로 데모대 제 1진이 학교에 강제 수용되어 왔을 때는 학교가 텅텅 비어 있었다. 데모대가 서면 굴다리 밑에 이르렀을 때는 일백여 명의 무장 경찰관이 트럭, 소방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학생들은 방향을 바꾸어 철길로 올라서 치닫기 시작하여 경찰 저지선을 돌아서 전진해 나갔다. 11시 15분 범일동 삼일극장 앞에는 무수한 차량으로 5,6겹 저지선을 쳐 도로를 차단하고 수 백 명의 경찰관이 차량과 차량 사이, 그리고 바퀴 옆 차량 밑에 엎드려 총구를 겨냥하고 있었다. 데모대 학생들은

경찰의 저지선 앞에 모두 주저앉아 버렸으므로 경찰은 간곡히 학교로 돌아가기를 권유하기도 하고 경찰봉으로 위협도 해보고 최루탄을 발사해 보았으나 학생들은 더욱 굳게 짜고 앉아서 일어설 줄 몰랐다. 다음 날 동래고교 2학년 蔣梯模는 부산진 경찰서 앞 광장에서 시민 학생들이 일으킨 데모대에 가담했다가 경찰이 쏜 흉탄에 맞아 오른쪽 다리에 관통상을 입기도 하였다. 민주당 부산시 동구 을구당에서는 19일 상오 10시부터 당원 약 300명이 불법선거규탄 및 마산사건 조속수습을 부르짖는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를 동부산서에 18일 동당 조직부장 金鎭浩, 총무부장 金鎭斗 양씨가 제출했다. 데모는 좌천동 동당 사무실에서 집합, 부산진시장 앞에서 조선방직을 거쳐 북부산 소방서 앞에서 해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4월 19일 부산 동아대생을 비롯한 경남공업고교생을 비롯한 2만 여명이 시위를 전개했다.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10시 25분부터 서면에 있는 경남공고학생 약 1,600명이 데모를 감행 학교를 출발 경남모직을 둘러 서면 로타리 부산진 경찰서를 지나 시내쪽으로 향하다가 10시 50분경 제일 제당앞 광무교 위에서 경찰대와 충돌 일단 해산되었다. 부산상고 학생들은 학교를 철통같이 지키는 경찰 때문에 교정에서 연좌시위하였으며 좌천동에 있는 금성고등학교 학생들도 시위에 나섰다. 부산 데레사 여중고 학생 2천여 명도 경남공고학생 일부와 함께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동포여 일어나라', '경찰은 마산사건의 책임을 져라'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 파출소를 투석으로 파괴하였는데 이 때 경찰의 발포로 경남공고생 姜壽永은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동아대에서도 가두시위를 계획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것은 선두에 선 학생들을 경찰들이 납치하는 등 일부 교수들의 강압적인 설복으로 좌절하고 말았다. 동아대에서는 당시 학생위원장 徐錫宰와 정치학과 학생장 朴寬用 외 많은 뜻있는 학생들이 모여 시위계획을 세우고 선언문까지 만들어 놓았다. 그 다음날인 20일 전일의 계엄령 선포로 말미암아 500여명의 동아대 학생들이 교문밖에 집결한 채 선언문 낭독과 결의문 채택은 계엄령이 해제될 때까지 연기하였다. 이날 일부 학생들은 피를 보러 가자는 극한적인 투쟁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부산대에서는 4월 18일 오후 2시 법대생들은 본관 210 강의실에서, 상대생들은 본관 310 강의실에서 각각 모여서 정·부통령 선거부정에 항의하는 농성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약 2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본관 하층 원형 강당에 함계 모여 입구에 의자를 쌓아 올려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처럼 철야 농성을 벌인 이유는, 전국적 거시일정에 맞추어 다음날인 4월 19일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자극하여 거교적 봉기를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학당국의 장악하에 있던 학도호국단 간부들의 비협조로 다른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그 결과 4·19거사 당일 부산대학교에서는 평상시처럼 수업이 진행되었고 전날밤부터 계속된 농성은 강제로 해산당하고 말았다. 4월 19일 부산시내를 소용돌이친 데모 대열은 하오 2시경 시내 범일동 자성대 파출소 앞에서의 경찰발포로 수명의 희생자를 낸 후부터 격분의 노도로 변하였다. 이날 하오 3시경에는 드디어 부

산진경찰서앞 로타리에서 총동원된 경찰화력 앞에 6명의 피살자와 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피의 참극을 빚어내고 말았다. 각층시민들이 합류된 약 3천명의 데모군중은 돌만이 유일의 무기였지만 부산진서를 일시 점거하여 경찰서 3층 건물들을 완전파괴하고 서앞에 세워진 경찰 찦차 두 대와 소방차한대 및 증원무장경찰을 싣고 오던 트럭까지도 불사르고 퇴각, 인근건물과 넓은 로타리를 빈틈없이 메우면서 경찰의 집단사격 속에서도 분산되지 않고 약 한 시간 동안이나 이와 대결하였다. 19일 하오 5시를 기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도시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본격적인 검거가 이어졌다. 부산진서에서는 19일 밤부터 4·19부산사건 난동 용의자의 검거에 착수하여 20일 상오 10시 현재 동부산, 부산진 두 경찰서에 연행된 인원은 189명이었다(부산진서 162명, 동부산서 27명). 계엄하에서도 독재정권에 대한 규탄시위는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경찰은 최루탄과 위협사격을 하자 이들은 다시 흩어지면서 이웃에 있는 부산소방서에도 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괴했다. 서울지역의 교수들의 시위에 호응하여 부산의 교수단 100여명도 4월 26일 시위에 들어갔다. 부산대, 동아대 등에 재직하고 있던 이들 교수들은 부산대 의과대학 정문 앞에 집결하여 우선 서울 교수단이 채택한 시국선언문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결의하고, 부산대 金鍾出 교수와 동아대 朴熙永 교수가 각각 자루를 치켜든 '부산 대학교수단'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앞장세워 시가행진에 들어갔다. 이들 교수들은 "자유·민주 양당 등 기성정당을 모두 해체하라", "학원에 자유를 달라". "4·19학생희생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여 토성동, 광복동, 중앙동, 대청동을 거쳐 용두산 공원(당시 우남공원)으로 올라가서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하고 해산하였다. 한편 1960년 4월 26일 오후 1시 30분 경, 동아대학생 300여명과 100여명의 교수들은 자유당정권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시위대는 3대의 찦차에 확성기를 장치하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격문과 구호로서 수많은 시민의 환호를 받았다. 부산지역에서는 4·19당일보다는 27일, 28일 군중의 시위가 절정에 달했다. 이 시위 군중들은 텅빈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하여 중요서류들을 탈취하고 나아가 건물을 파괴하거나 방화하기도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자 4월 27일 부산대 학도호국단의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시내 일간신문 3사의 후원을 얻어 국제신보 사옥에 본부를 둔 '부산학생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경찰을 대신하여 치안유지에 앞장서면서 시민들의 질서회복을 호소하였고, 또 4·19부상학생들을 돕기 위해 구호반 명의로 가두모금에 나섰다.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다. 학생들은 국회해산과 즉각 총선 실시, 발포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의 시위는 5월 초순 무렵까지 이어졌다.

A6 [관계 인물] 김종출, 박희영, 서석재, 강수영, 장제모

A7 [관계 단체] 민권수호학생투쟁위원회, 부산학생연합회

A8 [관계 자료]

[부경-청학1] <동포에게 호소하는 글>(4293.3.24 부산고등학생 일동)

[부경-청학2] <선서문>(4293.4.18 동래고등학교 학생 일동)

[부경-청학3] <선언문>(1960.4.26 동아대학교 학생일동)

A9 [관련 사건] 마산3 · 15의거

A1 [사건명] **마산 3.15의거**

A2 [사건 일시] 1960.3.15~4.13

A3 [사건 배경] 항쟁의 역사적 배경은 분단을 고착화시킨 이승만정권의 반민주 · 반민족적 성격에 있었다. 이승만 정권은 8 · 15 이후 특권층의 친일 인사들에게 귀속재산을 불하한 것에 바탕한 매판적 기업의 경제체제와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존한 체제였다. 1958년 이후 원조에서 차관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바뀌어 나감에 따라, 소득 불평등과 함께 경기의 급격한 하강, 독재와 부패의 집중적 발생 등으로 정권은 경제적 위기에 봉착한다. 여기서 1958년 권력의 폭력적 지배도구인 보안법의 제정과 나아가 1960년의 전국적 3 · 15부정선거로 정권의 유지를 획책함으로써 마산항쟁이 발발하게 된다. 마산 항쟁은 마산의 사회경제 모순과 정경유착에도 직접적으로 기인하였다. 마산은 8 · 15 이후의 잘못된 적산불하에서 시작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가장 심한 지역의 하나였다. 예를 들어 마산 경제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던 동양주정의 운영권 확보를 둘러싼 정경유착의 전개가 그것이었다. 민주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을 바꾼 허윤수 의원이 마산 시민의 정치적 선택을 팔아 동양주정을 인수함으로써, 시민들의 배신감을 사게 되고, 항쟁 발발의 직접적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물론 50년대 후반 마산의 높은 실업률도 주요 배경이었다.

A4 [전개 과정]

1960.03.15 제4대 대통령, 제5대 부통령 선거. 최대의 부정선거 실시됨. 15일부터 16일까지 마산시민의 부정선거규탄 항쟁 시위

1960.03.17 제1차 마산항쟁 219명 연행, 학생들에게 금족령, 통금 7시부터 시행.

1960.03.19 제1차 마산항쟁 사망자 16명 확인.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담화 발표. 지각없는 마산시민의 난동으로 규정

1960.03.24 국회 마산항쟁 조사활동 개시

1960.03.26 제1차 마산항쟁 발포 경관 구속

1960.04.11 제1차 마산항쟁 당시 희생자 김주열 시체 인양. 제2차 마산항쟁이 13일까지 격렬하게 계속 진행

1960.04.16 마산시민의 항쟁에 호응하여 진주시와 진양군에서 학생데모. 이승만 대통령 마산사태에 대하여 공산당 조종설 담화 발표. 항쟁 관련자 67명 정식 입건

1960.04.18 고려대학교 학생 데모 감행

1960.04.19 전국에서 대학생, 고등학생 수십만이 총궐기

A5 [사건 내용] 1960년의 3월과 4월의 2차례에 걸친 마산 항쟁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3월 15일 시위의 발단은 극심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한 민주당 마산시당부의 선거 포기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당일 오후에 최초로 가두 진출하지만 일단 실패로 끝난다. 그러다가 밤의 시위로 이어지면서 시청 부근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직 혹은 무산자 시민과 학생들의 항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지휘부 없이 시청과 남성동파출소와 북마산파출소를 대상으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자정 무렵 끝이 난다. 경찰들은 시민들의 시위를 좌익 세력의 조직적 폭동에 의한 것으로 조작하려 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사건 수습 노력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4월의 2차 시위는 이미 예비되었던 것이다. 4월의 제2차 항쟁의 발단은 주지하듯이 3월 15일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김주열의 시신의 발견과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많은 시민들이 시신이 안치된 도립병원으로 몰려들어 항의하면서부터였다. 오후 6시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위에서 군중들은 시청, 창원군청, 마산경찰서와 무기고, 5개 파출소, 자유당 사무실, 서울신문지국, 의원 집, 마산시장 집, 동양주정회사 사무실과 공장 건물과 유리창 등을 파손하였다. 4월 12일에는 많은 학생들이 선두에 서면서 하루 종일 계속되었는데, 노인들까지 데모 행렬에 나서기도 하였다. 비가 오는 4월 13일에도 해인대 학생을 필두로 5~6천 명이 시위를 하였다. 2차 시위 때는 부산에서 모여든 데모대의 일부가 합류하기도 하였다. 2차 의거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생활이 어려운 많은 마산의 민중들이 구속 연행되었다. 2차 시위는 1차 때보다 그 규모나 싸움의 격렬성과 시민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민중 항쟁의 성격을 띠었다. 마산 시민들의 항쟁 정신은 전국적으로 파급되고 확산되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민주당 마산시 지부

A8 [관계 자료]

196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부산일보, 국제신보, 동아일보 등 신문 자료.

홍중조 엮음, 『3.15의거』1992

3.15의거기념사업회,『삼일오의거사』2004

A9 [관련사건] 4.19혁명

A1 [사건명] **부마항쟁**

A2 [사건 일시] 1979.10.16~20

A3 [사건 배경] 부마항쟁의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배경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1)반민중적 한국경제의 모순이 야기한 현상 형태로서의 민중

빈곤 및 심화된 빈부격차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민중적 울분과 (2)유신정권의 전반적 억압성에 장기간 노출된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정부적 불만심리 등을 그 구조적 배경으로 하고, (3)'79년 들어 특히 더욱 악화된 부산 및 인근 마산 지역의 경제상황과 (4) YH사건 및 김영삼 제명이라는 '79년의 잇따른 반동적 탄압사태를 직접적 계기로 삼아, (5)그에 분노한 부산·마산의 민중들이 학생들의 가두시위와 결합함으로써 폭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었다.

A4 [전개 과정]

1979.10.16 오전, 부산대 교내시위

1979.10.16 오후부터 학생들 시가지 진출

1979.10.16 ~18일까지 부산항쟁

1979.10.18 오후, 마산 경남대생 교내시위부터 시작하여 곧 시가지로 진출

1979.10.18 ~20일까지 마산항쟁

A5 [사건 내용]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의 학생・시민들에 의해서 4・19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먼저 부산에서는 10월 16일 오전 10에 시작된 부산대생들의 교내시위가 순식간에 4천여 명으로 불어나면서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이 오후부터 부산시청 앞과 광복동, 남포동 일대에 집결하여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부르짖게 되었다. 오후 늦게는 동아대생들의 합류로 더욱 확대된 시위대열이 국제시장 일대를 게릴라식으로 종횡무진 누비고 다녔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고 경찰의 진압작전을 방해하며 쫓기는 학생을 숨겨주는가 하면, 빵과 음료수, 담배, 물수건 등을 던져주며 열렬히 호응하고 시위대를 격려하였다. 저녁 7시 경에는 5만~7만 여명의 인파가 부영극장 앞 간선도로를 꽉 메운 채 시위의 물결을 이루었다. 퇴근길의 회사원과 노동자, 상인, 접객업소 종업원, 재수생, 교복 입은 고등학생까지 가세하였다. 밤이 되어 시민들이 합세하자 시위는 폭력투쟁의 양상으로 바뀌어 갔다. 파출소, 어용신문과 방송사, 경찰차에 투석하고 방화하는 등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격렬한 시위가 전개되었다. 부산대가 긴급휴교에 들어간 17일에도 시위는 비슷하게 전개되어 중구, 서구, 동구 지역의 거의 모든 파출소와 경찰서, 공공기관이 공격당했다. 이틀간의 격렬한 시위로 경찰차량 6대가 전소되고 12대가 파손되었으며, 21개소의 파출소가 불타거나 파괴되었다. KBS, MBC, 부산일보, 경남도청, 그리고 TBC-TV 취재차량이 투석당하고 피해를 입었다. 당시 부산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부상자는 16일 하루 동안에만 학생 5명, 일반시민 10명, 경찰 95명 등 도합 110명으로서 그 가운데 중상자는 18명이었다. 그러나 시민들로선 자진신고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침내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일원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전방 공수부대 2개 여단 5천여 명이 부산에 투입되었다. 그러자 시위는 마산으로 번져갔다. 10월 18일 경남대 학생 1천여 명이 기동 경찰 300여 명과 대치하다 투석전을 벌였고, 3・15 의거탑에서 1천여 명이 스크럼을 짜서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 "언

론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는 등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다. 저녁부터는 학생들과 시민 수천 명이 시내 중심가를 메우고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는 대규모 군중 시위를 전개하였다. 마산에서의 시위는 한층 더 폭력적으로 격화되어갔다.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어김없이 파괴되었다. 이에 인근의 창원, 진해, 함안 등지에서 경찰 병력이 넘어오고 2개 중대의 군인까지 투입되어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경남대는 18일부터 무기한 휴교에 들어갔으나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의 경찰 차량 방화, 파출소·언론기관·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대한 파괴 행위가 계속되었다. 대학생과 일부 고교생은 물론, 노동자, 폭력배, 구두닦이, 접객업소 종업원 등 도시 하층민들이 대거 가세하여 경찰, 군인과 충돌하면서 격렬한 시위를 벌여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마산의 항쟁이 수출자유지역 노동자와 고교생까지 합세,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10월 20일 0시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한다. 나흘간의 봉기를 통하여 부산에서 1,058명, 마산에서 505명 등 총 1,563명이 연행되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학생 37명, 일반인 50명) 중 단순가담자 67명은 소가 취하되었고, 20명(학생7명, 일반인13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반 검찰에 송치된 31명(학생26명, 일반인5)은 전원이 소가 취하되었고, 651명(이중 208명은 부산 봉기 학생)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이 부마항쟁의 발발과 더불어 10월 16일 이화여대 시위, 19일 서울대 및 전남대 시위, 24일 계명대 시위 등 학생들의 반독재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는데, 이는 권력내부의 암투와 맞물리어 그 암투의 뇌관을 터뜨리게 함으로써 마침내 10·26사태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다. 즉 부마항쟁은 박정희의 18년 철권통치를 몰락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A6 [관계 인물] 정광민, 이진걸, 신재식, 이호철, 노재열, 김종세 등(부산), 정인권, 정성기, 최갑순, 옥정애 등(마산)

A7 [관계 단체] 부산대 사랑공화국(지하 이념써클), 아카데미, 성아, 전통예술연구회, 경제사학회, 동녘, 영목 등 여러 공개·비공개 써클 회원들이 부산대 교내시위의 시작 단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시위 열기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

A8 [관계 자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A9 [관련 사건] 10·26정변

A1 [사건명] **6월항쟁**

A2 [사건 일시] 1987.06.10~29

A3 [사건 배경] 1987년 4월 전두환 군사독재권력은 자신의 지배를 공고화하고자 ‘호헌’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군사독재권력의 반민주적인 집권연장 기도에 반대해 전국적으로

청년학생과 시민 수십, 수백만 명이 전민중적인 항쟁을 통해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독재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항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6월 민중항쟁의 시작이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직선제 개헌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와 87년 1월에 있었던 서울대생 박종철 군의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조작이 드러나면서 독재권력의 폭력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오직 최루탄과 백골단으로 무자비한 탄압만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독재정권이 연세대생 이한열군의 최루탄 희생사건까지 만들어내게 되면서, 비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기 시작한 시민과 청년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민중적인 항쟁을 약 20여 일간에 걸쳐서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의 18개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펼치게 된 것이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 부마항쟁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부산지역은 4월 이후 각 대학에서 계속되어온 학내 민주화운동 등으로 학생운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6 · 10대회'를 맞이하였다. 6 · 10대회를 시민들의 호응 속에서 치러낸 이후 자신감을 얻은 각 대학들이 연일 교내집회를 열고 가두진출을 시도하여 치열한 가두투쟁을 전개하면서 15일 이후에는 시민들의 참여도 눈에 띠게 확대되어 자정 이후까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학생과 시민들의 열기는 계속 가열되어 17일 자정을 지난 후 택시기사들이 경적시위를 하면서 투쟁대열에 동참하면서 18, 19일까지 경찰력은 거의 마비되었고 대중들의 정치의식은 대중집회 등을 통해 고양되어 갔다. 2주일이 넘는 투쟁과정에서 시민들은 국민운동본부와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 호응하였다. 17일부터 22일까지 계속된 가톨릭센터 농성자들에 대한 고등학생, 시민들의 열렬한 성원과 버스, 택시기사들의 협조 등은 지역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상공단 노동자들과 시내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가두투쟁 참여도 주목할 점이었다. 이러한 민중적인 항쟁의 결과 집권당인 민정당으로부터 대통령제 직선제개헌 등 민주화조치를 약속하는 8개항의 '6 · 29선언'을 끌어냈다.

A4 [전개 과정]

1987.01.13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발생

1987.02.07 박종철군 추모대회 개최

1987.03.03 고문추방을 위한 민주화 대행진

1987.05.18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사건 은폐, 왜곡에 대한 성명서

1987.06.09 연세대생 1,000여 명의 시위 도중 이한열군이 경찰의 직격 최루탄에 피격

1987.06.10 국민대회 개최, 서울 명동성당 농성. 부산의 대회장인 대각사 주변을 경찰이 원천봉쇄, 부산시민과 학생 수만 명은 오후 5시경부터 "독재타도 · 민주헌법쟁취" 등을 외치며 산발적인 시위

15:30 부산대생 3백여 명이 교내에서 '구국출정식'을 가진 것을 비롯, 부산대

의,치대, 동아대, 부산산업대, 외국어대, 동의대 등 대학생 수 만명이 6·10대회 참가를 결의하는 출정식 거행.

17:00 1차 저지선인 광복동 로얄호텔 앞(대각사에서 1백여 미터)으로 시민,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 오후 5시 30분경 시민, 학생수가 5백여 명으로 늘어나자 경찰이 최루탄 발사, 시위대 시청 쪽으로 밀림.

17:20 부산대 학생들의 집결지인 부산의대에서 학생들이 투석과 함께 시내진출을 시도했으나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시내에서 재집결 약속 후 해산.

17:30 창선동 뒷골목과 남포동, 국제시장 입구에 모여 있던 시위군중 2-3백여 명, 대각사쪽으로 진출 시도, 경찰과 대치. 부산역에 집합한 시위대 한차례 투석전 후 곧 대열을 정비하여 KBS로 진격. KBS 투석전에서 전경 1개 중대 도망, 그러나 곧 경찰이 최루탄, 사과탄 등을 무차별 난사하여 시위대가 후퇴하던 중 '백골단'의 출현으로 다수가 부상하고 29명 연행됨.

17:40 부영극장 앞에서 운집한 시민과 경찰의 몸싸움. 학생, 시민들 '흔들리지 않게' 노래와 "호헌철폐·독재타도" 구호를 외침. 경찰의 최루탄 발사로 학생, 시민 자갈치시장 쪽으로 집결, 시위대 형성.

18:00 국기 하강식에 맞춰 대각사 주변 곳곳에서 시위 군중들 애국가 합창. 충무로 신천지백화점 옆 골목에서 1천여 시민, 학생들 "애국시민 단결하자"는 플래카드(길이 6미터, 너비 60센티미터)를 들고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 등을 외치며 시위. 로얄호텔 주변 광복로 입구에서 5백여 명(부산대), 소형 태극기를 흔들며 가두행진.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에 쫓겨 중앙동으로 진입, 타워호텔에서 전열정비 후 MBC로. 연도의 시민들 함께 구호 외치며 박수로 호응. 아카데미극장 앞 시민들 부영극장에서 최루가스를 피해온 시민들과 합류, 1천여명 시위대를 형성, 자갈치시장으로 이동. 자갈치시장 시위대 곧 1천 5백여 명으로 증가. '애국시민 단결하여 사기정권 몰아내자' 등 플래카드와 노래, 구호를 외치며 시청 앞으로 행진, 전경의 최루탄 난사에 치열한 투석전으로 맞섬. 충무동 로터리로 밀려남. 이때부터 3~5백 명씩 대오를 형성한 시위 군중들은 경찰 저지선 밖 충무동, 대청동, 남포동, 시청 앞, 중앙동 등 간선도로를 따라 가두행진, 시위 벌임.

19:00 자갈치시장에서 충무동 로터리로 밀려난 시위대, 다시 남포동 대로로 나와 '은폐조작 웬 말이냐 군부독재 타도하자'는 플래카드를 앞세워 시위. 그러나 부영극장에서 경찰에 밀려 다시 자갈치시장 안으로 밀려남. 이때부터 자갈치시장 골목마다 시위대가 형성, 계속 산발적인 시위를 벌임.

19:20 학생 3백여 명(대청로에서 부산역 방면으로 이동 중), 민정당 부산 제1지구당 및 파출소에 투석시위. 이들은 이어 19: 45분경 KBS 부산지사에도 투석.

20:05 가톨릭센터 앞 시민 5백여 명, 시위대 형성, 미문화원 진출하려다 경찰의 최루탄 난사로 해산.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가톨릭센터 앞에 모여 버스에서 하차한 시민들과 함께 4백여 명 연좌시위, 최루탄 난사와 '백골단' 투입으로 일부 시민들 센터로 피신, 전경들 센터 안으로 최루탄 무차별 발사.

20:10 충무동 국제시장 쪽 8백여 시위군중, 보수동 로터리 신호대를 점거하고 연좌시위.

20:30 산개한 자갈치시장, 충무동 로터리, 가톨릭센터의 시위대 보수동로터리에서 1천여 명 집결. 30분간 격렬한 투석전과 연좌시위를 하면서 전경 1개 소대 무장해제, 전경차 1대 탈취. 보수파출소 입구에 걸려있는 상징물 불태움. 시청, 아카데미극장의 병력이 증가된 가운데 25분경 사과탄, 최루탄의 무차별 발사. 시위대는 대신동 로터리로 밀려남.

20:50 부산역 앞에 1천여 명이 전경과 대치하면서 파출소 1개를 완전히 전소시키고, 이어서 민정당 사무실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전소. 이어 법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2천여 명의 시위대는 KBS 앞에서 투석전을 전개하고 이 과정에서 백골단 정찰대에 의해 1백여 명의 학생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난사된 최루탄에 의해서 많은 시위자가 부상을 입었고 한 여학생은 안면에 중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이에 항의, 과격해진 시위대는 민정당 윤석순 의원 사무실에 투석하고 기동대버스 1대를 전소시키기도 하였다.

21:00 한편 광복동 거리에서는 수만의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1-3천여 명의 시위대가 무차별 난사되는 최루탄에도 흩어지지 않고 시민과 함께 시위를 하기도 하였다. 보수로터리에서 복개천을 경유한 시위대, 대신동 로터리에 집결하여 서부경찰서로 나아가려다 무장병력과 대치, 투석전으로 무차별 쏘아대는 사과탄, 최루탄에 투석전으로 맞서면서 부근의 곽정출 민정당 제2지구당 사무소의 초소격파, 격렬한 투석전 후 30여분 연좌시위. 계속 합류하는 시위대(1천 5백여 명), 10시 부영극장을 재집결지로 하고 해산.

21:10 서면로터리 부근 시위대 2백여 명,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

23:00 이후 남포동, 신창동, 중앙동, 서면 등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되었다.

1987.06.27

10:00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태춘 씨 국민운동본부장 장례식이 범일동 성당에서 거행됨. 5백여 명 참석. 장례식 후 5백여 참석자, 도로를 점거한 채 영구차를 에워싸고 문현동 로터리까지 4킬로미터를 2시간 30분 동안 침묵시위.

15:00 부산대생 1백여 명, 교내에서 '6 · 26 평화대행진 보고대회'를 가진 후 해산. 새벽 중앙동 4거리에서는 시위대가 바리케이트를 쳐 2킬로미터 구

간의 통행이 마비되고 택시 40여대가 가세, 바리케이트 역할을 대행.

1987.06.28

00:45 부산역 앞 간선도로 점거 시위대 5천여 명 방송국 점거 시도.

01:46 초량로터리~KBS 사이 도로 점거 시위대 1만여 명, KBS 기습이 저지당하자 그중 일부 일본영사관에 투석 유리창 파손.

02:50 초량로터리~KBS 사이 1만여 명 시위대 중 2천여 명은 대형트럭, 트레일러 등 10여대의 차량 탈취 후 20~30명씩 승차하고 대형태극기와 반정부 플래카드 앞세우고 시청으로 돌진. 여기에 2백여 대의 택시 합세, 시청 앞 7백여 미터까지 진출했으나 다탄두 최루탄 발사로 해산.

03:20 차량시위대 동부경찰서 부두파출소를 비롯 8개(초량 1, 2, 3, 중부경찰서 소속 남포, 부산진, 보수1동) 파출소에 방화 및 집기파손.

12:50 동의공전 등 전문대생 9백여 명 포함 2천 5백여 명의 시위대, 서면 태화쇼핑 앞, 부산진세무서 앞에서 숨바꼭질 시위.

13:45 7백여 명의 시위대 시내버스 6대에 분승, 서면로터리 진입, 가야로에서 가두시위, 20분간 교통마비.

15:55 동부 범일동 부산진시장 앞 3백여명 서면으로 진출, 재차 부산진시장 앞으로 이동 시위.

16:00 부산 가톨릭센터 농성시위대 건물옥상 등에서 구호 외치며 시위.

17:00 대학생 5백여 명 중구 보수동 로터리에서 가톨릭센터로 진출기도, 경찰과 1시간 대치, 강제해산.

17:10 1천 5백여 명 시위대, 교통차단기, 리어카 등을 밀고 서면로터리로 진입, 경찰 다탄두 최루탄 발사.

17:30 부산역에서 진출한 4백여 명의 시위대 중부서 앞에서 “비폭력” 외치며 시위벌이다 강제해산 당함.

18:50 교통부 쪽 시위대 3백여 명 범일파출소 습격, 반소.

19:00 부산역 앞 5백여 명 시위. 학생 3백명 민정당사 제2지구당 점거시도, 실패.

19:20 강태홍 부산시장 시위대 자제, 시민협조 당부 담화문 발표. 시위참가 전경, 상사로부터 구타당한 후 투신자살했다는 소문. 그 외에도 보수동 사거리(2백여 명), 서면 천우장 부근(5백여 명) 등지에서 산발적 시위.

19:30 부산상고 앞 시위대 2천여 명, 경찰과 대치, 시내버스 6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다 경찰의 다탄두탄 발 사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임. 범천동 부산은행 본점 앞 2천여 시위대 집결, 서면로터리 쪽으로 향하던 중 범천로터리에서 저지를 받고 일시 흩어짐.

19:35 부산진 세무서 앞에서 2천여 명 집결, 유인물을 뿌리며 시위, 다탄두탄 발사로 해산됨.

19:40 2만여 명으로 증가한 시위대, 서면로터리로 행진, 도로마다 시민으로

가득 차 4만여 명에 이름.

20:05 부산상고 앞에서 흩어진 시위대열 중 3백여 명 가야2동 파출소 습격, 2시간 가량 점거하고 책상 집기 등을 밖으로 꺼내 불태움.

20:45 양정동 하마정 신호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경 순찰 오토바이 3대, 시위대의 화염병에 맞아 전소.

21:30 부산역에서 학생 등 4백명, 영주동을 거쳐 가톨릭센터 앞 유엔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의 추격을 받아 2백여 명이 보수동 쪽으로 밀려 시위를 벌이다 23: 00 경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됨.

22:30 시위대 5백여 명 시내버스 7대를 앞세우고 문현로터리 쪽으로 진출

22:55 로터리 교통초소를 부수고 문현4 파출소에 투석.

22:40 가야시장 육교 밑에서 시위대 1천여 명, 시내버스, 트레일러 등 6대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노동3권 보장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과 대치, 투석전을 벌임.

23:00 가랑비가 계속 내리자 시위대가 줄어 1천 3백여 명으로 줄어 듦.

23:30 태화고무 앞 노상에서 시위대 150여 명 격렬한 시위. 이후 27일 새벽 2시까지 로터리 외곽에서 산발적인 시위 계속.

1987.06.29

02:20 초량동 YMCA 뒤편에 흩어져 있던 시위대 횃불시위, 경찰 강제해산 시키자 시위대는 초량2, 초량 1파출소 차례로 습격, 오토바이 2대 전소 및 기물파손.

04:30 밤을 세운 시위대는 청소차 탈취, 중앙로에 쓰레기 쏟아 붓고 서울에서 오는 증원 경찰력 싣기 위해 부산역으로 가던 버스 3대 습격 1대 전소, 1대 파손.

08:00 시위대 강제해산.

16:00 시민 포함 3만 5천여 명의 시위대 영주1파출소 등 파출소 3곳을 습격, 민간트럭과 소방차 탈취. 부산진구 중앙로에서 택시기사 3백여 명 3시간 40분 동안 시위. 경찰 주동혐의로 2명 구속.

16:30 서면로터리 6만여 시위 군중 운집.

18:00 중구 부평동 국제시장 지하상가 도로상에서 시민, 학생 1천 5백여 명 시위.

19:00 5만여 명의 시위대 부산시내 간선도로 3킬로미터 점거 시위. 동아대생 2천여 명 시위, 경찰과 투석전.

19:15 부산대, 부산수산대생 5백여 명 부산진 세무서 앞에서 '부산지역 애국 고교생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8절지 유인물을 인도 시민에게 뿌리며 50분간 연좌시위.

20:10 학생시민 3천여 명 부산역 앞 8차선 도로 점거 연좌농성. 시위대 2만여 명 '민주의 깃발을 드높이자'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서면로터리로 진출.

노래와 구호제창 및 연좌시위. 전경 4개 중대 시위진압 어렵다고 판단, 철수.

21:30 남포동 국제시장 부근의 시위군중 초량1파출소 남포동파출소 등 9개 파출소 방화, 집기 파손.

22:00 부산진역 앞 2만여 명 시위. 인근 주민들 음료수와 담배 건네주며 격려, 경찰의 접근 저지해 줌.

22:30 부산진시장 앞 농성 중이던 5천여 명 경찰의 다탄두 최루탄 공격으로 해산, 도중에 항만소방서 습격, 유리창 파손.

1987.06.30

07: 40 경찰, 농성 시위대를 가톨릭센터로 밀어 넣음. 하오 부산시내 10개 대학 학생 7천여 명 각각 교내서 출정식 거행. 500여명은 센터 안에 남아 농성하기로 결정, 그 후 350여명이 7일간 군사독재타도,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

13:30 시민들이 서면, 남포동 일대에 모이기 시작.

14:00 학생, 시민들 애국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시청, 남포동 국제시장, 보수동 4거리 등지에서 시위대를 형성, 행진.

15:00 국제시장 도로를 점거한 동아대생 등 1천 5백 명 시청 앞까지 진출.

15:30 부산대생 2천여 명 서면에서 대치중인 경찰에 투석. 화염병 투척 등 격렬 시위. 중앙로 교통 1시간 30분 동안 마비.

15:40 부산대생과 합류한 3천여 명 시위대 제일극장 앞 경찰의 소나기 최루탄 발사에 맞서 투석 등 격렬 시위.

16:30 중부경찰서 남포동파출소 집기 파손. 파출소 소장 등 직원 7명 중경상.

17:00 범내골 로터리. 학생 2천여 명, 한 건물 국기게양대에서 반정부 구호가 쓰인 기의 게양식 거행. 경찰 최루탄 난사, 남포동 4천여 명 해산.

20:15 중구 대청동 학생 500여명 연좌농성. 선구자, 고향의 봄 등 합창.

20:20 2천여 명의 시위대 시청 진입차단. 부산역으로 퇴진하던 중 파출소 습격. 다시 대한통운 앞에서 시민과 함께 연좌시위.

20:45 국제시장 앞 3백여 명 시위대 경찰과 30분간 치열한 공방전.

22:30 연좌시위 하던 군중들은 가톨릭센터로의 진입이 증원된 경찰력에 의해 차단되자 KBS 부산방송국으로 몰려 진입 시도. 경찰 1개 소대 포위 진압장비 탈취, 무장해제. 정문 앞에서 공정보도 요구하며 연좌시위.

22:35 3만여 시민, 학생. 부산 KBS 앞에서 경찰과대치중 부산방송본부 건물을 습격, 철제 울타리 30개 파손.

23:20 학생 3백여 명 중구 남포동 국제시장 등지서 시위.

24:00 1만여 시민, 학생. 각지에서 산발시위 계속.

1987.07.01

15:00 부산대생 5천여 명 '비상학생총회' 개최. 교내시위 후 7개 대 연합시위

에 참가 위해 해산. 그 외 동의대생 8백여 명, 부산산업대생 1천여 명도 비상학생총회 후 교문 밖 진출 시도, 투석전.

19:00 부산대생 등 6천여 명 가두시위. 시청 앞 50센티미터까지 진출, 경찰과 30여 분 간 투석전. 경찰버스 1대 전소. 동의대 상경대 교수 23명, 최루탄 부상학생과 관련 당국의 최루탄 발사 자제촉구 견해 표명.

21:30 농성시위대 3백여 명 가톨릭센터 앞 유엔로를 점거, 연좌시위, 교통마비.

23:40 학생들 자진해산 종용 위해 경찰 완전철수.

A5 [사건 내용] 광범위하게 진행된 전 민중적인 항쟁의 결과 집권당인 민정당으로부터 대통령제 직선제개헌 등 민주화조치를 약속하는 8개항의 '6·29선언'을 끌어냈다. 1987년 6월 17일 부산시내 10개 대학생 7천여 명 각각 교내서 출정식을 필두로 진행된 대대적인 가두시위는 이제 보편적인 시민과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가두시위를 가능하게 하였다. 500여명이 가톨릭센터 안에 남아 농성하기로 결정하고 그 후 350여명이 7일간 "군사독재 타도",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전투경찰에 의해 고립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장기농성은 부산지역 전역에 있어서의 항쟁의 상징적 중심지로 작용하였으며, 부산의 '명동성당'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끈질긴 투쟁의 장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한 성과가 지금의 민주공원과 가톨릭센터라는 민주화의 성지를 가능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6월 항쟁은 부산지역 중심가와 대학가 도로 전체를 배경으로 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개되었다. 부산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집회와 시위의 공간은 물론 대중투쟁의 장으로 기능한 곳이 바로 부영극장 및 남포동 일대였다. 4.19는 물론 엄혹한 유신치하에서도 청년학생 및 시민들의 항쟁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왔으며, 부마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대중투쟁과 집회의 현장으로 기능해 온 것이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던 극장 앞 육교는 철거되고 지금은 없다. 그리고 현재는 극장들도 옛날의 이름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수많은 인파가 넘치는 거리는 '국제 영화제'를 기념하는 광장으로 조성되어 '국제 영화의 거리'로 부각되고 있으며 여전히 부산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라는 구호로 시작되었던 시민항쟁으로서의 6월항쟁은 이후의 노동자 대투쟁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울산 현대엔진의 노조설립 이후 서서히 울산 전역으로 투쟁의 불길이 퍼져가던 즈음, 부산지역에서도 투쟁이 시작되었다. 7월 13일 동아건설 현장노동자들이 1일 파업농성을 통해 임금 25% 인상, 상여금 연 400% 지급 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쟁취하자 부산지역 노동자투쟁은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7월 17일, '르까프 신발' 제조업체인 (주)풍영에서 어용노조 퇴진, 부당근로연장 취소 등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였고, 이러한 부산지역의 투쟁은 7월 23일 태광산업 1천 7백여 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7월 25일 대한조선공사 2천 5백여 명 파업투쟁, 7월27일 세신정밀 8백여 노동자들의 파업투쟁, 7월 28일 국제상사의 파업투쟁으로 확산되면서 부산지역을 파업투쟁의 열기로 몰아넣었다. 특히 대

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 국제상사의 투쟁은 전국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고, 동종업체 협상조건의 기준이 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과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력들 또한 87년 6월항쟁이라는 대중적 훈련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결과 민주노조운동으로 전화시킬 수 있었다.

A6 [관계 인물] 김재규, 배다지, 김상찬, 송기인, 노무현, 이태춘 등

A7 [관계 단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부민협, 각 대학 총학생회, 노조협의회

A8 [관계 자료]

부산지역 유월항쟁 자료발간위원회, 『6월항쟁』전3권(항쟁일지/자료모음/사진자료집), 199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A9 [관련 사건] 7~8월 노동자대투쟁

A1 [사건명] **1991년 5월투쟁**

A2 [사건 일시] 1991.04.26~06.29

A3 [사건 배경] 1989년 이후 공안정국을 조성해온 정권은 90년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을 출범시키면서 민중의 민주적 개혁을 외면하면서 터져 나오는 민중의 저항을 억압과 탄압으로서만 억누르고자 공안통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경대 사건이라는 '예견된 참사'가 나타났으며, 이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의 광범위한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1년 4월 26일 시위 도중 명지대학교 1학년 학생 강경대군이 백골단 5명의 쇠파이프에 의한 전신구타에 실신하고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를 계기로 확산된 1991년 5월의 투쟁은 정권에 억눌려 왔던 학생과 민중의 분노를 잘 드러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전대협, 전민련 등은 다음날 27일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 전대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연세대에서 '故' 강경대 열사 추모 및 폭력살인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대협 백만학도 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투쟁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해체 백골단, 퇴진 노태우'를 전면 구호로 전국적인 연일 투쟁이 이어지게 된다.

A4 [전개 과정]

1991.04.26 서울 명지대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명지대학교 강경대(경제학, 1)군이 경찰의 사복 체포조 5-6명에게 쇠파이프와 구둣발로 집중 구타를 당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근처 성가병원으로 옮기던 중 사망.

1991.04.29 전남대 박승희, 오후 3시 15분께 전남대 학생회관 앞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분신(5/19, 사망). 명지대·서울대·부산대·전남대 등 전국 60여 개 대 대학생 5만여 명이 각 학교별로 일제히 '

강경대 열사 살인만행 규탄대회'를 갖고 전경·백골단의 즉각 해체를 요구,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분쇄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가 연세대 대운동장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림.

1991.05.01 '세계노동절 102주년 기념대회' 오후 4시 연세대에서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노동절 연대집회. 안동대생 김영균, 강경대열사 사건에 항의해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5/2, 사망).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등 부산시내 6개 대학생 8천여 명 대학별로 노동절 기념식을 가진 후 집회 및 시위.

1991.05.02 부산시내 곳곳에서 5천여 명 가두시위, 서면 광복동 등 시내중심가로 진출, 5천여 명의 시위대, 충무동 농협공판장에서 부영극장 건너편에 이르는 백여 미터의 간선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87년 6.10항쟁 이후 최대 규모), 광복로에는 5백여 명의 시위대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농성, 경찰의 폭력진압(학생, 시민 10여명 부상), 10시경까지 1,700여명 산발적 시위.

1991.05.03 경원대생 3백여 명이 창조관 앞 통일계단에서 '노정권 퇴진을 위한 4만학도 결의대회'를 열던 중 3층과 2층 사이 난간에서 6미터 아래 바닥으로 천세용 "6천 경원인 단결하여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여 사망. 5·3 동의대 사건 두 돌을 맞아 전대협과 부울총협 '5.3 항쟁 계승 5월 구국투쟁선포 10만학도 결의대회'

1991.05.04 '백골단 전경 해체와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궐기대회'가 오후 4시 서울, 부산 등 전국 21개 지역에서 학생과 재야·종교단체 인사, 일반 시민 등 20여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제히 열림. 부산역을 출발할 당시 5천명에 불과했으나, 부산진시장 앞에 와서 2만 명, 태화쇼핑 앞에 도착했을 때 3만 명의 시민 학생 참가.

1991.05.06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안양병원에서 의문사

1991.05.07 8시경, 대학생 및 한진중공업 노동자 4천여 명이 부영극장 앞 간선도로 점거, 고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시청방면 시위, 몸싸움.

1991.05.08 전국 145개 대학 동맹휴업 돌입,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분신·사망

1991.05.09 전국 87개 도시에서 "민자당 해체 및 공안통치종식을 위한 부산시민대회"개최. 전국적으로 55만 명이 참가. 부산남포동 일대 3만 명, 서면 일대 5만 명. 전국 98개 노조 시한부 총파업, 부산노련 등 노조들 조업 전면거부. 부산 시내 13개 대학 동맹휴업.

1991.05.10 노태우 정권 폭력 규탄 및 교육자치 선포대회. 전남대에서 노동자 윤용하 배후조종에 대한 비난유서를 남기고 분신(5/10, 사망)

1991.05.11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대회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대회.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및 원진 직업병 살인 규탄, 노태우 정권 퇴진 결의대회

1991.05.14 고 강경대 열사 영결식(명지대 서울배움터 오전 10시) 이후 노제를 위해 시청으로 가려다가 전경 진압으로 무산, 해직교사 120여명 단식농성 돌입(명동성당)

1991.05.18 노태우 정권 퇴진 제 2차 국민대회 (고 강경대 열사 장례식).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폭력통치 종식을 위한 전국노조 총파업(총 19개 지역, 156개 사업장). 고 강경대 열사 노제·영결식 도중 연세대 굴다리에서 이정순 유서를 남기고 분신·사망. 전남 보성고교 김철수 '5.18 11돌 추모행사' 중에 분신·사망. 광주 운전기사 차태권 분신. 검찰, 김기설 유서가 대필되었다고 발표

1991.05.20 고 강경대 열사 망월동 안장. 광주 권창수 시위도중 진압전경에 의한 폭행·중태

1991.05.22 전남대 병원 영안실 옥상에서 정상순 유서를 남기고 분신

1991.05.25 폭력살인 민생파탄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3차 국민대회 시위 중 성균관대 김귀정 질식사

1991.06.01 전대협 5기 출범식 (부산대)

1991.06.02 노태우 정권 퇴진 제 4차 국민대회. 고 박창수 위원장 공식살인 안기부 해체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노동자 대회

1991.06.03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에 계란 투척 사건

1991.06.08 6·10항쟁 계승 및 노태우 정권 퇴진 제 5차 국민대회. 인천 삼미 캔연 노동자 이진희 분신

1991.06.12 고 김귀정 열사 장례식

1991.06.15 국민회의 선포식,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1991.06.29 6·29선언 파산선고와 노동운동 탄압 규탄 제 6차 국민대회. 노동열사 고 박창수 위원장 전국 노동자 장례식

A5 [사건 내용] 1991년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2,000회의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되었고, 노학연대 투쟁이라는 청년학생과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이 벌어졌으며, 전국 8백여 명 교수들의 시국성명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신, 투신, 타살에 의한 사망자만도 10여명에 이를 정도로 투쟁의 강도와 사회적 파장이 치열하였다. 이는 87년 6월 항쟁이후 최다 최대의 규모이며 87년 6월 시민항쟁이 성공한 결과 민주개혁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었던 데 반해 91년 5월은 실패한 시민항쟁이었기에 이러한 실질적인 민주화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6월 항쟁이후의 가장 광범위한 규모로 진행된 대중투쟁이었다. 국민연합, 전대협, 학계, 종교계, 3야당 등의 대표 1인씩을 상임의장으로 하는 '범국민대책회의'는 4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5월 4일 백골단 해체의 날 △경찰 중립화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투쟁 등을 밝히고 4월 2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29일

부산지역 각 학교에서는 학교별 규탄집회를 갖고 서면과 부산진 시장에서 가두투쟁을 전개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시위의 과정 속에서 많은 학생들의 부상이 잇따르게 되는데, 이화여대의 김수정(중문 2), 제주대 고규형(화학 4), 김평국(전자공 2) 군이 각기 실명과 추락으로 인한 안면함몰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시위는 전남대 박승희 양의 분신과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더욱 고양되어 간다. 이처럼 강경대 학생의 폭력살인 규탄투쟁이 확산되는 와중에서 부산의 한진중공업 노조 박창수위원장이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박창수위원장은 2월 11일 대우조선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조회의'에 참석했다가 '3자 개입 금지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박창수위원장의 의문사는 부산지역에서의 노동운동뿐만 아니라 학생운동 및 재야운동이 활성화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자당 창당 1주년 및 5월 항쟁 기념행사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부산지역에서는 1987년 6월에 비견되는 대중투쟁이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었다. 노태우정권의 비리와 무능 그리고 폭압적 공안통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가던 중 5월 7일에 발표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의문사 사건은 노동자를 포함한 부산시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5월 9일 저녁 6시 부영극장 앞에서 열린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민자당해체 노태우퇴진 부산시민대회'에는 5만여 명의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집회 후 서면으로의 가두행진에는 십 수 만 명의 시민들이 대오를 이루었다. 그리고 서면 태화쇼핑 앞에서는 경찰의 최루탄 발사와 화염병 투척 등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져 시위는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다. 이어서 5월 11일 '고 박창수위원장 사인 진상규명 및 노동운동 탄압분쇄 부산양산 노동자대회'(부산대, 4천여 명의 노동자, 학생 참여, 가두시위)가 있었다. 국민연합과 신민, 민주, 민중당으로 구성된 '부산시국회의'는 5월 14일 '고 강경대열사 장례식'을 맞아 부산역에서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강경대 열사 추모 국민대회'를 열고 서면까지 평화행진을 하였다. 집회를 마친 후 2-3천명의 시민 학생들이 서면로터리의 김정수 민자당의원 사무실에 화염병을 투척하여 건물 내부를 전소시키는 등 경찰과 격렬한 공방전을 새벽 6시까지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5백여 명의 택시기사들이 '경적시위'를 통해 '노정권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부울총협 소속 학생 21명은 가톨릭센터 2층 강당에서 '노정권 퇴진 및 공안정국 종식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박창수열사 옥중살인 진상규명을 위한 부산노동자대책회의'와 부울총협 소속 학생 등 5천여 명은 5월 25일 부산상고에서 열기로 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사망규탄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서면, 태화쇼핑 앞, 부전동 시장, 병무청 앞, 전포동 한일레포츠 앞 등에서 최루탄을 난사하는 경찰에 맞서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다(『부산민주운동사』, 596~597). 이어 6월 1일에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전대협 발대식이 5만 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6월 2일에는 부산대에서 열린 전대협 출범식을 마친 학생들

1만여 명이 서면으로 나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가두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미 이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었다. 이로써 1987년 6월항쟁 이후 가장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한 달 이상 지속적으로 전개한 1991년 5월투쟁은 서서히 막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91년의 투쟁은 전국적으로 2,000회의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되었고, 노학연대투쟁이라는 청년학생과 노동자계급의 연대투쟁이 벌어졌으며, 전국 8백여명 교수들의 시국성명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분신, 투신, 타살에 의한 사망자만도 10여 명에 이를 정도로 투쟁의 강도와 사회적 파장이 치열하였다. 이는 87년 6월항쟁 이후 최다 최대의 규모이며 87년 6월 시민항쟁이 성공한 결과 민주개혁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었던 데 반해 91년 5월은 실패한 시민항쟁이었기에 이러한 실질적인 민주화의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A6 [관계 인물] 박창수

A7 [관계 단체] 한진중공업,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 부산노련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부산일보, 해당일자

A9 [관련 사건] 한진중공업노조 박창수위원장 의문사 사건

2. 정치운동

<개요>

본 보고서의 '정치운동'이라 함은 독재정권의 억압에 항거한 보수적 제도야당과 혁신계열의 정당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보수적 제도야당의 경우 집권세력에 대한 저항활동과 그에 대한 정권의 탄압에만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의미가 국한되며, 혁신계 정당의 경우 그 조직 및 사업 전반이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중앙집권화 되어있던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정당활동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로 부산·경남지역에서의 정치운동도 그리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각 정당의 시·도 또는 시·군별 지부 차원의 저항활동이나 그에 대한 정권측의 탄압이 여기서 말하는 지역 정치활동의 대종을 이룬다.

<경상남도 사회대중당 사건>은 1960년 4월항쟁이 이승만 독재권력을 몰아내자 그동안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못하였던 혁신계 정치세력들이 정당 및 정치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조직된 사회대중당의 경상남도 지부가 박정희 군부집단의 5·16쿠데타 이후 중앙당과 함께 탄압받아 해체되고 그 구성원들이 구속된 사건이다. <6·8부정선거 반대운동>은 1967년 제 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민주공화당 측이 저지른 엄청난 부정선거 행위에 대하여 야당인 신민당과 청년학생들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벌였던 투쟁이었다. '3선개헌'은 1969년 9월에 박정희 정권측이 대통령의 연임을 1차에 국한시킨 제3공화국 헌법규정을 2차 연임까지 가능하도록 야당의 반대를 따돌린 채 비밀리에 날치기 통과시킨 사건인데, <3선개헌 저지투쟁>은 1969년 초 공화당이 3선개헌 계획을 발표하자 그러한 정권측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반대운동이 벌어지게 된 바, 부산·경남에서도 야당과 청년학생 중심의 항거가 상당 기간 계속되었다.

A1 [사건명] **경상남도사회대중당 사건**

A2 [사건 일시] 1961.03.11~05.16

A3 [사건 배경] 4.19를 미완의 혁명으로 마친 부산지역의 활동가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공간에서 법개정 투쟁을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던 중 5.16군사쿠데타로 조직적인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던 사건.

A4 [전개 과정]

1961.03.11 부산시 중구 남포동 사회당경남도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2대 악법 반대운동 전개 결의

1961.03.16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경남위원회결성대회' 개최

1961.03.25 부산역 앞에서 반민주악법반대시민성토대회 개최

1961.05.00 민족자주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 참가

1961.05.16 군사쿠데타

A5 [사건 내용] 김용겸, 송세동, 김재봉, 신영갑 등이 1961년 3월 11일 경남 부산시 중구 남포

동에 있는 사회당경남도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정당 사회단체를 총망라하여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를 조직하여, 2대 악법을 적극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월 16일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경남위원회결성대회 개최. 3월 25일 부산역 앞에서 반민주악법반대시민성토대회 개최. 5월에 민족자주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 참가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발생한 5.16 군사쿠데타에 의하여 남북학생회담 환영 등의 반국가단체의 목적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여러 명이 구속된 사건임.

A6 [관계 인물] 김용겸, 송세동, 김재봉, 신영갑

A7 [관계 단체]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1962

A9 [관련 사건] 5.16군사쿠데타

A1 [사건명] **6 · 8부정선거 반대투쟁**

A2 [사건 일시] 1967.06.14~17

A3 [사건 배경] 1967년 5월 11일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는 야당인 신민당의 윤보선을 10%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같은 해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화당은 국회의원 재적수의 2/3를 넘는 129석을 차지하였다. 말 그대로 여당의 독주였다. 부산은 7개의 지역구 선거에서 영도구와 부산진 을구에서 민주공화당이 승리했을 뿐(예춘호, 최두고), 나머지 5석은 모두 민주당과 민정당이 합당하여 창당한 신민당이 차지하였다(김응주, 김영삼, 박기출, 정상구, 임갑수). 전체부산선거 득표율을 보면 신민당이 48.8%, 공화당이 42.2%였지만 신민당의 압승으로 귀착되었다. 비록 부산에선 야당 압승의 결과가 나왔지만, 역대선거가 그랬듯이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의 선거도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였다. 그리하여 공화당은 투표과정에서 공개·대리투표를 비롯한 부정선거가 저지른 6명의 당선자를 제명했다. 심지어 박정희의 지시로 공화당이 당선의석 1석을 신민당에 양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각계 각 층에서는 부정선거 규탄 및 시위가 전개 되었다. 즉 6월 12일 대구를 비롯하여 보성, 광주, 서천, 영천, 전국 여러 곳에서 6·8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야당원과 일부시민의 데모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권에서는 휴교령, 조기방학 등으로 시위를 잠재우려 하였다. 그럼에도 6월 13일의 서울대와 고대 등 11개 대학에 이어, 14일에는 보성, 성남, 중동, 경신 등 고교생 3,000여 명과 10개 이상의 대학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A4 [전개 과정]

1967.06.08 집권 민주공화당, 제7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조직적인 대규모 부정선거로 지역구 의석 131석 중 무려 102석의 당선자를 만들어 냄

1967.06.09 연세대 등 전국 대학에서 전날의 6 · 8총선 규탄 데모, 부산고 · 동래고

·경남고·부산상고 등 교내에서 부정선거 규탄 성토대회

1967.06.14 부산대생 1천여 명 교내에서 선거부정 성토 후 일부 학생 가두시위. 부산대학을 포함하여 고대, 연대 등 서울의 7개 대학과 함께 6월 14일부터 휴업

1967.06.15 동아대생 2천여 명 교내에서 선거부정 성토 후 일부 학생 가두시위. 부산 동래고를 비롯한 전국 21개 고교에서 격렬한 시위

1967.06.16 ~17일까지. 동아대, 동래고, 원예고, 브니엘실업고, 경남상고, 해동고, 경남고, 부산상고, 부산공고, 항도고, 부산고, 경남공고, 배정고 등의 학생들 시위 가담, 동래고 1,500여명의 시위가 최대

1967.06.19 문교부, 데모 저지 못한 동래고 홍금술 교장 해직

1967.06.23 동래고 총동창회,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규탄 성명

1967.06.25 전 동래고 교장 홍금술 복직, 부산공고로 전보 발령

1967.07.03 서울시내 14개 대학 1만 6천여 명 데모 참가, 시위운동 절정에 달함. 서울시내 고교 무기한 휴교.

1967.07.04 데모 재연 전국 20개 대학 조기방학

1967.07.05 부산대, 경북대, 성균관대 등 데모

1967.07.08 중앙정보부(부장 김형욱), 312명 연루 '동백림 간첩단' 사건 발표

A5 [사건 내용] 부산대학교 학생 1천여 명은 1967년 6월 14일 상오 11시 교내에서 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 "민족적 민주주의는 막걸리에 취해 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부산대생들은 12시 10분 교문을 뛰쳐나와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서울대학의 휴업조처에 뒤이어 지방대학으로서는 부산대학을 포함하여 고대, 연대 등 서울의 7개 대학과 함께 6월 14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동아대에서는 15일 상오 10시 20분 2천여 학생들이 교정에서 선거부정규탄 성토대회를 가졌다. 정오께 산발적으로 교문을 나온 3백여 학생들은 운동장 앞 전차길에서 데모를 벌였다. 다음날인 16일 상오 10시30 분 경에는 동아대 학생 100여명이 대학병원 앞에 집결, 전차길을 따라 남포동을 통과 상오 11시께 광복동에 진출했다. 나머지 학생들도 산발적으로 광복동에 집결하려고 했으나 광복동 입구에 집결한 경찰저지선에 걸려 해산되었다. 또한 6월 15일 부산 동래고를 비롯한 전국의 21개 고교에서 격렬한 시위 전개되자 박 정권은 219고교와 30여개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6월 16일에는 전국 145개 중고교 학생 20만 4천명과 각계각층의 3만 2천여 명이 참가하여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벌이게 되었다. 16일 상오 시내 동래고, 원예고, 브니엘실업고, 동아대생들이 6·8선거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와 1천여 명의 경찰기동대와 충돌하였는데, 투석과 곤봉, 최루탄 발사 등으로 수십 명의 학생과 경찰이 부상을 입었다. 그 밖에 경남상고, 해동고, 경남고, 부산상고, 부산공고, 항도고, 부산고, 경남공고, 배정고 등의 학생들도 적게는 50여명에서 많게는 1,500여명까지 몰려나와 6월 16일과 17일에 걸

쳐 부정선거 규탄에 기세를 올렸다. 이들 가운데 부산상고 60여명, 부산고 33명, 부산공고 16명, 항도고 2명이 각각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 고교생 데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역시 동래고교생 1천5백 명의 시위였다. 방송반에서 "소녀의 기도"란 곡이 흘러나오는 것을 신호로 학생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교문을 박차고 어떤 학생들은 철조망을 뚫고(전날 밤에 미리 끊어 놓았음) 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동래 경찰서 앞에 이르자 데모대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동래고 학생 간에 투석전이 벌어져 쌍방 20~3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 교사들은 데모대가 거리를 질주할 때나 경찰과 난투전을 벌이는 저지선에서나 학생들이 다칠까 염려하여 따라 다니면서 설득을 하였다. 학생들이 후퇴하여 정묘 뒷산에 나아가자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고, 홍금술 교장이 와서 설득하여 학교로 귀교시킴으로써 이날의 데모는 일단락되었다. 이처럼 데모는 홍 교장을 위시하여 전 교직원의 간곡한 만류로 끝나게 된 것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이 일로 홍 교장은 해임되었다. 문교 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동래고 학생들은 물론 동창회와 사회 일반에서도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게 만들었다. 동창회는 주민들의 연판장을 들고 진정하였으며, 재경 동창회도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6월 23일에는 동래고교 동창회에서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줄기찬 여론에 눌린 문교 당국은 마침내 6월 25일자로 해임발령을 취소하고 홍 교장에게 부산공고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아무튼 시위가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전파 확산되어 가자 당국은 6월 17일 부산시내 13개 고교에 대하여 가정실습 등의 명목으로 휴교조치를 내림으로서 시위 물결의 확산을 차단하였다. 이날 초급대학인 한성여대에도 함께 휴교령이 내려졌다. 그 뿐만 아니라 박 정권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는데 7월 8일의 이른바 '동백림 간첩단' 사건 발표까지 동원하기에 이른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동아대, 부산대, 동래고 등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3선개헌 저지투쟁**

A2 [사건 일시] 1969.01.08~10.17

A3 [사건 배경] 4월 혁명으로 분출되고, 고양되었던 부산의 학생운동세력은 65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고비로 침체기에 접어들지만 67년에는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선거에 대한 성토대회 및 규탄대회를 중심으로 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였다. 1967년 제6대 대통령선거의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공개·대리투표를 비롯한 부정선거를 저지른 6명의 당선자가 공화당에서도 제명되었을 정도로 선거부정은 심각했다. 이에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규탄 및 시위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이에 "6월

12일 대구를 비롯하여 보성, 광주, 서천, 영천, 전국 여러 곳에서 6.8선거부정을 규탄하는 야당원과 일부시민의 데모사태가 벌어졌다(부산시사 : 1195~1198).” 그러나 독재 정권은 강제적인 휴교령과 조기방학 등으로 시위를 잠재우려고만 하였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벌어진 부정선거 규탄을 위한 민주화 운동은 1969년의 3선개헌 저지 투쟁을 거치면서부터 새로운 저항의 대열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A4 [전개 과정]

1969.01.08 공화당에서 3선 개헌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자, 각계각층의 민중들은 즉각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1969.06.12 서울대에서 ‘헌정수호 성토대회’가 열림

1969.06.27 ~28일까지, 고대생 500여명이 개헌에 반대하는 시위

1969.07.03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중고교 대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전개

1969.07.07 동아대 학생 1천여 명 학기말 시험 거부 및 3선 개헌 반대 시위. 부산대학생 500여명 3선 개헌 반대와 학원자유 성토대회 벌임. 서울대학가의 조기방학사태에 이어 부산에서도 부산대와 수산대, 그리고 동아대학들이 학기말 시험을 무기연기하고 8일부터 사실상 방학에 들어갔다. 이런 사태는 7일 부산대학과 동아대학의 학생데모에 이어 취해진 조치였다.

1969.07.25 박대통령은 “개헌문제를 통해 나와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선언하고 민주공화당이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이 ‘3선 개헌안’은 야당의 국회의사당 농성 중에 9월 9일 변칙적으로 여당 단독만의 비밀소집으로 국회회관 특별회의실에서 통과

1969.10.17 뒤이어 헌법절차에 따라 10월 17일 국민투표로써 가결. 국민투표 결과 77.1%가 투표하여 찬성 65.1%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전국적으로 찬성률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특별시 48.2%, 그 다음으로 58.6%인 부산시였다.

A5 [사건 내용]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는 4개월 동안 55개 대학 37개의 고교의 15만 7천여명이 참가했지만 박 정권의 탄압에 의해 무산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의지에 박 정권은 69년 1월 9일 7개시의 남녀고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실시된 군사교육을 71년에는 기존의 2시간을 3시간으로 늘리고, 재학 중 집체교육까지 71시간으로 확대했으며, 교관 전원을 현역으로 대체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원사찰중지, 언론의 자유보장, 학생군사훈련 반대, 현역교관 학원추방, 조국의 병영화 반대, 평화보장”이란 구호로 교련반대투쟁을 전개했으며 4월 13일에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학생들의 비판적인 시야를 무력화하고 3선개헌을 통해서 영구적인 집권을 하겠다는 작업의 기초에 불과했고 결국 7월에 3선개헌을 발의하여 10월 17일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pp1194-95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pp.252-56

A9 [관련 사건]

3. 청년학생운동

<개요>

학생운동은 한국사회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계급세력의 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까지에는 학생운동이 가장 선도적인 (혹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사회 경제적 근대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자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계급구조의 변동을 가져오지만, 사회운동의 세력구성으로까지 그러한 변화가 단기간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이처럼 계급구성의 변화와 실제 사회운동상의 세력분포 사이에는 일종의 '지체현상'까지 나타나는 형편이어서, 이 지체의 기간 동안 한국의 사회 정치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어떠한 계급 세력이 아닌 학생층이었던 것이다. 대략 195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 초기가 그에 해당하는데, 마산 3.15의거, 부산 3·4월항쟁, 부마항쟁 등에서 보여준 청년학생층의 선도적 역할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1960년 3·15부정선거에 대한 부산과 마산의 항쟁은 고교생들로부터 시작하여 대학생과 청년 지식인층이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민주당이나 혁신계 정당과 같은 정치세력 및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가세됨으로써 종국에는 연합운동의 성격으로까지 상승 발전하게 된 것이다.

본 보고서가 말하는 '청년학생운동'은 엄밀히 말할 때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으나, 대체로 비슷한 성격의 부문이라고 보아 합친 개념으로 설정된 부문이다. 부산·경남지역 청년학생운동은 그 성격별로 몇 가지 유형화가 가능하다.

첫째, 4월항쟁 국면에서 일어난 <부산민주민족청년동맹 사건>과 <경상남도민주민족청년동맹 사건>, <경상남도 반민주악법반대 학생공동투쟁위원회 사건>이다. 이 사건들은 4월항쟁으로 활동공간이 비교적 넓어지고 자유로워 진 청년학생층이 한 차원 높은 조직 및 투쟁사업에 나섰다가 박정희 일파의 5·16군사쿠데타로 탄압· 저지되고 중심인물들이 구속된 사건이다.

둘째로,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던 주요 정책을 공개리에 비판, 항거하던 <한일협정 반대투쟁>과 <교련강화 반대투쟁>이 있다.

셋째로, 이른바 유신체제 수립 이후 공포적인 억압상태와 일상적 감시체제 아래에서 극히 비밀리에 힘겹게 성사시킨 반정부 투쟁의 몸부림이 <「부산대학교자율화 민주투쟁선언문」살포 사건>과 <부산대 반유신 페인팅 사건>이었다.

넷째로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신군부세력이 등장한 이후 일어난 투쟁과 투옥을 반복한 일련의 사건들이 1980년의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으로부터 1989년의 <동의대 5·3항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는 미문화원 방화사건이나 진성일·양영진 투신 사망, 동의대 5·3항쟁 등 인명의 손상을 포함하는 극단적 투쟁 사례도 많았다.

이상과 같은 흐름의 부산·경남지역 청년학생운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1980년대 이후의 상황을 좀 더 분석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산·경남지역은 수도권의 경우와 달리 학생운동 활동가의 인재 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부림사건>을 통한 투옥과 수배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산지역에는 오히려 선진적 청년학생운동가 그룹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1987년 6월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끈 국민운동 부산본부의 중심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부산·경남지역 학생운동에서 1982년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1980년 5월 광주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대두된 미문화원방화사건은 학생운동의 투쟁 방향과 흐름 위에 '반미'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반미 자주화'를 민주화 투쟁의 선결과제로 삼는 자민투로부터 민족해방민주주의(NLPDR) 계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후 1980년대 중반 학도호국단체제를 학생회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학내민주화투쟁은 헌신적이며 선도적인 투쟁형태의 학생운동을 대중적인 조직으로서의 학생회라는 틀로 만들어 냄으로써 질적으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나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산대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학내민주화투쟁의 지속적인 전개는 이후 6월항쟁의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원으로 작용하였다. 수많은 학생들이 장기간의 조직적인 투쟁을 거치면서 대중적인 학생운동가로 양산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6월의 시민항쟁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1987년 전대협이 출범하고 부산에서도 부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가 지역의 학생운동을 선도하게 되었다. 1988년도가 되면서 학생회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파적·조직적 역할을 둘러싼 학생운동의 방향에 대한 논의는 '통일투쟁'과 '노학연대'를 중시하는 이념적인 틀의 차이로 분화되기 시작하고 '전투적인 학생회'에 가해진 비판적 견해와 함께 대중적인 학생운동은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1989년 <동의대 5·3항쟁>으로 전투경찰이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면서 도래한 공안정국은 학생운동의 대중적 동력을 전국적으로 떨어뜨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학생운동의 정파지향적 속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1991년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강경대군치사사건'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 연이어 터진 수많은 '자살'과 '분신'사건들은 학생운동의 새로운 자극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전대협출범식이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고 <박창수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의문사 사건>까지 겹치면서 <1991년 5월투쟁>이 전개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운동의 새로운 동력이 확보되는 듯 했으나 끝내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A1 [사건명] **경상남도민주민족청년동맹 사건**

A2 [사건 일시] 1960.12.00~1961.05.16

A3 [사건 배경] 4.19혁명을 성공으로 마무리 하지 못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활동가들이 4.19과정을 통해 쟁취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활동력을 통해 청년운동을 펼치려 조직확장사업을 시도하였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대중적인 조직건설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던 사건.

A4 [전개 과정]

1960.09.00	김영대 민주민족청년동지회 가입
1960.10.00	김영대 민주민족청년동지회경상남도연맹 영도구위원장 취임
1960.11.00	권종현 민주민족청년동지회 가입
1960.12.00	권종현 사무국장 취임

1961.03.00 2대 악법 반대운동 주도

1961.03.11 부산시 중구 남포동 사회당경남도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2대 악법 반대운동 전개 결의

1961.03.16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경남위원회결성대회' 개최

1961.03.25 부산역 앞에서 반민주악법반대시민성토대회 개최

1961.05.00 민족자주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 참가

1961.05.16 군사쿠데타

A5 [사건 내용] 권종현(1960년 11월에 민주민족청년동지회에 가입한 후 12월에 민주민족청년동지회경상남도연맹회 사무국장으로 취임)과 김영대((1960년 9월에 민주민족청년동지회에 가입한 후 10월부터 민주민족청년동지회경상남도연맹영도구위원장으로 취임하여 활약)가 1960년 12월부터 평화통일론의 전개, 남북간문화교류의 선전 등의 활동을 함. 1961년 3월 경부터는 2대 악법반대투쟁 등을 전개하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된 사건

A6 [관계 인물] 권종현, 김영대, 이종률

A7 [관계 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2대악법반대경남공동투쟁위원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민주민족청년동맹 사건**

A2 [사건 일시] 1960.05.07~1961.05.16

A3 [사건 배경] 4.19혁명을 성공으로 마무리 하지 못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활동가들이 4.19과정을 통해 쟁취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활동력을 통해 청년운동을 펼치려 조직 및 대중 확장사업을 시도하였으나 5.16군사쿠데타로 인해 대중적인 조직건설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던 사건.

A4 [전개 과정]

1960.05.07 민주민족청년동맹 발기인단 조직. 김상찬, 산수 이종률의 민족혁명론 주장

1960.09.00 김영대 민주민족청년동지회 가입

1960.10.00 김영대 민주민족청년동지회경상남도연맹 영도구위원장 취임

1960.11.00 권종현 민주민족청년동지회 가입

1960.12.00 권종현 사무국장 취임. 문화인망년회 개최. 김상찬, 평화통일론과 남북간문화교류 주장 등의 활동

1961.03.11 부산시 중구 남포동 사회당경남도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2대 악법 반대운동 전개 결의

1961.03.16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경남위원회결성대회' 개최

1961.03.25 부산역 앞에서 반민주악법반대시민성토대회 개최

1961.05.00 민족자주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 참가

1961.05.16 군사쿠데타로 좌절

A5 [사건 내용] 김상찬이 1960년 5월 초순경 부산대학교 문리대 정치학과 동료 20여명과 회합하여 민주민족청년동맹 발기를 위한 발기인단을 조직하여 이종률의 민족혁명론을 주장. 12월말에 문화인망년회를 개최하여 여기서 평화통일론과 남북간 문화교류사업 선전 등의 활동을 전개하다가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된 사건을 말한다.

A6 [관계 인물] 이종률, 김상찬, 배다지, 조현종, 하상연 외

A7 [관계 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2대악법반대경남공동투쟁위원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경상남도반민주악법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1.03.23~05.16

A3 [사건 배경]

A4 [전개 과정]

1960.05.07 민주민족청년동맹 발기인단 조직. 김상찬, 산수 이종률의 민족혁명론 주장

1960.09.00 김영대 민주민족청년동지회 가입

1960.10.00 민주민족청년동지회경상남도연맹 영도구위원장 취임

1960.11.00 권종현 민주민족청년동지회 가입

1960.12.00 권종현 사무국장 취임. 문화인망년회 개최. 김상찬, 평화통일론, 남북간문화교류등의 활동

1961.03.11 부산시 중구 남포동 사회당경남도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상임집행위원회 개최, 2대 악법 반대운동 전개 결의

1961.03.16 '반민주악법반대공동투쟁위원회경남위원회결성대회' 개최

1961.03.23 2대악법공동투쟁위원회가 부산역 광장에서 궐기대회 개최

1961.03.25 부산역 앞에서 반민주악법반대시민성토대회 개최

1961.05.00 민족자주통일촉진시민궐기대회에 참가

1961.05.16 군사쿠데타로 좌절

A5 [사건 내용] 손병선 등이 2대악법공동투쟁위원회가 1961년 3월 23일과 3월 25일 부산역 광장에서 궐기대회와 성토대회를 개최한 사건. '데모규제법'과 '반공법' 제정에 대한 반대 투쟁.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됨

A6 [관계 인물] 손병선(외 3명)

A7 [관계 단체] 2대악법반대경남공동투쟁위원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3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한일협정 반대투쟁**

A2 [사건 일시] 1964.03.25~1965.08.26

A3 [사건 배경] 한일협정반대투쟁은 한일국교정상회담이 본격화된 1964년부터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된 1965년까지 야당과 학생을 주축으로 전개되었다. 한일국교 정상화를 위한 시도는 1948년부터 끈질기게 진행되어 왔지만 워낙 양국 간 인식차가 컸기 때문에 좀처럼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박정희 군사정권에 들어와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1964년 3월까지 한일회담 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이라는 정부 방침이 세간에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들끓게 되었다. 당시 국민들은 식민통치에 대하여 사과나 배상은 요구하지 않고 한일회담을 통한 차관을 얻는 데만 급급하던 군사정권을 거세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야당은 1964년 3월 6일 '대일굴욕외교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유세에 돌입하였으며, 뒤이어 3월 24일에는 서울대생들이 '한일회담 즉각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이케다(池田) 일본 수상과 이완용의 화형식을 거행한 뒤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서울대 외에 연대와 고대생들도 시위를 벌였다(3 · 24데모). 이를 시발로 서울 · 부산 · 대구 등지의 학생들이 가두로 진출, 대대적인 항의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즉 3월 25일 서울 2개 대학 및 5개 고등학생 4만여 명의 시위와 부산의 수산대 · 동아대생 2,300여 명, 대구 5개 대학 및 전주 전북대학생들의 시위가 벌어졌던 것이다.

A4 [전개 과정]

1964.03.00 3월 회담타결, 4월 조인, 5월 비준이라는 정부방침 알려짐

1964.03.06 야당, 대일굴욕외교반대범국민투쟁위원회 결성

1964.03.24 서울대, 연대, 고대 등 3 · 24데모

1964.03.25 동아대, 성토대회 시작

1964.03.26~27 부산대생, 고교생 대규모로 데모에 합세, 여고생들도 가담

1964.06.03 이른바 '6 · 3사태' 발생

1964.06.04 동아대생, 구국궐기대회 개최 후 시내 진출

1965.01.01 오후 4시, 전국에 위수령

1965.06.21 오후 1시 부산에서는 동아대학이 방학에 들어갔고

1965.06.22 부산대학도 22일 상오부터 26일까지 휴교공고. 한일협정 정조인 예정대로 강행

1965.08.11 야당의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한일협정 국회 비준안 통과

1965.08.20 동아대생 상오 9시부터 운동장에 집결, 야당 없는 국회에서 비준된 한일협정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하라는 결의문과 선언문을 채택

1965.08.23 다시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한일협정 비준 무효화투쟁에 가세

1965.08.26 박 정권, 다시 위수령 내리고 학원을 점령

A5 [사건 내용] 부산에서는 원래 1964년 3월 21일 오후 6시, 동아대, 부산대, 교육대, 수산대, 한성여대 등 부산시내 5개 대학 대표들이 시내 한 다방에 모여 각 학교별로 성토대회를 열고 3월 23일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열기로 계획하였으나, 그만 정보가 누설되어 서울보다 먼저 대규모 시위를 시작할 뻔 했던 이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던 차에 3월 24일 서울대 등에서 데모가 일어나자 그 이튿날인 25일부터 바로 동아대가 성토대회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3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총학생회장 김창수 군의 선도로 7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정에 모여 한·일 굴욕외교 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우리들의 행동이 반정부적인 것이 아님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국민여론을 무시한 회담을 중지하고 회담내용을 즉각 국민에게 밝히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이어서 매국회담을 중지하라, 이완용을 또다시 만들지 말라" "한·일 회담대표를 소환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10시 50분 교문을 나서 시위에 돌입하였다. 곧이어 수업 중이던 학생들도 가세하여 2,500여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시내로 행진하였다. 이 날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시위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경찰은 이들 학생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경찰차와 페트롤 카가 시위대를 호위하였고 정복 경찰관은 대열을 호위하며 일반인의 합류를 막았다. 학교를 출발한 동아 대학교 학생의 시위대는 법원앞-대청동거리-광복동-시청 앞을 통과하고 부산역 광장에 집결하여 다시 한 번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한 뒤, 만세삼창으로 해산하고 학교로 돌아와 정상수업을 계속하였다. 전국적으로 파급기세에 있던 대일굴욕외교 반대 학생 데모는 3월 26일 부산대생과 고교생들까지 “한일회담 즉각 중지하라”고 외치며 수천 명이 데모에 나서자 더욱 열기를 더해 갔다. 부산대학교는 26일 상오 9시 30분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이 교정에 모여 “400만 어민의 생명선인 평화선을 3억달러의 채권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흥정하려는 대일굴욕외교를 즉각 중지하라”는 경고문을 낭독하고 질서 정연히 교문을 나서 동래 가두를 누비며 행진에 들어갔다. “굴욕적인 외교는 매국행위다” “金-오히라(大平) 메모를 공개하라” “일본상사의 경제침투는 간접침략이다”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부산 중심가를 향하여 행진해 갔다. 이들 데모대 앞에는 경찰 백차와 오토바이가 선도를 하고, 연도에 몰려든 시민들 일부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부산상고생과 남고생 각 1,000여명도 오전부터 교문을 출발하여 부산 중심가로 행진해 들어갔다. 3월 27일에는 혜화여고생 1,500여명이 하오 2시 교정에 모여 “우리는 한일굴욕외교를 결사반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교문을 나서서 데모에 돌입했다. 이들은 “한일회담, 저자세굴욕회담을 즉시 중지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

고 구호를 소리높이 외치며 부전동에서 시청 앞을 향해 행진해 갔다. 이 날 경찰 백차와 기동대는 여학생들의 행진을 보호했으며, 거리를 누비는 이색적인 여고생 데모대에 지나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었고 일부는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5Km 가까운 행진 끝에 시청앞에 다다라 결의문을 낭독하고 해산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가 확산되자 부산의 각 대학 당국에서는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컨대 부산대는 4월 10일 강연회를 열고, 14일에 <한일회담과 우리의 입장>이란 책자를 배부하며, 16일에는 교수들의 좌담회 등을 통하여 한일회담의 현실적인 불가피성과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런 와중에 64년 4월 9일 미 대통령 존슨이 한일협정을 종용했다는 발언이 알려지고 야당인사 및 유력자에 대한 각종 회유공작이 진행되자, 전국의 청년학생들은 '한일굴욕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를 결성했다. 한편 서울에서 이른바 6·3항쟁이 벌어진 다음날인 6월 4일 상오, 9시부터 동아대생들은 교정에서 구국 궐기대회를 열고 구국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한 뒤 9시 50분부터 700여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시가데모에 나섰다. 부산대 학생들 또한 6월 4일 상오 10시 30분부터 약 300명이 교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무능, 악덕 재벌들의 행패를 규탄하는 성토대회를 열고 플래카드를 앞세워 동래 시가지를 행진했다. 이들은 무장군인 법원 난입과 학생 구타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구속학생 석방과 학원사찰 중지, 여야협조와 민생고 해결 등을 구호로 외쳤다. 그러나 청년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은 끝내 조인되었다. 그러자 1965년 신년부터는 한일협정 '비준 반대' 데모가 전개되었다. 이에 박 정권은 1965년 1월 1일 오후 4시를 기해 전국에 위수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한일협정 반대 시위는 3월 20일 이후 부산 등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6월 22일의 한일협정조인을 앞두고 주요도시의 대학가가 격동하고 있었다. 부산에서는 6월 21일 하오 1시를 기해 동아대학이 방학에 들어갔고, 부산대학도 22일 상오부터 26일까지 휴교공고를 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6월 22일 마침내 한일협정을 정식으로 조인하였으나 반대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6월 28일 휴교령이 해제되자 부산대학생들은 학기말 시험을 거부하고 운동장에 집결하여 한일협정반대 성토대회를 열고 1,500여명이 시위에 돌입하였다.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찰 기동대와 투석전을 벌인 끝에 이 날 54명의 학생과 87명의 경찰관이 각각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 2명과 학생 134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1965년 7월 28일 '조국수호 국민협의회'가 결성되고 8월 11일에는 야당의원들이 사퇴한 가운데 한일협정 국회 비준안이 통과되었고, 8월 18일에는 2만 명을 베트남에 파병하는 동의안까지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학생들은 국회해산과 총선거를 주장하며 부당성에 항의했다. 8월 20일 동아대 학생들은 격렬한 시위로 항거하였다. 두 달간의 방학 끝에 개학한 동아대 학생들은 20일 상오 9시부터 운동장에 집결, 야당 없는 국회에서 비준된 한일협정은 무효라고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하라는 결의문과 선언문을 채택한 후 "민족적 양심으로 국회를 해산하라"고 쓴 플래카드와 함께 시위를 벌였다. 이 시위 결과 동아대

학생 107명을 연행, 54명에 대하여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순경 9명도 중상을 입었으나 축산과 이상돈 군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5명이 경상을 입었다. 8월 23일부터 전국의 중고교생들이 가세하자 박 정권은 8월 26일부로 또 위수령을 내리고 학원을 점령하였다.

A6 [관계 인물] 이상돈

A7 [관계 단체] 한일굴욕회담 반대 학생총연합회

A8 [관계 자료] <선언문>(1964.3.25 동아대학교학생 일동)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교련강화 반대투쟁**

A2 [사건 일시] 1971.04.15~22

A3 [사건 배경] 1969년의 3선 개헌을 과도하게 밀어붙이면서 박정희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점차 뚜렷하게 확산되는 가운데 1971년이라는 문제의 3선 도전(제8대 대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권 측으로서는 선거 국면이 도래하기 전에 학생과 야권의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활동을 조직적으로 통제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여기에 학생운동을 위축시키고 그들을 제도적으로 더욱 확실히 장악·통제할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교련교육의 대대적 강화였다. 더군다나 1968년의 1·21무장공비 사건이나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을 빌미로 교련교육은 이미 1969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리하여 1971년 1월 정부가 대학 교련시간의 연장과 교관의 현역 장교로의 대체 등을 골자로 하는 교련교육 강화 방안을 확정하자, 이는 선거의 해를 앞두고 술렁거리기 시작 하던 대학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즉 3월 신학기 개강과 더불어 각 대학들은 '교련강화 반대,' '학원병영화반대,' '학원자유수호' 등을 외치면서 시위가 확산되어 갔다. 부산대학교도 바로 그런 열기로 휩싸여 있었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71년 1월 10일 문교부의 이른바 '교련교육 시행세칙'이 발표되었다. 이는 다원화되어 있던 대학 군사훈련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R.0.T.C.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1969년부터 실시해 온 교련교육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향후 대학가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3월 대학가가 새봄을 맞아 개강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3월 2일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해 부산대 교수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또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도 3월 2일 상오 대학교련 강화안(1월 27일 문교부 발표)에 대한 재학생 1천31명 (여학생 제외)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즉 2월 24, 25일 이틀간 실시된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담당교관이 현역으로 대체된다는 데 대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가 36%, "노골적인 대학의 자율

성 침해이다"로 보는 학생이 57.2%로 나타나 결국 90% 이상의 학생들은 교련교육의 강화가 대학의 자율성을 심히 침해하리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만은 결국 4월 15일 5백여 부대생들의 성토집회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15일 낮 12시 부산대학생 약 5백여 명은 교정에서 '교련강화반대', '언론부재 규탄'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성토대회를 벌였다. 그 후 학생들은 12시30분께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나오려고 했으나 경찰기동대의 저지를 받았다. 이러한 열기가 계속 이어져 다음날인 4월 16일에는 부산대 상대생 150여명이 교련강화 반대 성토집회를 가지고, 4월 19일에는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 공동시국선언에 부산대도 동참하게 된다. 20일 낮 12시께 의예과 학생 100여명은 교내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학교 밖으로 나가려다 교수들의 만류로 10분후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움직임은 부산대학교 내 다른 단과대학으로도 번져나가 21일 상오 10시께 법대생 100여명도 '1주 3시간의 교련시간을 2시간으로 줄여라' '현역교관을 예비역으로 바꾸라'는 등의 전단을 인쇄, 교내에 뿌렸다. 학생들은 이 전단에서 교련은 정훈교육을 주로 할 것을 요구하고, 학교당국에 이를 건의하면서 이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4월 22일에는 교양과정부 학생 2백여 명과 공과대학생 1백 50여 명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자'는 등 구호를 외치며 검은색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민주수호 전국청년학생연맹

A8 [관계 자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대학교자율화 민주실천선언문」 살포사건 (약칭 「4.19 선언문」사건)**

A2 [사건 일시] 1978.04.19

A3 [사건 배경] 10 · 16부마항쟁은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1978년 4월의 「4.19 선언문」사건이나 7월의 반유신 페인팅 사건 등과 같은 예비적 시도들의 숱한 시행착오와 훈련과 적응을 통해서 그와 같은 폭발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발발을 쉬 예측할 수 없었던 그 당시로서는, 무엇인가 작은 불씨 하나라도 우선 지펴보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초조함, 그런 갑갑함들이 의식 있는 학생들과 민주화운동세력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만큼 당시로서는 유신체제의 폭압성이 워낙 강력하여 그에 대한 저항도 쉽사리 불붙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수록 불이 일단 붙기만 하면 크게 번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78년의 부산대학교 4 · 19기념일은 「부산대학교자율화 민주실천선언문」 살

포사건, 약칭 「4.19선언문」사건으로 맞이하였다. 그 선언문의 내용은 ①반민주적 탄압중지 ②긴급조치 해제 ③노동자, 농민 권익 해방 및 인권침해 중지 ④언론탄압 중지 ⑤북괴의 민족적 각성 등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 가담한 대입준비생 전중근과 부산대의 정외영(여, 사학2), 서연자(미술교육2), 이성동(의예2) 등은 모두 중부교회에서 그룹 스터디를 함께 하며 사회의식에 눈뜬 이들이었다. 그들은 시위를 유도하고자 교정 길바닥과 강의실 칠판 등에 매직으로 "유신철폐" "박정권 물러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쓴 뒤 위 선언문을 부산대학생들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도서관 등에 뿌리다가 투옥되었다. 정외영, 이성동, 전중근 등은 구속되고, 서연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이후 부산지역 대학가에서 최초로 발생한 유인물 살포사건이라 상당히 의미가 깊다. 비록 대중적 동원에는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엄혹한 유신체제에 대한 부산지역의 항거로서는 몇 년 만의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부산지역 대학가에 사회과학 학습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 이념써클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A6 [관계 인물] 전중근, 정외영, 서연자, 이성동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오십년사』, 1997, p.54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대 반유신 페인팅 사건**

A2 [사건 일시] 1978.07.04

A3 [사건 배경] 유신체제의 폭압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일이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 열혈 청년들이 그 해 4월의 「4.19 선언문」사건에 고무되어 본격적으로 모의에 착수하게 된 것이 '부산대 반 유신 페인팅 사건'이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78년 7월4일 아침, 부산대학교 교정에서는 이른바 '반유신 페인팅 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여느 교회들과 달리 감사헌금이나 십일조헌금을 받지 않고 거의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간 이주학 목사의 남부교회에 다니던 부산대생 이상경(인문사회계열1, 학보사 기자)과 그의 중앙고 동기생이자 이목사의 아들인 이희섭,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의 대입준비생 김성영 등이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었다. 부산중앙고 선배이자 부산대 동문 (중앙고와 중앙여고) 써클 '영목'(嶺木)의 창립을 주도했던 고호석(영문 76학번)과 더불어 남부교회에서 맹렬한 독서와 토론으로 사회의식을 다져가던 이들 또한 양서조합을 통해서도 만남의 폭과 학습수준을 넓혀갔다. 이들은 지난 4월의 정외영, 서연자, 권중근, 이성동이 주도한 「4.19 선언문」사건에 고무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4.19선언문」사건 구속자 석방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이상경, 이희섭, 김성영 등 위 3인이 7월 3일 밤 야음을 틈타 부산대 운동장 스탠드의 수직면과 바닥면에 초록색 스프레이로 "유신철폐", "교련반대", "독재타도"의 구호들를 페인팅하고 투옥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하면 유신의 폭압성을 학생들에게 알릴까 하는 다양한 모색을 하는 중, 1978년 6월 쯤 전자 및 전화에 관심이 있던 이희섭은 무전기를 조립해서 그 용도를 궁리하기도 하였다. 특히 잉거솔의 (용서받지 못할 자의 죽음)이라는 책을 보고 나치에 저항하는 벽보, 벽서 투쟁방식에 상당한 시사를 받게 된다. 또한 이브 몽땅 주연의 영화에서 스프레이 방식의 벽서행위를 보고 힌트를 얻어, 서면 자동차 부속골목에서 분무 페인트를 용모까지 변장하여 구입하였다. 거사 시기는 기말고사 직전이 좋다고 판단하여 7월 3일 밤에 거사를 결행하게 된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모두 붙잡혀 구속된다. 이희섭은 담당 검사 최병국(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의해 검찰에서 5년을 구형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집행정지로 1979년 5월 12일 출감한다. 이상경은 5년 구형에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1979년 7월 17일 제헌절 특사로 풀려나게 된다.

A6 [관계 인물] 이희섭, 이상경, 김성영, 이주학(목사)

A7 [관계 단체] 남부교회, 양서협동조합

A8 [관계 자료] [부경-청학5] <구술녹취록>(이상경)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결성**

A2 [사건 일시] 1980.02.26~05.17

A3 [사건 배경] 부마민중항쟁을 계승한 지역의 운동은 대중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0년 2월 25일에 제14차 국무회의에서 학도호국단 간부 선거제, 학생군사교육을 학도호국단 기능에서 제외, 중앙학도호국단 과 시/도 학도호국단 조직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도호국단 설치령 개정령(안)이 의결됨으로써 과거에 존재하였던 학생회의 부활을 시도하는 조건이 형성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부산지역의 각 대학별로 그 명칭은 다소 상이하나 학원민주화 또는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들을 중심으로 학생회의 부활과 학원자율화를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A4 [전개 과정]

1980.02.26 부산대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결성

1980.03.08 ‘부산대학교 학생대표자회의’ 발족

1980.03.28 학도호국단 임시회의를 통해 사단장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사퇴서 제출

1980.04.02 제1차 학원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개최(3천여 명이 참가, 결의문 채택).

학생회의 부활, 학생지도관실의 폐지 및 서클 활동의 자유보장, 학원사찰의 즉각 중지, 학내언론 및 사회언론의 자유 보장, 어용교수의 퇴진 등의 12개항의 내용을 담은 학원민주화 결의문 채택

1980.04.04 동아대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전찬수(법학과 4년)결성

1980.04.04 수산대 학생회 직선을 결의하는 수산대학 선거공청회 개최(6백여명 참가)

1980.04.09 수산대 1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문을 걸어 잠그고, 김광옥 학장 자진사퇴, 재임용탈락교수(6명)의 복직, 실험대학 모순점 시정, 학원내 언론, 출판의 자유, 서클활동의 자유화, 호국단 간부들의 사과, 학과대표 운영위원회, 학칙개정 등의 9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위, 100여명의 교내시위 및 이로 인해 무기한 휴강조치

1980.04.12 동아대 학칙개정을 위한 7개 단과대학별 공청회 개최(1천여 명 참가)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의 부활, 학도호국단의 전면철폐, 족벌운영의 지양, 등록금인하등의 개정학칙에의 명시요구

1980.04.14 동의공업전문대학 학생 3백여 명이 학칙개정 등 18개 항을 요구하며 농성

1980.05.08 동아대는 1975년 학도호국단 창설이래 6년 만에 학생대표선거를 통해 신해주(철학과 3년)가 총학생회장에 당선, 학생자치기구 출범

1980.05.08 부산대 단과대학 학생회장단 주최로 대운동장에서 시국에 관한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와 사회, 학원 등에 알리는 10개항의 구국선언문 채택하였는데 여기서, 학생들은 여기서 계엄을 해제하라, 2원집정부제 계획 중지하라, 정치인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에 충실하라, 정부는 노사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강구하라, 부정축재자를 엄단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라, 온 국민은 대학인의 결의를 신뢰하고 직무에 충실하라는 요구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철야농성 및 교내시위를 계속

1980.05.12 부산대 총학생회 선거 실시

1980.05.12 부산공업전문대학 학생 1천5백여 명 대학운동장에서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모순점과 불합리성의 시정을 요구하는 교내시위

1980.05.13 부산공업전문대학 학생 5백여 명은 병역혜택 등 8개항을 요구하는 가두시위 시도. ~17일까지 가정학습 및 휴강

1980.05.14 부산대 주최로 14일 오후에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11개 대학의 학생대표들이 시국공개토론회 개최. 이들은 '학원의 자율화, 정치일정의 단축, 노사분규의 평화적 해결'등을 주장, 학원민주화추진발기회(10.16 민주동지회의 전신, 정광민)를 조직하고 1,500여명이 시위. 동아대 학생 2천여 명은 20일까지를 민주화대토론 주간으로 설정, 비상계엄해제와 노동3권 보장 등에 관한 시국토론회 개최 '비상계엄 조속해제, 동국제강과 동명목재 근로자 생계보장'등의 10개항의 사항을 만장일치로 채택

1980.05.15 서울역 광장에 10만여 명의 대학생이 모여서 시위

1980.05.16 부산의대생 70여명, 의대강당에서 시국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0.05.17 부산대 총학생회 선거를 통해 이창훈(기계설계공학과), 황대연(법학과)이 당선되고 총여학생회장에 이정희(의류학과 3년)가 당선되었으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면서 총학생회의 부활 좌절

1980.05.17 전국적인 비상계엄 확대 실시, 휴교령

1980.05.18 광주와 전남일원의 '계엄해제'요구 시민들에 무차별 학살, 광주항쟁

1980.08.27 제5공화국 등장

A5 [사건 내용] 1980년 10 · 16 시민항쟁을 경험한 학생들이 학원내의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 또는 '학생대표자회의' 등을 구성하면서 학도호국단 체제의 전시동원체제를 벗어난 대중조직으로서의 학생회를 구성하고자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원자율화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면서 "학생회의 부활, 학생지도관실의 폐지 및 서클 활동의 자유보장, 학원사찰의 즉각 중지, 학내언론 및 사회언론의 자유 보장, 어용교수의 퇴진" 등을 중심으로 학교별로 진행된 학내민주화투쟁이다. 또한 이들은 학원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표했으며 시국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정부와 사회, 학원 등에 알리는 구국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여기서, "계엄을 해제하라, 2원집정부제 계획 중지하라, 정치인은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에 충실하라, 정부는 노사분규의 평화적 해결을 강구하라, 부정축재자를 엄단하라, 학원사찰을 중지하라, 온 국민은 대학인의 결의를 신뢰하고 직무에 충실하라"는 요구 등을 내세우기도 하고 그 결과로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는 가두시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도호국단체제를 지양한 학생회의 선거를 준비하게 되고 투표까지 실시하였으나 05.17 비상계엄과 함께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학살로 인해 전국적인 비상계엄의 확대 실시와 휴교령 등으로 학원민주화와 학생운동의 대중적 흐름은 물밑으로 가라앉고 만다.

A6 [관계 인물] 신재식, 이창훈, 황대연, 전찬수, 공노성, 정광민, 김동조

A7 [관계 단체]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공업대학, 수산대학교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1989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오십년사』, 1997

A9 [관련 사건] 5 · 18광주민중항쟁, 5 · 17계엄확대

A1 [사건명] **계엄철폐요구 유인물 배포사건**

A2 [사건 일시] 1980.05.19

A3 [사건 배경] 이 유인물 배포사건은 전두환 등 신군부의 5·17 계엄선포 직후 그에 대응한 부산지역 유일의 투쟁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학생운동의 학내민주화에 대한 관심과 선도성이 전국적인 정치사회적 문제로 상승·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A4 [전개 과정]

1980.05.14 부산대 주최의 11개 대학 학생대표 시국토론회 개최

1980.05.14 1,500여명의 학생들 교문 밖 진출 시도 후 연좌농성

1980.05.14 학교 도서관에 재집결하여 철야 농성에 돌입. 5월 17일 이후 시위 계획

1980.05.17 비상계엄 실시

1980.05.16 부산대 의대에서 시국에 관한 공청회 개최

1980.05.19 하오 7시경 부산의 남포동, 광복동 일원의 유인물 500여장 배포

A5 [사건 내용] 노재열(부산대 공대, 미화당건물), 김영(부산대 문리대, 부영극장), 배정열(부산대 구두방 골목)등이, 동아대와 부산산업대(현 경성대)등에 알린 후 등사기 유인물 "전국의 성전포고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 500여장을 살포한 사건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두환이 정권을 잡으려 유신망령이 해골을 굴리며 나오려 하는 이때에 '청년학도들이여 일어서라', '계엄철폐'등)을 주장하고 있음. 이 사건의 결과 노재열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배정열은 무혐의, 김영은 군 입대를 조건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A6 [관계 인물] 노재열, 김영, 배정열

A7 [관계 단체] 부산대학교

A8 [관계 자료]「전국의 성전포고에 즈음하여」(유인물)

A9 [관련 사건] 부림사건

A1 [사건명] **민주선언문 배포시위 사건**

A2 [사건 일시] 1981.04.06

A3 [사건 배경] 광주민중항쟁을 유혈진압한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가라앉아 있던 대중들의 투쟁의 요구를 모아 대중투쟁으로 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자 점차 이를 표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를 하게 되며, 광주항쟁 이후 최초로 많은 학생이 참가하여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도를 하였음

A4 [전개 과정]

1981.04.06 정수철, 김임선이 민주선언문 2백50매를 400여명의 학생에게 배포 및 낭독 후 바로 연행 당함 이로 인해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1981.06.11 부산대 사회관에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1,000여명의 학생이 스크

럼 짜고 교내시위를 함

1981.09.07 부림사건

A5 [사건 내용] 1981년 04월 06일 정수철(부산대, 문리대)이 부산대 중앙도서관에서 “현 정권은 5.17 쿠데타로 민주화를 짓밟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니 이를 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는 내용의 민주선언문 2백50매를 400여명의 학생에게 배포 및 낭독을 하였으며,, 김임선(부산대 공대)은 도서관 4층에서 위전단 100여 매를 창 밖 으로, 2백 50여장을 안에 있던 학생들에게 각 살포한 후 “4.19를 상기하자, 도서관 1층으로 모이자”고 선동했으나 바로 연행 당하고 바로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선도적이고 희생적인 투쟁의 결과물은 6월 11일에도 이어지는데 부산대 사회관에서 김진모(부산대 국문과 4년), 최병철(부산대, 국문학과), 유장현(부산대 전기공학과 4년) 등이 주도하여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며 유인물을 살포하고, 1,0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교내시위를 하게 되었음

A6 [관계 인물] 정수철, 김임선, 김진모, 최병철, 유장현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오십년사』, 부산대출판부, 1997

A9 [관련 사건] 부림사건

A1 [사건명]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A2 [사건 일시] 1982.03.18

A3 [사건 배경] 1982년 3월 18일 부산지역의 대학생들이 부산 미국문화원에 방화한 사건이다.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위컴의 "미국은 광주사태를 진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4개 대대의 한국군을 미국의 통제하에서 풀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동의"했다는 발표에서부터 ‘영원한 우방’으로서의 기존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결국 80년 12월 9일 광주에서의 미문화원 방화사건을 필두로 제국주의의 상징물로서의 미국 문화원에 대한 수많은 시위와 방화 및 점거농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사건은 투쟁의 격렬성과 과격성 등으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운동전반에 있어서 많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80년대의 수많은 반미투쟁과 광주, 대구 등 잇따른 미문화원방화사건 및 점거농성투쟁의 선도적 투쟁이 되었다. 결국 1985년 5월 23일~26일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A4 [전개 과정]

1982.03.18 오후 2시, 부산 미문화원 방화, 1망 사망, 3명 화상, 국도극장 3층 유나백화점 6층에서 유인물 200여장 배포, 미 국무성 희생자에 조의

1982.03.19 수사본부, 80년12월 광주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범 정순철을 배후조종 인물로 지목

1982.03.20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방화자 현상금 2,000만원

1982.03.22 전국시도에 수사본부 설치, 정순철에 이어 부산대 이호철을 용의자로 발표 수배전단 배포

1982.03.23 지하인쇄소에서 기름통 발견, 불온유인물 만들어 정치인 등에 우송하다 이만재 구속

1982.03.24 정순철, 이호철에 이어 5. 17당시 서울 학생시위 배후 조종자 박계동을 범인으로 지목

1982.03.25 치안본부수사대 전남영광에서 수배중인 정순철 검거.

1982.03.27 미문화원사건 관련 물통 맡긴 청년 수배

1982.03.30 사건에 가담했던 5명(최인순, 이미옥, 김화식, 최충언, 박원식) 및 이호철 검거. 문부식 등 일당 3명 검거

1982.03.31 방화조 최인순 추가 검거, 원주교구서 김현장도 검거

1982.04.01 주범 문부식·김은숙 자수(당국발표), 이 사건의 주모자인 문부식, 김은숙이 원주교구청 최기식 신부의 주선으로 자수, 사건 발생 14일 만에 문부식과 김은숙이 자수하고, 관련자 10여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

1982.04.03 지하서클 112개・89개 대학 조사(문교부 발표)

1982.04.04 미문화원 방화관련 9명 구속, 학원・광주사태 등 주동자 9명 수배

1982.04.05 이호철에 보안법 적용

1982.04.08 최기식 신부 부산압송·구속

1982.04.09 신부로서의 양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해 온 문부식 등을 설득하여 자수를 주선한 최기식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인은닉 혐의로 체포. 김현장을 방화사건의 배후조종혐의로 체포, 김영애 등 5명 구속함, 지하서클 등록하면 잘못 불문 처벌(문교부)

1982.04.10 문부식 등 9명 송치

1982.04.17 방화는 “대미 불신표현”이라는 선교회에서 성명

1982.04.17 “한국민 반미감정 없다”(부시 부통령 기자회견)

1982.04.21 선교협 “성명” 관련자 소환(서울지검)

1982.04.29 최기식신부 안보법 추가, 김현장 등 16명 기소

1982.05.06 “반미” 보편현상 아니다(워커연설)

1982.05.14 최기식 신부 공판

1982.06.14 미문화원 방화사건 첫 공판

1982.06.15 광주문화원 방화사건, 정순철에 10년 구형

1982.08.02 부산지검,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김현장·문부식에 사형, 최기식 신부에 징역5년·자격정지 5년 구형

1982.08.11 부산지법, 김현장·문부식 등에 사형, 최기식 신부 징역3년·자격 정지 3

년 선고

1982.12.13 대구고법,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김현장·문부식피고인에게 사형, 최기식 신부에게 징역 3년 선고

1982.08.11 정부 1,944명에 특별사면실시, 송건호씨 등 551명 복권, 최기식신부 등 형집행정지

A5 [사건 내용] 1980년 12월 9일 미 국무장관 브라운이 방한한 때를 맞추어 가톨릭 농민회원들에 의해 광주 미국 문화원 지붕에 구멍을 뚫고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는 방화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식을 통해 미국이 우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독재정권의 버팀목으로서 기능함을 확인한 광주의 민중들이 미국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비상계엄하의 언론에 대한 보도통제로 보도되지 않았다. 이러한 광주의 미문화원 방화사건에 대해 김현장으로부터 내용을 전해들은 문부식, 김은숙은 광주의 참상과 독재자들의 만행, 그리고 광주항쟁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상징적 의미로 부산 미문화원에도 방화하기로 결심하고, 1982년 3월 18일 4명의 여학생이 문화원에 직접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는 방화조로, 3명의 남학생은 부산 시내에서 유인물을 뿌리는 등의 내용으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은 실행에 옮겨졌다. 이날 오후 2시에 미문화원에 방화가 되는 시점의 시내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지 말고 이 땅에서 물러가라"는 제하의 성명서가 곳곳에 뿌려졌다. 이 성명서에서는 "우리 민족의 장래는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이 땅에 판치는 미국 세력의 완전한 배제를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자". 제국주의 미국의 상징인 '미국 문화원'을 불태움으로써 "반미투쟁의 횃불을 들어 부산시민의 자각을 호소"한다고 미문화원에 방화하는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반미운동의 무풍지대로 인식되어온 남한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국은 물론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방화사건의 주범으로 밝혀진 김현장과 문부식은 방화의 동기를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고 5.18에 있어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서의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였다는 것은, 미국과 그 상징물로서의 미국문화원이 이제는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외세에 대한 문제제기와 본격적인 반미자주화운동의 기점이 되는 선도적인 투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나 '방화'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은 많은 논란을 가져왔으며, 여기에 군사독재정권의 극단적인 대응으로 인해 광범위한 대중의 민주항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많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김현장·문부식 등은 사형, 최기식 신부는 징역3년·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었으나, 1983년 8월 정부의 특별사면 및 형집행정지를 받았다. 또한 부산에서의 미문화원 사건이후 '반미'의 문제가 전국적인 학생운동진영에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반미와 자주화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

로 1985년도에는 전국학생총연맹(전학련) 소속 학생들에 의해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 문화원 농성사건' 등이 일어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반미투쟁이 발생하게 된 효시로 작용하였다. 그 이후에도 부산 미문화원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과 점거하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그 무렵의 반미 관련 사건들을 살펴보면,

1985.04.09 부산대생 정광모, 이순남, 권서용등이 "대통령 방미 반대"등을 외치며 미문화원에 투석 및 반미시위.

1985.11.13 김점옥, 최경수, 김현철등이 중앙동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직원 휴게실을 점거하고, '수입개방 철회'등을 요구하며 농성, 김정호, 최영춘, 이성희, 변영철등은 민정당사 점거시도.

1986.05.20 전국 23개대 학생 8,300명 반미구호 외치며 교내 시위

1986.05.21 서울지역에서 온 학생들에 의해 '부산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 발생(서울대 및 고려대 생 21명).

1986.05.22 '부산 미문화원 점거지지 및 광주항쟁 실천대회'

1986.12.05 부산대 김봉섭(자민투 위원장), 김책, 최원석, 김종필, 이창림, 정동수, 박상헌등 13명의 학생들이 부산 미문화원 점거 시도(부산대학교 오십년사 편찬위원회: 727).

이러한 반미시위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의 결과, 1929년에 지어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서 일제 식민지 수탈의 기구로써 기능하고 해방 이후에는 미국 문화원으로 사용되어 오던 아메리칸 센터(부산미문화원)가 1999년에야 비로소 반환되었으며, 지금은 부산시민에게 돌려져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을 위한 부산 '근대 역사박물관'으로 개방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

A6 [관계 인물] 문부식, 김은숙, 이미옥, 김지희, 최인순, 류승렬, 박원식, 최충언 (김현장, 김화식, 최기식 신부, 김영애 등)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중앙일보』(1982.03.30)

A9 [관련 사건] 광주미문화원방화사건, 부산미문화원투석사건, 부산미문화원점거사건, 서울미문화원점거사건

A1 [사건명] **해운대 전두환방일 반대시위**

A2 [사건 일시] 1984.08.15

A3 [사건 배경]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유혈진압과 1982년에 있었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을 이후로 침체되어 있던 지역의 학생운동은 써클적인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대중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시도하게 된다. 이때 광주 민중항쟁을 피로 진압

한 전두환 정권의 일본방문을 계기로 대중적인 문제제기를 목적으로 한 대중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는데, 이는 또한 학내에서의 사복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공간에서의 투쟁의 활로를 모색하게 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A4 [전개 과정]

1984.08.15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두환 대통령 방일반대'를 주장하는 가두투쟁 개시, 부산대 중심의 학생들 300여명 참가 1시간여 시위. 8·15기념식을 가진 뒤 '우리는 반민족적 방일행각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투석전을 벌임.

A5 [사건 내용] 1984년 8월 15일 부산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전두환 대통령 방일반대'를 주장하는 가두투쟁이 전개되었다. 시외에서의 가두투쟁은 철저한 준비 속에 벌어졌기에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한 시간 여 동안이나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당시의 조건을 고려한다면 성공적이었다 하겠다). 학생들은 8.15기념식을 가진 뒤 '우리는 반민족적 방일행각을 절대 반대한다'라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투석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오리'라 불리는 학생은 머리를 다쳐 아직도 그 후유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생은 바닷가를 헤엄쳐 도망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가두시위로 인하여 관계된 학생 10여명이 제적되었다.

A6 [관계 인물] 전경진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부산민주운동사』,1998, p.468

김형균 외,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3, 1993, p.56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경성대 진성일 투신사망 사건**

A2 [사건 일시] 1986.11.05

A3 [사건 배경] 1985년 이후 전국적으로 총학생회의 부활이 제기되면서 '대중운동의 전망'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는 연일 학생자치기구의 부활 투쟁으로 전개되었으며, 학내시위와 철야농성으로 표출되었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사건의 하나로는 전국적인 학생 연대조직의 결성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학생운동이 소수의 투쟁에서 다수의 대중투쟁 양상으로 전화하게 되고, 대중투쟁의 전개 속에서 서울지역과 타 지역 학교간의 상호교류가 증가하는 가운데 차츰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 경성대에서 진성일 열사의 분신이 발생하고, 이 사건의 파장이 부산지역의 타 학교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1987년 부총협이라는 연대조직이 건설되는 간접적 계기를 마련한다.

A4 [전개 과정]

1964.01.26 부산 출생

1982.02.00 동래고등학교 졸업

1982.03.00 경성대학교(당시 부산산업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입학

1986.11.05 '건국대 농성사건 해명, 군부독재타도, 미 제국주의 축출'의 유서를 뿌리고 시청각관 5층에서 분신·투신.

A5 [사건 내용] 1986년 애학투련의 건대 농성투쟁에서 '황소진압작전'이라는 살인적 테러로 학생들을 진압하고 관제언론에서는 공산혁명분자의 난동이라고 왜곡 보도하는 속에서도 침묵뿐인 산업대(현 경성대) 학우들에게 경종을 울릴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86년 11월 5일 "건국대 농성사건에 즈음하여"와 "산대 학우에게"라는 유서를 뿌리고 이 시대의 침묵과 어둠을 사르려 분신 · 투신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건국대학교 애학투련

A8 [관계 자료] 진성일 유서(사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유적지 부산지역 조사·발굴사업 보고서』, 2002, 141-4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대 장재완 자살 사건**

A2 [사건 일시] 1987.03.27

A3 [사건 배경] 1987년의 사회적인 환경은 학생 운동가들에게 강한 수준의 조직적인 결의와 보위수준을 요구하였다. 운동에서의 문건이나 검거가 조직의 와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체포로 이어지기도 하였기에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식이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문건유출과 조직의 와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군 복무중이었다는 상황적인 조건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자살을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A4 [전개 과정]

1987.03.27 금정산 야산에서 자살

A5 [사건 내용] 방위병으로 근무 중이던 장재완은 귀가 도중 민족민주운동의 중요 문건과 책자가 든 가방을 분실하였고, 이것이 보안대에 넘겨진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동지들과 조직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였다. "…본인의 중대한 과오로 인해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 나의 육체적 생명을 단절합니다. 우리의 혁명과 투쟁이 너무나 순결하고 숭고한 것이기에 나의 희생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혁명을 향한 민중들의 투쟁은 더욱더 가열차게 격렬해질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부산대 총학생회로 보내고 자결해 그 주검이 1987년 3월 27일 야산에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유적지 부산지역 조사·발굴사업 보고서』, 2002, 143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대 양영진 투신사망 사건**

A2 [사건 일시] 1988.10.10

A3 [사건 배경] 1987년 6월항쟁을 경험한 부산지역의 학생운동은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성장한 학생운동은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부산지역의 주류운동권은 통일운동을 새로운 투쟁의 주요한 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하게 된다. 넘쳐나던 대중의 투쟁열기와 조직적 역량의 한계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조건은 부산지역의 학생운동진영에 엄청난 자기희생과 헌신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대중운동의 긴장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부산지역의 학생운동은 한 대학생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다.

A4 [전개 과정]

1967.03.16 경남 함양 출생

1986.02.00 부산 동래고등학교 졸업

1986.03.00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입학

1988.00.00 국문과 학술부장 역임, 전방 입소거부 투쟁

1988.08.10 방위병 입대

1988.10.10 부산대 재료관 5층 난간에서 투신, 운명. 광주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안장

A5 [사건 내용] 1967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한 양영진은 부산의 동래고를 졸업하고 1986년에 부산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였고, 1988년에는 국문과 학술부장을 역임하였고, 전방 입소거부 투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가 그해 8월에 방위병 입대를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10월 10일 양영진(국문학과 2년, 휴학 중)군은 학교의 재료관 5층에서 투신 자살하였던 것이다. 양군은 투신 당시 방위 복무 중이었으며, '민족·해방·민중·사랑·어머니·민주·투쟁' 등을 쓴 혈서와 '사랑하는 어머니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등 2통의 유서를 남겼다. 양군은 입영 전인 1학기에는 전방입소 거부 투쟁을 벌였고, 1987년부터 추진된 '부대문학'에서 활동하는 등 문학도로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양영진 군의 장례는 '민족해방열사 고 양영진 민주시민장 장

례위원회' 주최로 10월 16일 시민장으로 거행되었으며, 서면로터리 노제에는 1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운집하였다. 양군의 유해는 이날 오후 10시 광주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1천여 명의 시민·학생들이 모인 가운데 노제를 갖고 12시 망월동 묘지에 안장되었다. 양영진은 1988년 10월 조국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이 땅의 올바른 문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며, 8월15일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지역 선전부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런 군 입대로 인해 군의 폭력적 지배 방법과 법적 표현에 미 제국주의에 복종·예속된 한반도 수탈 구조를 실감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인간의 뜨거운 피와 순수한 생존 원동력인 열정으로 민족통일을 조국산하에 뿌리박기 위해 1988년 10월10일 부산대 재료관 옥상에서 "이제 조국 산하에 실하디 실하게 뿌리박은 진달래가 되고파 하며…"라고 절규한 후 투신하였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부산대 시월문학회

A8 [관계 자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유적지 부산지역 조사·발굴사업 보고서』, 2002, 144-45

A9 [관련 사건] 남북학생회담, 전방입소거부투쟁

A1 [사건명] **동의대 5·3항쟁**

A2 [사건 일시] 1989.05.03

A3 [사건 배경] 1989년은 초반부터 현대중공업 파업, 문익환 목사 방북, 전교조 건설투쟁 등 각계의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온 한 해였으며, 특히 문익환 목사의 방북, 전대협의 평야축전 참가 결의 와 같은 통일운동이 한층 높은 수위 속에 진행된 한 해였다. 문익환 목사의 방북 이후 노골화되고 있던 정권의 공안정국 조성 기도에 대해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에서는 5월 1일부터 4일까지를 '5공 부활·민주 말살 주범 노태우 퇴진을 위한 12만 청년학도 총궐기 주간'으로 설정하고 연대집회·궐기대회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와중에 5월 3일 5시경 동의대 학생들이 지난 5월 1일 가야 1파출소장의무차별 총기난사에 항의하며 5월 2일 '총기난사 규탄시위' 도중 시위대 속에서 정보수집 중이던 전경 5명을 붙잡아 중앙도서관에 연행시켜 놓고 철야농성을 전개했다. 이에 경찰은 5개 중대 800여명의 경찰병력이 피납된 전경 구출을 위해 100여명의 학생들이 농성 중이던 중앙도서관 건물에 진입하여 구출작전과 진압작전을 전개하던 도중 도서관 7층 세미나실 복도에서 폭발적인 화재가 발생하여 7층 세미나실에 진입하였던 1개 소대 정도의 전경 가운데 7명이 소사 또는 추락사하고, 경찰관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경찰관 3명은 현장에서 질식 혹은 병원이송 중 사망, 3명은 불이 붙은 채 건물 뒤쪽 창밖으로 뛰어내려 추락 사망했으며,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5월 3일의 동의대 사태는 진압 경관 6명의 죽음을 몰고 온 것만으로도 학생운동의 방법과 도덕적 정당성에 커다란 타격을 주면서 공안정국 조성에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였다. 동의대 항쟁의 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과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의 안정을 희구하던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성 결과 학생운동을 포함한 민족 민주운동 전체는 수세적인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문익환 목사의 방북 및 동의대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공안 탄압과 일반 학생과 시민들의 안정추구적 성향으로 인하여 학생운동은 대중적 지원을 상실하면서 차츰 그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선 5월 10일 부산대의 학생총회에 모인 500여명의 학생들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도 못한 채 해산된 것이나, 동아대의 "노태우 완전 퇴진을 위한 민족동아 투쟁본부" 발족식에 겨우 200여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에서도 확인되었다. 이때까지의 대중 집회가 많은 대중의 관심 속에 진행되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A4 [전개 과정]

1989.05.01 전국 노동자 집회 원천 봉쇄 및 메이데이 기념집회.

14:00 4월 30일 "전국 노동자 집회 원천 봉쇄 및 메이데이 기념집회"를 가짐.

14:00 가야 1파출소까지 평화시위를 하고 귀교하던 중

16:30 4월 30일 집회 원천 봉쇄에 대한 항의로 학우 10여명이 가야1파출소 쪽으로 시위 도중, 정성원(경영3)학생 연행. 이에 격분한 학생들이 화염병 2개를 파출소 앞 화단에 투척. 이때 가야 파출소 소장이 카빈소총으로 실탄 10여발을 학생들에게 150여 미터 쫓아오며 사격을 가함.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여명의 학생들이 다시 파출소로 이동하자 파출소 앞에서 150여 미터 떨어진 도로로 나와 14발을 학생들에게 지향사격(파출소 소장의 발언 “다 죽고 싶으면 내려와라” 하는 등 살인적 총기난사(건물에 탄흔 자국 있고, 탄피확보)에 100여명의 학생들은 도서관 4층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

1989.05.02 13:30 자연대 로터리 앞에서 총학생회 후보 마지막 유세를 가짐(집회가 끝나갈 쯤 사복체포조 1명 체포)

16:00 학생 30여명이 학교 앞 삼거리 앞까지 진출하여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치(이 과정에서 사복체포조 4명을 체포)이 중 5명은 학생회관 4층 세미나실에 감금

16:00 이후 교문에서 두 차례 공방전을 전개. 이 과정에서 학생 8명이 연행. 백골단 전경의 공격에 의하여 학우 1명이 월성당구장 3층에서 떨어짐(20여 미터, 중태) 학우 1명은 교문 옆 20여 미터 난간에 떨어짐(사학 1년, 박창욱).

18:10 교문에서 대치 중 경찰 측과 협상을 시도

19:00

1차 협상 - 연행된 학생 8명, 전경 5명과의 교환에 합의. 그러나 전체 학생이 5월1일 연행된 정성원군을 포함하여 학생 9명과 전경 5명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

2차 협상 - 장소(농협부근), 참여한 학생대표(총 부학생회장, 평학생 1명), 학교측(학생과장), 경찰측(시경 부국장, 부산진서장)

* 학생주장 = 정성원 포함 9명 요구,

* 경찰주장 = 정성원은 안됨(검찰이송), 이날 연행 학생 8명과 교환주장. 협상 결렬 (경찰측 = 인질 5명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뒤 안창마을쪽으로 백골단 200여명을 투입 시키겠다고 함).

19:00 협상 결렬, 학생들은 총기난사에 항의 연행학생 석방을 위한 농성결의, 도서관으로 이동(30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축소), 도서관 4층 열람실로 집결(도서관사수결의)

20:00 도서관 4층에서 7층으로 이동(진압시 4층은 위험하다고 판단) 인원점검 100여명. 단대별로 각층 역할 분담(방어를 위해), 이후 자발적 방어준비(1,2,4층 바리케이트 설치).

21:00 학교측과 대책 협의(학생회관 4층 학생과 사무실).

* 참석자 - 총학생회장, 단대 대표 10명, 총장, 학생처장, 각 단과대 학장.

* 협의사항 - 인질 교환건. (정성원 석방 안됨을 확인 - 30분경 결렬)

1989.05.03 05:50 백골단 200명 도서관 재투입. (도서관 9층까지 올라와 옥상 문을 부숨)이후 철수.

05:55 학생, 전경 대화(총학생회장)

06:17 백골단 전경 도서관 재투입

06:20 건물 파괴하는 소리, 불탄 인체1구 들것으로 수송.

06:24 이종현 인질 전경 5명 데리고 내려옴.

06:50 백골단, 전경철수(먼저 투입된 7개 중대 규모)일부 백골단 학생회관 난입. 기물 파손. 백골단, 전경 난투극, 지휘계통이 문란해짐. 지휘에 불응.

07:00 전경, 백골단 도서관 재 포위

도서관 옥상상황

05:20 옥상 중앙으로 집결하고 비상계단 9층까지 진출한 경찰간부(중대장)와 대화시작

* 중대장 : 내 부하들을 풀어라. 내 부하를 풀면 우리도 철수한다.

* 총학생회장 : '좋다. 믿는다. 우선 경찰이 먼저 내려가라. 우리 스스로 전경들을 데리고 내려가겠다.' 이때 중대장과 대화 중 경찰은 해머로 옥상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빗장이 부수어 졌다.

* 중대장 : 내 부하 무사한가?

* 총학생회장 :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 중대장 : 고참 부하이름을 호명(고참부하 : 무사하다)

* 총학생회장 : 직접 확인해라. 옥상에 올라 와라

* 중대장 : 혼자는 못가겠다. 4~5명과 함께 가겠다. (옥상문을 통해 등장) 전경 5명이 안전함을 확인. 학생들에게 "아무런 구타도 않고 무사히 보호해줘서 고맙다, 진입과정에서 출입문등 기물을 파손한 것과 최루탄난사를 이해해 달라. 부하를 데려가니 우리도 철수 하겠다"고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로 환영

06:20 학생들은 대책을 논의하고 “회장인 내가 오늘의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자 오태봉 학우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모두들 울음바다가 되었음. 이후 회장과 오태봉은 9층 복도를 통해 전경들에게 둘러 싸여 통로와 도서관 정문을 통해 스스로 연행되었다(연행되는 과정에서 오태봉은 전경들로부터 한쪽 어깨를 얻어맞아 못쓰게 되었으며 회장은 머리를 심하게 얻어맞아 피를 흘리며 연행되었다).

07:00 학교측에서 총장 이하 몇 명이 옥상에 있은 학생들을 설득하기 위해 올라왔으며, 그 다음에는 옥상에 있던 학생들은 3열로 어께를 걸고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자발적으로 내려와, 대기중이던 경찰에 연행되어 버스에 실려 떠남.(07:20분) 연행되는 과정에서 무차별 구타당함

07:30 전 상황 종료

A5 [사건 내용] 이 항쟁은 학생운동 사상 최악의 인명피해를 낳았으며 최대의 구속자, 최고형의 징역형 등으로 결론이 맺어진 학생운동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당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총 95명을 검거해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77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했으며, 동의대는 81명의 학생을 제적했다)되었으며, 특히 경찰관 다수가 화염병이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기도 전에 제도언론을 통하여 학생들이 진압경찰들을 살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인 양 혹독하게 매도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학생운동의 폭력성, 과격성, 비도덕성을 비난하였다. 정치권 또한 여야 만장일치 합의하에 화염병처벌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치권의 진상조사단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5월 3일 연행되어 재판에 회부되기도 전에 연행학생들은 검,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발표와 제도언론의 대대적인 왜곡보도에 의해 이미 ‘살인마’, ‘폭도’로 매도된 상태에서 99명의 연행 학생 중 72명의 학생들이 이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서는 무기징역 1명, 징역20년 1명, 징역15년 2명, 징역13년 1명, 징역12년 1명, 징역7년 4명 등 30명이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고, 26명이 1심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30여명은 대법원 상고 기각과 함께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흩어져 복역하였다. 그리고 5·3에 관련된 100여명의 학생들이 문교부 휴교령 조치와 함께 학교당국에 제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석방된 46명의 학

생들 중 25명이 강제징집 당하였고 나머지는 학교를 떠나 5·3진상규명과 구속동지 구출투쟁을 벌였다. 급격한 정세의 변화는 1심의 재판과정에서 살인과 살인미수부분은 무죄선고, 그리고 2심에서 박세진 등 13명에게 방화치사상 부분 일부분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오히려 선고형량은 상향조정되어 오태봉은 15년에서 20년, 특히 5·3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재발생과 무관한 박세진(2심에서 방화치사 무죄)은 15년 그대로 선도하는 등 2심에서는 작게는 1년에서 5년까지 학생들에 대한 형량이 올라갔다. 특히 동의대 당국은 휴교령해제의 조건으로 양심적인 교수 3명을 해임, 정직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해임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학교당국은 이를 거부하였고 제적된 학생들에 대한 징계철회의 문제도 마무리 되지 못하다 최근에야 결말이 났다. 이러한 동의대 5.3항쟁은 최근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그 사건의 과정과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하겠다. 5.3 동의대 항쟁으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90명이며, 이 중 3명은 훈방조치 되었다. 10명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47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30명은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이들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보안법 ② 살인 ③ 살인미수 ④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⑤ 현존건조물 방 화치사 ⑥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사 ⑦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⑧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A6 [관계 인물]

▪ 형 확정자(30명)

이 름	학 과	검사구형	1심	2심 형량
윤창호	통신 3	사형	무기	무기
오태봉	철학 4	사형	15년	20년
김영권	미술 4	무기	15년	15년
박세진	화학 4	사형	15년	15년
이종현	법학 4	무기	13년	13년
이철우	영문 4	15년	13년	12년
이준경	철학 3	15년	10년	7년
하상호	법학 3	15년	8년	7년
김형수	법학 3	15년	7년	7년
이남우	법학 3	12년	6년	7년
이영재	무역 3	12년	4년	5년
조용우	영문 3	12년	4년	5년
송이근	경영 3	10년	4년	5년
이승석	행정 3	10년	5년	5년
신상만	행정 3	10년	5년	4년
김준식	정외 2	10년	5년	4년

정성호	사학 3	12년	6년	4년
최형조	토목 4	7년	4년	3년
성해경	법학 4	12년	5년	3년
이관구	경영 2	10년	4년	3년
김태호	정외 2	12년	4년	3년
윤원하	화공 2	단5. 장10	4년	3년
조성철	경영 2	10년	5년	3년
김달규	정외 3	10년	4년	3년
김채현	기설 2	단5. 장7	3년	3년
김진안	정외 3	10년	3년	3년
김호준	물리 4	7년	2.6년	2.6년
조동식	경영 2	7년	2.6년	2.6년
조주현	철학 4	10년	3.6년	2년
정성원	경영 3	7년	2년	2년

▪ 집행유예자(45명)

이름	학과	검사구형	선고
이정진	일어 3	10 년	3.6년 집유 3년
김순애	일어 4	10 년	3.6년 집유 5년
노창현	건축 3	7 년	2.6년 집유 4년
이유인	경영 3	5 년	2 년 집유 4년
이진복	법학 3	3 년	1.6년 집유 3년
박영우	법학 3	3 년	3 년 집유 3년
강창석	전산 3	3 년	1.6 년 집유 2년
김수현	행정 4	5 년	1 년 집유 4년
박진규	무역 3	7 년	2 년 집유 5년
이봉협	일어 1	5 년	3.6 년 집유 3년
정수항	철학 2	5 년	2.6 년 집유 4년
김정호	경제 2	3 년	2.6 년 집유 4년
최대철	경영 2	5 년	2 년 집유 4년
백상현	정외 3	7 년	2.6 년 집유 4년
유명식	경영 2	5 년	1.6 년 집유 3년
최기섭	경영 2	5 년	1.6 년 집유 3년
이영진	경영 2	3 년	2.6 년 집유 4년
성낙표	경영 2	3 년	3 년 집유 4년
김체경	토목 2	5 년	1 년 집유 2년
이중근	회계 3	10 년	4 년 집유 5년
김동호	법학 3	7 년	2.6 년 집유 4년
문현득	독문 4	7 년	3 년 집유 5년
조규갑	체육 4	7 년	3 년 집유 5년
조상권	법학 3	7 년	2 년 집유 4년
양진욱	철학 4	7 년	3 년 집유 5년
이영석	정외 3	3 년	2.6 년 집유 3년
김천도	독문 4	7 년	3 년 집유 5년

조봉수	물리 3	3 년	2 년 집유 3년
위석복	토목 3	7 년	3 년 집유 5년
손영일	사학 3	5 년	2 년 집유 4년
한길복	경영 2	7 년	3 년 집유 4년
김태호	법학 3	5 년	2 년 집유 4년
윤필성	정외 2	10 년	2 년 집유 4년
박관수	법학 3	7 년	3 년 집유 5년
윤동근	정외 2	3 년	2 년 집유 3년
심구영	정외 2	5 년	3 년 집유 5년
김상우	정외 2	3 년	3 년 집유 5년
김두광	화학 3	3 년	1.6 년 집유 3년
조득진	사학 4	3 년	2 년 집유 3년
이원선	화공 2	5 년	3.6 년 집유 5년
박정수	법학 2	5 년	2 년 집유 3년
조현덕	경영 3	5 년	1 년 집유 2년
강승모	전산 2	5 년	2 년 집유 3년
이운호	경제 4	5 년	2 년 집유 3년

▪ 기소유예자

성 명	학과	혐의
김영철	법학 2	7.8
안지웅	정외 1	7.8.9
신정근	행정 1	7.8
이성기	행정 2	7.8
김성진	경제 2	7.8
서순오	법학 1	7.8
오재성	정외 1	7.8
김상권	법학 1	7.8
김진민	정외 1	7.8.9
서경태	법학 1	7.8.9

▪ 수배자: 고범산(건축4년; 방화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등)

A7 [관계 단체]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 5 · 3동지회, 민주화운동가족실천협의회, 동의대총학생회

A8 [관계 자료]

5.3 동의대 항쟁 공동 대책위원회 ·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5.3 동의대 항쟁』

[부경-청학6] <양심선언문>(1989.5.8 서울시경 제3기동대 97중대 사복진 압 중대 대원 수경 이상철, 유성호, 상경 정균한, 손동권, 강동주, 수경 황원진), 5.3동의대항쟁공동대책위원회 ·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5.3 동의대 항쟁』

[부경-청학7] <성명서>(통일염원45(1989).5.2 동의대학교총학생회), 5.3 동의대항쟁공동

대책위원회 ·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5.3 동의대 항쟁』

A9 [관련 사건] 문익환목사방북사건, 정원식총리계란세례사건

4. 노동운동

<개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부산·경남지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주요 사건은 모두 9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진 67개 사건이다.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단연 노동운동 부문으로 무려 30건, 약 45%에 달한다. 그 밖에는 청년학생운동이 16건으로 두 번째 많았으며, 인권운동과 연합운동이 각각 7건과 5건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보인다. 나머지 정치, 종교계, 학술운동 부문은 2~3건 정도의 미미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물론 6월항쟁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표현 및 집회의 자유가 진전된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보건의료운동 등 많은 부문운동들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었으나, 엄혹한 독재정권 시절에 전개된 지역민주화운동이었기에 1980년대까지는 그다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다).

이처럼 노동운동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산업화된 지역의 특성상 자명한 귀결로 해석된다. 본질상 사회운동의 핵심은 계급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화된 사회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사회운동은 결국 인간의 삶을 기초로 발생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은 그 삶을 지탱해주는 산업현실과 그에 따른 여러 종사자의 삶의 조건, 즉 계급상황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민주화운동의 핵심도 궁극적으로는(형식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민주화를 목표로 하기로는) 노동, 농민, 빈민 등 계급적 범주의 세력이 담당하게 된다. 다만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울산-부산-마산·창원-진주·사천에 이르는 임해지역 공업벨트를 따라 노동운동이 특별히 발달한 반면 농민운동이나 빈민운동은 취약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30건의 노동운동부문 사건 가운데 무려 25건이 1980년대 이후에 일어난 것이었다. 이는 1970년대까지는 노동운동을 포함한 계급적 저항들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독재권력의 가혹한 탄압이 그 배경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응한 계급세력의 형성과 성장이 그만큼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1960~70년대의 산업화 기간을 경과하면서 노동계급의 성장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서 1980년대부터의 폭발적 노동운동의 분출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노동운동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즉 1950년대에는 부산부두노동자들이나 미군종업원들의 파업투쟁들이 중심적인 것이었고, 1960-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의 가혹한 억압정책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는 이렇다 할 노동운동 사건이 거의 발생조차 하지 못하였으나, 유일하게 1974년 신흥 공업도시 울산에서 <현대조선소 폭동사건>이 일어났고, <인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의 김영태 섬유노조위원장 통대 낙선운동>이 1978년에 일어난 바 있을 뿐이다. 그 이후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무너진 이후로는 1980년<연합철강 노동자투쟁>으로부터 1991년 <신발노동자 권미경 투신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노동운동 사건들이 분출한다. 특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6월항쟁이 이루지 못한 분배문제와 계급문제에 대하여 <7~8월 노동자 대투쟁> 과정에서 노동계급 자신의 직접투쟁으로 쟁취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부산 ·경남지역 노동운동도 대부분 이 시기에 분포한다.

A1 [사건명] **부산 부두노동자 총파업**

A2 [사건 일시] 1952.07.17~31

A3 [사건 배경] 1952년도의 전쟁이 진행되던 당시의 한국경제에서 물가가 폭등하였지만 부두노동자의 일용 노임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서 1952년 6월 말로 시효가 끝나는 미군작업계약 갱신 입찰을 앞두고 임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유연맹(위원장 박중정)과 그 산하 부산부두노동조합(위원장 윤효량)이 1952년 6월 23일 미8군작업 계약업체인 각 하역회사에 현행 노임의 280% 인상요구서를 발송하고 조합원들에게는 단결행동을 하자는 것에서 시작됨.

A4 [전개 과정]

1952.06.23 노임인상요구서 발송

1952.07.01 실력행사 불사방침 천명

1952.07.17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노동자 1,600여명이 제1차 파업 단행. 7월 17일 오후 6시 파업 종식

1952.07.29 상오 7시 제2차 총파업 돌입

1952.08.01 총파업 종결

A5 [사건 내용] ○ 제1차 총파업 : 1952년 6월 23일 미8군 작업 계약업체인 각 하역회사에 노임인상요구서 발송하였으나 회사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7월 1일 실력행사 불사방침을 천명함. 이에 미제2병참기지사령부 민사처장이 6월 29일 미군화 노임(美軍貨勞賃)을 7월 1일부터 인상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게 됨. 7월 16일 하오 5시까지 협상하였으나 결렬. 1952년 7월 17일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의 교대시간에 파업을 단행. 부산 제2,3,4부두와 중앙부두 하역작업 종사 노동자 1,600 여명이 파업에 돌입. 이에 정부당국은 파업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 숙의. 3시간에 걸친 회합에서 노사간은 3개항의 합의를 보고 각서를 작성하고 7월 17일 오후 6시부터 파업을 종식시킴.

○ 제2차 총파업 : 하역업자들은 7월 17일 회의 후 군화작업(軍貨作業) 계약을 맺고 있는 하역회사들로서 노임인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에 명시된 24일까지 시한부로 해결하려고 미국 계약처와 교섭을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약속 시한 24일에 미군측에서 임금을 인상하여 줄 때까지 노동자 1인당 1천원씩 증액지불하기로 제안. 노조측은 이를 거부함. 미군측은 쟁의 타결에 대한 노력이 없었음. 이에 노조측은 미당국에서 받은 임금의 전액을 노조측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하루의 기일을 연장하여 7월 25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그러나 반응이 없게 되자 다시 시한을 28일까지 연장하였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음. 결국 7월 29일부터 제1,2,3,4부두, 중앙부두는 물론 수영과 해운대를 포함한 부산 전역의 군작업(軍作業) 노동자 전원이 파업에 참가. 7월 30일에는 외자(外資) 하역 노동자까지도 동맹파업에 들어감으로써 부산항은 완전히 마비. 미군당국은 7월 30일 미군화작업에 25% 노임인상을 수락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이것으로는 조합원들을 취업시킬 수 없었으므로 31일에도 파업은 계

속됨. 결국 한국정부 당국이 적극적 조정에 나서면서 미군도 포함한 재회합을 7월 31일 하오 1시 미제2병참기지사령관실에서 “청부(請負) 100% 인상, 일용(日傭) 200% 인상, 대기료 300% 인상, 단 청부는 6월 25일부터 25% 소급실시하고 8월 1일 나머지 75%를 인상하며 3개월 내에는 인상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총파업이 종결됨.

A6 [관계 인물] 박중정(대한노총자유연맹 위원장), 윤효량(대한노총 자유연맹 산하 부산부두노동조합 위원장), 이진수(국회의원)

A7 [관계 단체] 대한노총자유연맹, 대한노총자유연맹 산하 부산부두노동조합

A8 [관계 자료] 한국부두노동조합, 『한국부두노동운동백년사』, 1979.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전국미군종업원노조 임금인상 쟁의**

A2 [사건 일시] 1954.05.27~1955.03.00

A3 [사건 배경] 한국전쟁 이후 부산항에는 많은 미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어 거기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그 수는 대략 1만 명 정도 되었는데,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가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계속되고 있었으나 임금수준은 정체되고 있어서 많은 임금노동자들의 불만이 팽배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미군부대 근무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쟁의가 발생하게 되었다.

A4 [전개 과정]

1954.05.27 제1차 쟁의가 진행

1954.09.01 미 극동사령부의 임금 부분인상 방침에 노조측은 불만이 없지 않았으나 다음 과제로 미루고 일단 쟁의를 중단하였다.

1954.11.20 미군측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시 제2차 파업을 시작하였으나, 미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75% 인상을 실시하고 이듬해 1955년에는 일부 미군이 철수까지 하게 되어 쟁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A5 [사건 내용] 1954년 5월 27일부터 시작된 제1차 쟁의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120% 임금인상과 기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였고, 그에 대한 5월 28일의 최후 교섭에서 8월 5일 기한으로 요구조건을 수락할 것을 최후 통고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이에 노조는 8월 6일 다시 ① 최저임금을 시간당 70환으로 인상하고 현재의 재적인원을 안착시키는 동시에 백홈(back home) 철폐, 스탠바이(stand by) 시간 단축, 출근 시에 전(前) 노임을 지불할 것 ②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해 미군 당국이 8월 8일까지 회답이 없을 시에는 8월 9일 24시간 시한부 파업을 단행할 것임을 사전 통보했다. 9월 1일 미 극동사령부는 부산 미군노동자들의 노임을 부분적으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미 후방기지사령

부를 통해 전달해 왔다. 인상의 내용은 1시간당 1급 21환 50전, 2급 28환, 3급 37환, 4급 이상 80환으로 노조가 요구한 평균 110환에는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으나, 우선 이를 수락하고 그 이상은 다음 기회의 투쟁과제로 남겼다. 이리하여 미군부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로 남게 되었으므로 1954년 11월 20일 다시 제2차 쟁의를 제기했다. 노조는 140%의 임금인상을 12월 1일부터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미군 당국은 일방적으로 75% 인상을 실시하고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1955년 3월부터 일부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많은 실업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미군종업원노조는 조합원을 상실하고 그 활동도 자연히 위축되어 임금인상 투쟁은 미해결로 남은 채 후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전국미군종업원노조

A8 [관계 자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운동사』, 1979, pp.411-1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제3부두 사건**

A2 [사건 일시] 1954.07.01

A3 [사건 배경]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54년 7월 1일 이전까지 제3부두에서 군수화물 작업을 담당해 오던 극동운수주식회사의 하역권이 조운 부산지점으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일어남. 군수화물 하역작업에 대한 입찰을 계기로 단위노동조합으로 분열된 비극

A6 [관계 인물] 김희봉, 김기옥

A7 [관계 단체] 제3부두노동조합

A8 [관계 자료] 부산부두노동약사편찬위원회, 『부산부두노동약사』, 1969.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현대조선소 폭동사건**

A2 [사건 일시] 1974.09.19~20

A3 [사건 배경] 1973년도 9월 이후부터 사업주인 현대측에서는 직영기능공을 도급제 방식의 위임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하여 노동자들의 불만감은 계속 누적되어오던 상태였는데, 이러던 와중에 1974년 울산의 현대조선 작업현장의 기능공 조장 한 사람이 해고되고, 그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급제로 넘겨졌다는 사

실이 전 공장에 퍼지면서 격분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마침내 폭동으로 비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중화학공업화 초창기, 기업은 노동자를 극한적 조건으로 혹사시킴으로써 기술적 낙후와 가공할 금융비용 등으로부터 오는 손실을 보전하고도 급속한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었는데, 당시와 같은 중화학공업화 과정의 가혹한 노동조건과 수탈체계 아래서는 어디에서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이곳 울산의 조선소를 통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다.

A4 [전개 과정]

1974.09.18 18일 기능공 조장 한 사람이 해고되고 그의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급제로 넘겨졌다는 사실이 전 공장에 퍼짐, 이에 따라 일년 이상 누적되어 온 불만이 폭발,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격렬한 농성을 하기 시작. 조선소 측의 공권력 투입으로 2시간 만에 경찰에 의해 해산. 오후 4시, 경찰병력과의 투쟁으로 자동차를 불태우고 회사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폭동적 상황으로 발전, 새벽 1시에 증원된 경찰에 의해 무력진압, 강제해산.

1974.09.20 정주영 회장이 내려와 요구조건의 전면수락을 약속했으나 파기.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다 노동부의 중재로 하청기능공과 직영기능공의 동등 대우 및 신분보장을 하는 선에서 중재안 타결 마무리.

A5 [사건 내용] 1974년 9월 18일, 경남 울산(현재의 울산광역시)에 있는 현대조선(현재의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동료의 부당한 해고조치에 반발하여 일제히 작업을 거부하고 격렬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 등 13개 요구조건을 내걸고 2시간 동안 시위하다가, 경찰의 제지로 일단 해산하였다. 조선소 측의 요청으로 경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후 4시, 경찰병력과 투쟁이 재개되고 자동차를 불태우며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 노동자들의 농성은 폭동적 상황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대표자를 뽑아 회사와 단체교섭에 들어갔지만, 원만한 타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기능공 이중길 외 3천여 명이 밤 10시 20분경부터 20일 새벽에 걸쳐 폭력으로 기물을 부수고 경비실과 승용차 등에 방화하였다. 이들은 ①도급제 반대, ②노동조합 결성, ③사원과 기능공의 차별 대우 반대, ④상여금 지급, ⑤시간급 급료 인상, ⑥휴식시간 10분간 노임 계산할 것(오전 10시부터 10분, 오후 3시부터 10분), ⑦식당 관리 개선(공원급 1식 110원, 사원급 1식 75원), ⑧능률급 제도 폐지, ⑨부당해고 금지, ⑩장려수당 지급, ⑪입사 후 3개월이 된 자의 정식 사원화, ⑫교통문제 해결, ⑬시간외 수당 지급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했으나 증원된 경찰력의 무력진압에 새벽을 넘기지 못한 채 강제 해산 당하기에 이른다. 9월 20일, 날이 밝자 정주영 회장이 내려와 요구조건의 전면수락을 약속했으나 그것은 곧 파기되고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였다. 결국 노동청의 중재로 하청기능공과 직영기능공의 동등 대우 및 신분보장을 하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근로자 600명이 관계 기관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은 뒤, 18명이 구속되고 20여 명은 불

구속 입건되었다. 이 쟁의는 1987년 이후 현대중공의 노동운동이 폭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전국 노동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되어 9월 26일 국회 보사위원회가 고재필 보사부장관과 최두열 노동청장을 출석시켜 진상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사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 예방하고 책임질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현대조선 분규는 일부 견습공들의 몰이해로부터 발생한 산발적 소요라는 요지의 해명서를 언론에 발표하게 된다. 또한 노동청 울산사무소는 10월 7일 공동대표이사 김영주, 총무이사 김준교, 인력관리부장 도영희 등 3명을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노동청이 입건한 이들은 1974년 1월부터 8월말까지 근로자 668명을 무단으로 해고했고, 1일 법정근로시간을 3시간씩 초과해 1주에 66시간씩 일을 시켰으며, 주 1회 실시해야 하는 유급휴가를 월 2회로 줄인 혐의를 받았다.

A6 [관계 인물] 이중길, 정주영, 고재필, 최두열,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이수원, 『현대그룹 노동운동, 그 격동의 역사』, 1994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인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의 김영태 섬유노조위원장 통대 낙선운동**

A2 [사건 일시] 1978.05.16

A3 [사건 배경] 1972년 어용노조를 추방하고 노동자들의 자주적 노력으로 한국 최초의 여성노조지부장(주길자)과 여성집행부를 배출한 바 있는 인천 동일방직노조는 소속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회사 및 남성 어용노동자들과의 수년에 걸친 투쟁과정에서 '알몸'(1976년)과 '똥물'(1978년)로 상징되는 처절한 투쟁을 벌여나온 것으로 유명하다. 정부기관, 섬유노조 본조, 기업주, 동료 어용노동자 등이 뒤엉겨 공모한 가운데 그들과 외로이 싸우며 민주노조를 사수해간 동일방직노조의 투쟁사는 한국 노동운동사는 물론 기업발달사에도 당연히 각인되어야 할 역사적 아픔의 상흔이었으며, 그 처절한 저항과 극악한 탄압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의 신화적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이었다. 당시 전국섬유노조위원장이던 부산출신의 김영태가 동일방직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어용적이며 반동적 행태로 노조에게 도움은커녕 오히려 고통을 가중시켰는데, 그런 그가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 가운데 앞의 '똥물세례'를 받으며 사측으로부터 해고된 124명에 대하여 1978년 4월 10일 각 사업장과 노조분회에 이들의 명단을 보내어 재취업까지 막으려는 악질적 책동을 벌였다. 그런데 그가 1978년 5월 18일에 있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자기 출신지인 부산지역에서 재선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15명이 부산으로 내려가

김영태의 낙선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A4 [전개 과정]

1978.04.01 동일방직 회사측, 노동위원회의 승인아래 노동자 126명 해고

1978.04.10 김영태 섬유노조 본조 위원장, 전국 각 사업장과 노조분회에 동일방직 해고자 명단을 공문으로 발송

1978.04.26 동일방직 사측, 대의원선거 실시하여 어용 지부장 선출기도, 이총각(여) 지부장과 김인숙 총무부장 등 해고노동자들이 회사로 몰려가 단식농성 벌였으나 오히려 폭행죄로 구속

1978.04.28 회사측, 새로 뽑은 대의원들로 대의원대회 강행, 박복례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

1978.05.14 해고노동자 추송자 외 1명, 선발대로 이날 밤차편 하부하여 김영태 출마선거구 현장파악에 들어감

1978.05.15. 해고노동자 13명, 2차로 밤 10시 30분 특급열차로 서울역 출발, 일익 새벽 5시 30분에 부산역 도착하여 JOC 사무실로가 선발대 동료와 합류

1978.05.16 김영태 선거구인 전포 1,2,3,4동과 부전1,2동에서 JOC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김영태 비난 유인물 집집마다 투여(15명 각 400부 씩), 일을 끝내고 10여명은 이날 밤 11시 40분 서울행 특급열차로 부산역 출발. 뒤떨어진 5명과 JOC회원 2명 등 모두 7명은 15일밤과 16일 새벽(16일 밤과 17일 새벽의 오기로 판단됨-인용자 주) 경찰에게 부산 남부서로 연행됨

1978.05.16 인천 동일방직, 4월 28일 선출된 노조지부장 박복례를 해고노동자들이 어용으로 규정, 지부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산 내려간 추송례를 지부장 직무대리로 선출

1978.10.19 선거법 위반죄 1심 선고공판, 해고노동자 5명은 전원 실형선고, 도와준 JOC회원 2명에겐 집행유예 선고(형량은 아래 A6를 참조)

1978.11.06 1970년대 초 인천에서 동일방직에 입사하여 6개월을 여공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원한 경력의 소유자인 조화순 목사(여), 부산에서 동일방직 사태에 대해 강연중 “우리를 빨갱이로 모는 저들이야말로 빨갱이다”라고 외친 것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됨(형량은 아래 A6를 참조)

1978.12.30 중앙노동위원회, 해고자들이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기각[해고자들은 곧 이어 회사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법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

1980.09.30 서울고법 제3특별부, 이총각 외 12인이 요청한 “해고예외인정 재심신청 기각결정 취소의 소”를 기각, 해고노동자들에게 패배를 안김

A5 [사건 내용] 인천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126명의 재취업까지 막기 위해 전국 각 사업장과 단위노조들에게 해고자 전원의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한 전국섬유노조위원장 김영태가 출신지인 부산진구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재선출마 입후보한

사실을 알고 위 해고노동자 중 추송자 등 15명이 부산으로 내려와 그를 떨어뜨리기 위해 해당 선거구인 부산진구 부전동과 전포동 일대에 가톨릭노동청년회(JOC) 회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김영태를 비난하는 유인물 6,000여매(15명×각400매)을 집집마다 뿌려서 체포되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이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의 김영태 비난전단 배포사건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가톨릭 JOC와 개신교 도산 등에 여러 가지 연쇄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부산의 민주화운동 세력을 자극하고 흥분시켰으며, 그들을 더욱 단결시키는 의외의 효과를 가져왔다. 예컨대 김광일, 이흥록 변호사 등이 즉각 무료변론을 맡았고, 재판 때마다 부산의 교계와 운동권 인사들이 방청을 갔다. 남아있는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과 조화순 목사도 서울과 인천에서 멀다 않고 내려와 방청했다(조목사는 11월 6일 구속되어 장기간 투옥됨. A4 및 A6 참조). 이와 같은 재판법정 방청이나 기도회, 사례보고 등을 통해 관련자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 독재권력에 대한 저항의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역할도 컸다.

A6 [관계 인물] 전국섬유노조 본조위원장 겸 부산지부장 김영태(1978년 5월 18일의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선거에서 결국 재선에 성공, 뒤에 한국노총위원장까지 오름),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추송례(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 동 김옥섭(징역 8월), 동 권분란(징역 8월), 동 공인숙(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동 박양순(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 JOC회원 정인숙(집행유예), 동 장춘애(집행유예), 목사 조화순(피고인들의 오랜 후원자, 징역 3년), 박상도(부산지역 특수선교회 간사, 1978년 10월 19일 동일방직 해고노동자 선거법위반 혐의 1심선고 공판일에 주례의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 동일방직 해고노동자들을 면회가는 길에 경찰의 습격으로 격투하다 체포되었으나 11월말 기소유예 처분으로 석방), 김광일(변호사, 피고인 무료변론), 이흥록(변호사, 피고인 무료변론)

A7 [관계 단체] 인천 동일방직노동조합, 부산 가톨릭노동청년회(JOC), 도시산업선교회 부산지역 특수선교회(회장, 중부교회 최성묵 목사)

A8 [관계 자료] 조갑제, 『유고』1, 한길사, 1987

A9 [관련 사건] 동일방직노동자해고 사건

A1 [사건명] **연합철강 노동자투쟁**

A2 [사건 일시] 1980.04.19~05.19

A3 [사건 배경]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 차별대우와 같은 노동상태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임금 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대중투쟁은 부산지역의 많은 공장노동자들에게 투쟁의지를 고무하였고 80년 봄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A4 [전개 과정]

1980.04.19 임금인상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

1980.05.02 주간부 노동자 6백여 명이 참여, 37% 임금인상, 퇴직금누진제 부활, 79년 10월 후 감원된 1백 60명 보충, 9년 이상 근무한 일용공 2백여 명 정식사원으로 채용, 노사협의회에 최고경영진 참석 등의 5개항을 조건으로 내세움

1980.05.12 직권조정만료일

1980.05.13 오전 7시 야간작업을 마친 비번노동자 4백50여 명의 농성투쟁, 3시 전면파업에 1천 2백여 명 참가

1980.05.13 오후 5시 노사협의회에서 임금 20.1% 인상, 퇴직금누진제는 추후 논의안 제출. 노동자 협상거부, 1천 2백여 명 사내시위투쟁전개, 2백여 명 가두진출시도

1980.05.14 노사협의회 결렬

1980.05.15 전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5개항의 요구조건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 개최

1980.05.16 '근로자들의 행동여하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는 경영진의 발언에 '회사 측의 성의여하에 따라 회사 측의 존폐가 달렸다'는 반박성명. 5시 자진해산

1980.05.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도 18일까지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됨

1980.05.19 정상조업

A5 [사건 내용] 연합철강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은 동국제강 노동자처럼 파업, 농성투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지도하에 기업주와의 노사협의를 통한 합법적 임금교섭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의 임금인상 협상과정을 통한 기업주의 무성의한 태도와 5.17비상계엄조치라는 엄혹한 조건 속에서도 파업의지가 누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는 강렬하였지만 자신들의 투쟁경험을 조직적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함으로써 가시적인 투쟁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김진옥,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현장, 1985.

지역사회자료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1989.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동국제강 노동자파업**

A2 [사건 일시] 1980.04.28~30

A3 [사건 배경] 10.16 부마민중항쟁을 거치면서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노동자들의 처우와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노동조합과 노조민주화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다. 더구나 이러한 흐름은 80년 5월의 비상계엄이 확대 실시되기 전까지는 다분히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대중적인 투쟁의 의지나 분위기가 높아가고 있었다.

A4 [전개 과정]

1980.04.28 압연부 노동자 3백여 명 야간작업 중단, 임금 40% 추가 인상 등 8개항 요구 농성투쟁 개시

1980.04.28 부산시가 직권으로 15.4%의 임금인상 결정 이에 대해 "임금을 40%로 인상할 것", "상여금을 관리직사원과 같이 400% 지급할 것(이제까지 200%)", "공상자 임금을 현행 60%에서 100%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하며 파업, 농성에 돌입

1980.04.29 노동자들이 계근실 불을 지르고 기물 파손(8명 연행, 6명 구속)

1980.04.30 1천여 명의 노동자집결, 1백여 명의 협의기구 구성

1980.05.05 회사 측이 제시한 임금 30%인상안 합의

1980.05.08 노동자 8명 추가 구속, 경찰 11명 중경상

A5 [사건 내용] 동국제강 노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자연발생적 노동운동이 갖는 강도 높은 폭발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80년의 격렬한 쟁의에도 불구하고 동국제강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노동조합도 결성되지 못했고, 쟁의행위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다시피 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노동자들이 게엄 포고령1호(불법집회 및 시위금지로 구속되고 경찰도 11명이나 중경상을 입었으며, 회사의 건물 50평을 포함한 연건평 5백여 평이 불에 타버렸고 10억여 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A6 [관계 인물] 이순진, 이용덕, 전상수, 최성환, 소정석, 최규철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김진옥,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현장, 1985, p226.

지역사회자료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1989, pp44-46.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동명목재 노동자 파업농성**

A2 [사건 일시] 1980.05.11~17

A3 [사건 배경] 세계 30여 개국에 연간 8천만 달러 상당을 수출하면서 한국합판업계의 대표격으로 지칭되어온 동명목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은 1979년 이후 원목 수입가격의 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에 있다. 이로 인해 누적적자가 증대되고 정

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금융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5백억 규모의 차임금과 연체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자 휴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1979년 말부터 시작된 한국경제의 위기상황으로 조업단축, 휴업, 폐업하는 기업이 많이 나타났지만 정부는 사양화되어가는 산업을 대책없이 폐기하고 또 다른 수출산업에 주력하였다. 이에 재무구조가 극히 열악하여 정부의 판단에 따라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만 하면 당장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서 5.17 계엄조치와 함께 시민과 노동자들의 정상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대표적인 경우였다.

A4 [전개 과정]

1980.03.31 동명목재 조업단축 실시

1980.05.07 전면휴업

1980.05.07 3천여 명의 노동자 집회, 동명목재 조업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

1980.05.08 조업중단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 출근, 휴업철폐요구

1980.05.10 4일째 농성 중, 밀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자 공장 앞 용당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

1980.05.12 동명목재조업정상화추진위원회는 새로운 회사재건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관계당국의 성의있는 지원 촉구

1980.05.17 이날까지 관계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며 3천여 명이 농성하였으나 5.17 계엄조치로 모든 노력이 중단, 폐업.

A5 [사건 내용] 1980년 5월 7일자로 전면휴업에 들어가게 된 동명목재에서 노동자들은 폐업을 인정하지 않고 5월 7일부터 3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며 동명목재 조업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기업의 조업활동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① 정부는 기업가활동을 보장하라. ② 금융기관은 기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등의 7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5월 8일에는 강석진회장과 일가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은행과 관계당국에 대책을 요청하여 동명을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하였지만 5월 10일에는 밀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은행의 융자거부로 받지 못하자 공장 앞 용당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정부는 동명의 자구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라', '은행은 동명의 현실을 직시하라,' '강정남은 빼돌린 자산을 환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5월 12일에는 관계당국의 대책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농성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동명목재조업정상화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재건계획들에 정부는 방관과 5.17 계엄조치를 통해 동명목재를 폐업시키고 말았다.

A6 [관계 인물] 강석진, 강정남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김진옥,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현장, 1985.

지역사회자료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1989.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현대 노동조합 결성투쟁**

A2 [사건 일시] 1980.05.17

A3 [사건 배경] 10.16 부마민중항쟁과 유신시대의 종말은 노동운동진영에도 새로운 노조건설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게 되었다. 초기의 노동조합 결성과정은 대개 자생적인 형태를 많이 띠고 나타나는 다른 사례의 경우와 유사한데 현대중공업의 경우에서는 중간직급의 과장으로 있던 이민우 씨로부터 도화선이 당겨졌다. 이민우 과장의 강제 연행과 고문으로 구속 사유는 미국의 노동운동비사인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책을 자신의 현장부서원에게 빌려줬다는 이유였다. 1979년 11월 울산 현대중공업 이민우 과장이 울산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어 1주일간 고문 끝에 반공법위반으로 구속. 1980년 3월 1심에서 무죄선고 받지만 회사는 자진사표 강요 후 여의치 않자 이민우 과장을 서울 본사로 발령을 냈다.

A4 [전개 과정]

1979.11.00 울산 현대중공업 이민우 과장이 울산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어 1주일간 고문 끝에 반공법위반으로 구속.

1980.03.00 1심에서 무죄선고 받지만 회사는 자진사표 강요 후 여의치 않자 이민우 과장을 서울 본사로 발령

1980.05.17 이민우 과장과 동료 80여명이 노동조합 결성 준비했으나, 본사에서는 발령 후 5일내에 부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우 과장을 해고.

A5 [사건 내용] 1980년 5월 17일 이민우 과장과 동료 80여명이 모여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으나 당시 10.26 계엄 상태라 집회 허가가 있어야 노조 결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울산경찰서장은 "광주에서 국가변란이 나 집회를 할 수 없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통보했으나 본사에서는 발령 후 5일 내에 부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민우 과장을 해고하고 말았다. 이후 지방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모든 법적 투쟁이 허사로 끝나고 사회 전반의 공포분위기 속에서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도 차례로 해고당함으로써 최초의 노조 결성 시도는 결실을 맺지 못함.

A6 [관계 인물] 이민우

A7 [관계 단체] 현대중공업노동조합

A8 [관계 자료]

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1995

전노협, 『기나긴 어둠을 찢어버리고』, 2001

http://wbook.labordata.org/view.asp?menucode=read&book=3&number=165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택시기사 농성투쟁**

A2 [사건 일시] 1984.05.25~06.05

A3 [사건 배경] 1984년 전국적인 노동운동 활성화이 기점으로 평가되는 대구지역택시기사파업투쟁의 영향아래 택시기사 천여명이 '현행 하루 7만원대의 사납금을 6만원대로 인하', '대물사고 피해 회사측 변상', 'LP가스 전용주유소제 폐지', '상여금 매달지급', '현행10부제는 8부제로','13일 근무를 만근으로 할 것'등의 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서면로타리 일대에서 시위투쟁을 전개하였다. 당시 부산에는 전 택시회사 1백52개 가운데 1984년 5월말 113개 사업체에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처럼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도 노동조합조직율이 높았지만 기존의 조합들의 어용적인 성격이 노동자들의 생계와 지위개선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A4 [전개 과정]

1984.05.25	부산택시운전자 1,000여명, 사납금 인하를 요구하며 가두시위
1984.06.04	부산시내 택시기사 1,000여명 집단시위
1984.06.05	부산택시기사 400~500여명 시위계속

A5 [사건 내용] 1984년 6월 4일 새벽 1시20분께 서면 로타리에 집결한 20여대의 택시를 선두로 하여 그 뒤로 회사택시들이 속속 몰려들기 시작해 1시간 정도 만에 서면 로타리와 중앙로에 2백여 대, 부산진구 당감동입구까지의 가야로에 5백여 대, 전포로에 2백여 대, 부산진구 초읍 방면의 새싹길에 1백여 대등 1천여 대의 택시들이 서면일대의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채 진행되었다. 시위 기사들은 이날 새벽 6시 20분 부산시장과 택시조합이사장과의 협의 끝에 사납금 5천원인하, 상여금 월별지급, LPG주입자율화 등에 합의하여 일단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날 저녁 부산택시업주들의 간담회에서는 택시운전기사들이 부산시장과 합의한 사항가운데 사납금 5천원 인하만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추후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격분한 부산시내 택시기사 4백여 명은 나머지 4개항의 요구조건의 이행을 촉구하며 다시 서면로타리에 택시를 집결시켜 놓고 5시간동안 시위, 농성투쟁을 벌였다. 이에 놀란 부산시장은 새벽 4시 30분 시위현장에 나와 새벽5시와 6시 5분 두 차례에 걸쳐 '4일 밤 택시사업주와 협의를 하여 당초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최종결정을 봤다', '시장의 약속이니 믿어 달라'는 등 또다시 기사들을 기만하여 서둘러 시위, 농성을 해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전사업주들이 나와 약속이행을 확약할 것을 요구하면서 투쟁을 계속하였다. 택시기사들의 집단적 시위가 아침 6시 반까지 계속되자 긴급 출동한 경찰은 5백여 명의 운전기사들을 해산하고 해산에 불응한 10여명의 운전기사들을 연행하여 이중 2명을 구속하였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김진옥, 『8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현장, 1985

지역사회자료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1989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연합철강노동자의 반동국제강 투쟁**

A2 [사건 일시] 1985.02.21~1986.08.14

A3 [사건 배경] 1980년 5월 17일의 비상계엄조치로 인해 어떤 요구도 관철하지 못하고 임투 도중에 싸움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연합철강 노동자들은 1985년 2월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와 동국제강의 연합철강 인수방침 이후 1986년 8월 14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부산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조직력과 투쟁력을 과시하면서 반동국투쟁을 벌였다. 연합철강 노동자들은 기간산업 노동자가 가지는 객관적인 우세한 지위를 토대로 강한 단결력과 투쟁력을 통해 대자본투쟁을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국경영진의 거부'라는 개별자본과의 제한적인 투쟁으로 인해 대정부투쟁조차도 '청원'운동이라는 형식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1985년도 당시의 조합주의적인 한계를 넘어서기 힘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연철노동자들의 전면적인 반동국투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동국제강그룹의 연철인수 이후 자행된 노동조합의 분열, 와해책동, 기존의 근로조건의 개악 등 연철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억압한 데 있었다.

A4 [전개 과정]

1985.02.21 동국제강의 연합철강인수방침

1985.04.19 동국제강이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대의원 50명의 의견서, 탄원서 제출

1985.06.13 동국제강이 연합철강 인수반대 궐기집회, '동국 물러가라' 리본착용. 8월14일까지 준법투쟁, 교대근무 후 농성돌입, 하루 평균 1,031명 참가(74%)

1985.06.25 산업정책심의위원회 인수 최종 결정

1985.08.14 장상태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퇴임하고, 신뢰 회복시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문 경영인체제를 구축한다는 지역대책협의회와의 합의문

A5 [사건 내용] '동국 물러가라'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연합철강의 투쟁은 1985년 2월 21일 동국제강의 연합철강 인수방침, 그리고 연철노동조합을 비롯 전사원의 반대속에서 이루어진 1985년 6월 25일 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에서 비롯된

다. 그리하여 1985년 4월 19일 노동조합이 동국인수 방침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대의원 50명의 의견서와 전 조합원의 서명날인을 첨부한 탄원서와 결의문을 관계기관 및 각 언론사에 제출하여 반동국투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제1차 '동국 물러가라 투쟁'은 장상태 회장의 연철인수 포기를 요구하며 86년 6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7일간 전개되었다. 6월13일 노동조합 주최로 연합철강이 동국제강에 인수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궐기대회가 개최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동국 물러가라'는 리본을 달기 시작했고, 노동자들의 자발성이 지극히 고양되었다. 1차 투쟁이 끝난 8월 14일까지 교대로 정상근무 후 농성에 돌입하였다. 약 50일간의 농성기간 중 하루 평균 1,402명이 농성에 참가하여 약 74%의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준법투쟁 농성 끝에 노동조합과 중앙대책협의회(재무부, 노동부, 안기부 등)의 위임을 받은 지역대책협의회 사이에 맺어진 주요 내용은 장상태 회장이 장상태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퇴임하고, 신뢰 회복시까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 전문 경영인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동국인수 포기'라는 요구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것이지만 노동부, 재무부 등의 정부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연철노동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었고, 연철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자체를 저지하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문제해결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1987년 다시 시작된 쟁의가 1989년 1월까지 계속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하겠다.

A6 [관계 인물] 장상태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연합철강노동운동사례연구』

『한국사회노동자연구II』, 백산서당, 1989.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현대엔진 노사협의회 대표위원선출 투쟁**

A2 [사건 일시] 1986.00.00

A3 [사건 배경] 현대엔진 노사협의회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도로 운영되었지만 그 구성방법은 상당히 민주적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이 강압이나 매수 등으로 회사 측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1986년 노동자 측 대표위원이었던 김종국이 굽힘없이 싸우기 시작했고 이런 그의 투쟁은 현장 노동자들의 수동적 생활에 적극적 의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어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측 수석대표위원과 간사를 노동자 측 입장에 선 사람으로 뽑기 위한 활동이 은밀히 시작될 수 있었다.

A4 [전개 과정]

1986.11.23 1986년 12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된 노사위원 선거를 위해 준비하던 중 11월 23일 회사 측에서 노사위원 선출에 관한 노사위원의 자격요건을 공고함으로써 현장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다.

1986.11.25 분노한 노동자들이 자격요건 철폐를 내걸고 부서별로 선거무산 전략을 밀고 나가 11월 25일 기계공장에서 선거규정의 부당함을 폭로하고 선거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1986.11.26 조립공장을 포함한 4개 부서에서 선거를 유산시켜 현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A5 [사건 내용] 1986년 11월 23일 회사 측에서 노사위원 선출에 관한 노사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첫째 입사 후 5년이 경과한 자, 둘째 반드시 현역을 필한 자, 셋째 인사고과가 중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 세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불과 10%냐 외로 대부분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자격요건 철폐를 내걸고 선거를 거부하고 11월 26일에는 조립공장을 포함한 4개 부서에서 선거를 유산시킴으로 현장에 자신감을 불어넣자 관리과에서 기존의 자격요건으로는 선거를 치루기 어렵다고 판단. 노사위원의 자격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현역필자는 군필자로 수정하고 부서단위로 치러지던 노사위원 선거를 축소시켜 각 단위에서 선정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일방적으로 공표하였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격제한 완전 철폐냐 대표위원 확보냐 하는 논란 끝에 대표위원 확보로 입장을 재정리하여 선거에 임한 결과 10개부서 중 7개부서와 소위원의 대부분이 민주파로 선출되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현대중전기 기능직 처우개악 시정요구**

A2 [사건 일시] 1986.00.00

A3 [사건 배경] 1986년에 접어들면서 노동환경과 조건은 억압과 착취가 더욱 강화되어갔다. 이러던 와중에 야간잔업을 실제 잔업시간과 관계없이 일부분만 인정하는 등 현대중전기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능직 노동자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사건이 일어났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1987년 대투쟁과 연관된 제1차 집단행동이었으며, 노동자들이 서서히 권리의식을 갖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폭발적인 투쟁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것은 일반 기능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현장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일선노동자와 비생산 분야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거리감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무관

심했기 때문이었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유신독재를 거치며 한국의 산업과 고속성장을 가져왔던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의 구조는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야간잔업을 실제 잔업시간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 달에 50시간만 인정하는 등 현대 중전기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능직 노동자의 처우를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자, 이에 해당되는 대상자 100여 명이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이를 시정 요구하는 유인물을 돌림. 교섭 요구 시도가 실패한 후 기숙사에 '현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실상', '노동조건 저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자는 유인물이 뿌려짐. 회사는 이 날 모든 사람들이 출근 후 기숙사 전체를 수색하여 이전에 회사와의 교섭당시 강경한 입장을 보인 사람을 유인물 배포 혐의로 전출시켜버림으로써 사태를 종결시킴. 교섭 요구 시도가 실패한 후 기숙사에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실상', '노동조건 저하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자는 유인물이 뿌려졌으나 회사는 이 날 모든 사람들이 출근 후 기숙사 전체를 수색하여 이전에 회사와의 교섭당시 강경한 입장을 보인 사람을 유인물 배포 혐의로 전출 시켜버림으로 사태를 종결시킴.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동양고무 노동자투쟁**

A2 [사건 일시] 1986.03.10~06.27

A3 [사건 배경] 부산진구 부암동에 자리하고 있던 동양고무는 노동자수 8천명의 신발수출업체로서 화승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당시의 임금 및 근로조건은 조출, 연장근무등이 만연하여 화승그룹 내에서도 제일 열악한 편이며, 생산직과 사무직의 차별대우도 극심하였다. 이로 인해 장기근속자가 신입사원보다 임금이 낮을 정도였으며 높은 이직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964년에 설립된 노동조합은 어용화되어 조합비만 챙겨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폭력적인 노무관리와 노동조합이 결탁하여 자연발생적인 항의조차도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 1984년이 되면서부터 동양고무에 의식적인 활동가들이 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조직화된 투쟁의 가능성이 형성되었다. 이들 활동가들은 ① 비교적 재정상태가 안정된 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 ② 지역적으로 공단은 아니지만 진양, 태화 등의 대기업과 아폴로 동해화성 등 많은 중소기업과 신발업종의 하청가공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준 공단으로서의 파급효과

가 크며 ③ 부산시내 통근버스가 다 이 지역으로 들어올 정도로 노동자밀집주거지역이며 ④ 주변에 있는 당감 야학과 영남산업연구원 출신 중 많은 노동자들이 동양고무에 취업해 있으며, 당감성당, 야학, 영산 등이 지역적인 활동공간으로 되고 있다는 점을 동양고무에서의 공장 활동에 유리한 주・객관적인 조건으로 인식하였다

A4 [전개 과정]

1986.03.10 '부산 임투위'명의 유인물 3차례 배포
1986.03.15 학부출신 1명(2부 2과 재봉) 부임투 명의 유인물 배포관계로 연행
1986.03.17 이날부터 동야 임금인상 요구안 배포
1986.03.18 학부출신 1명 유인물 살포, 연행, 훈방
1986.03.22 생산1부 선진, 동조노동자 10여명 강제사직
1986.03.24 부민협, 부산기독청년협의회 등에서 폭력규탄 성명서 발표
1986.03.25 2명 구속, 10여명 구류
1986.04.18 설문작업에 따른 공청회 시도, 구사대의 폭력으로 실패
1986.04.19 주거지 가두 유인물 배포
1986.04.23 학생, 야학동원(80여 명)한 가두투쟁
1986.05.00 마산 개헌 현판식 참가, 불참가자로 내부 분열됨
1986.06.27 무역회관 앞 시위, 복직 및 불매슬로건, 11명 구류

A5 [사건 내용] 1986년 동양고무 임투는 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특히 20여명의 활동가와 40-50명의 대중기반으로써 4달 동안 계속 싸워왔으나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임투를 통한 자기조직 확대와 의식고양'이라는 동양고무 임투위의 임투 목표는 처음부터 완전히 실패였다. 1985년 이후의 대학출신 활동가의 투쟁사례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교적 장기에 걸친 준비과정과 소그룹활동을 통해 40~50여명의 선진노동자들을 투쟁주체로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은 소진되고 말았다. 그러나 투쟁시기와 진행방법에 있어서 여러 면에서의 한계를 보여주었지만 선도적인 활동가들의 투쟁으로 머물러버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86년 동양고무임투평가서」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대양고무 근로조건 개선요구 투쟁**

A2 [사건 일시] 1987.04.06~09

A3 [사건 배경] 초기의 열악한 노동환경구조에서 부산지역에서는 거의 최초로 학생출신노동운

동가가 의식적인 개입의 과정을 통하여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결과물로 선진노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활동의 결과물을 드러내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A4 [전개 과정]

1987.04.06 임금인상투쟁위원회 구성

1987.04.09 일당 6,509원 요구 투쟁을 전개. 계속되어온 노동탄압 속에서 1986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던 1987년의 투쟁은 노동자들 사이에서의 오랜 불만을 구체적인 요구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A5 [사건 내용] 대양고무에서는 야학출신 활동가 몇 사람에 의해 1986년부터 '더 이상 국수를 먹고는 10시간 작업을 할 수 없다'등의 낙서를 시작으로 11월 김장보너스 쟁취투쟁을 벌여 10-20%의 김장보너스를 쟁취하는 승리를 거둔 바 있고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조그만 승리의 축적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된 대양고무 노동자들은 1987년 1월 현장 내 가장 큰 불만이었던 화장실문제를 제기했다. '우리의 오줌보는 시간마다 틀 수 있는 수도꼭지가 아니다'(당시 기업주는 화장실 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유인물, 낙서, 스티커 작업을 통해 성과를 얻은 노동자들은 1987년 3월까지 임금인상투쟁에 들어갔다. 1987년 4월6일 임금인상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금인상요구안을 작성,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에 대량 배포하는 한편 노조에 대해 임금인상요구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투쟁을 주도한 노동자들은 폭행과 연행과 해고로 끝나고 말았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1987년 현대계열 노동자대투쟁**

A2 [사건 일시] 1987.07.00~09.00

A3 [사건 배경]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작업조건, 자칫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산업재해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들이 울산에선 대중적인 노동운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노조를 금기시하는 현대계열 공장에서 노조설립을 막으려는 회사 측과 노조설립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마산과 창원, 거제를 거쳐 수도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강원으로, 대공장에서 중소공장으로, 금속에서 화학·신발·광산·섬유·버스·택시·호텔·병원·백화점으로, 전 지역과 전 산업에 걸쳐 자연발생적인 파업과 농성, 시위발생. 1987

년 7~9월 석 달 동안 발생한 쟁의 건수는 3,311건으로 하루 평균 40건. 특히 8월에는 하루 평균 83건의 쟁의발생. 또한 쟁의에 참여한 노동자는 1백22만 명으로 당시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3백33만명의 37%에 이르렀다. 석 달 동안 벌어진 파업 건수는 지난 10년간 파업 건수의 2배였고, 참가자 수는 지난 10년간 참가자 수의 5배에 달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근대적인 임금노동자가 형성된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적인 저항운동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주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에 집중돼 있었으나 80년 서울의 봄 때와는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비호 아래 공공연하게 자행돼 온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인격적인 대우와 작업장 민주화를 요구하는 작업조건 개선투쟁에 집중되어 있었다. 노동운동에 참가한 사업장의 55%에서 노조가 결성돼 1987년 6월 말 현재 2,742개였던 노동조합이 87년 말 4,104개로 증가. 또한 1987년 6월 말 현재 약 1백5만 명이었던 노조노동자가 1987년 말에는 1백27만 명으로 6개월 사이에 무려 20만 명이 증가. 하지만 나라를 뒤흔든 노동자들의 투쟁은 9월 들어 급격히 완화. 그 후 '무법·광란, 울산시청 수라장…술 마시고 부수고 노래하고' '현대중공업 3백여 명 차고 방화 등 난동 1시간' '사장 등 맨바닥에 앉히고 폭언'등과 같은 사건들을 거치며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A4 [전개 과정]

1987.07.05 현대엔진에서 현대 계열사 노조가 결성되기 시작

1987.07.15 미포조선 노조결성

1987.07.27 현대중전기 노조결성

1987.08.01 현대정공 노조결성

1987.08.16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6개사에 휴업조치

1987.08.17 현대중공업 앞에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가두로 진출

1987.08.18 6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해 공설운동장으로 행진

A5 [사건 내용] 1987년 7월5일에 본격적인 노동운동이 시작되고, 현대엔진에서 현대 계열사 노조가 결성되자.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조를 준비해왔던 권용목 등은 6월 항쟁으로 조성된 민주화 국면을 놓치지 않았고, 현대엔진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 6일만에 생산직 거의 전원이 가입원서 제출. 현대엔진에서 시작되어 현대계열사 노동자에게로 번져 7월15일 미포조선, 7월27일 현대중전기, 8월1일 현대정공에서 노조가 결성. 민주노조 결성을 봉쇄하기 위해 회사쪽에서 어용노조를 급조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서는 노동자들이 농성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교체. 금강개발과 한국프랜지를 마지막으로 울산지역 현대 계열사 전체에 노조가 들어서자 11개 노조는 곧바로 '현대그룹노조협의회'를 결성. '회장'(고 정주영 회장)이 전권을 행사하고, 각사의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그룹 차원에서 임금인상 이 이루어지며, 종합기획실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현대그룹의 중앙집권적 문제에 노동자들의 집단운동. 현대그룹은 8월16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6개사에 휴업조치를 내렸다. 현대그룹노조협의회는 연합시위를 선언, 17일 현대중공업

앞에 3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가두로 진출한 것에 이어 18일에는 6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운집해 공설운동장으로 행진. 덤프트럭, 지게차, 샌딩머신 등의 중장비를 앞세운 노동자들의 시위 대열은 4㎞행진.

A6 [관계 인물] 권용목(1987년, 29살의 나이로 현대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현대중공업 초대 노조위원장, 1995년에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노사정위원회의 전신) 참여로 민주노총 초대 사무총장 직을 사임했다.

A7 [관계 단체] 현대계열사 노동조합

A8 [관계 자료]

강순희(1998), 『한국의 노동운동 : 1987년 이후 10년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김동춘(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1987년 이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김태기 · 윤봉춘(1991), 『노사분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노중기(1997), 「6월 민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6월 민주항쟁과 한국사회1』, 당대.

민중사(1987),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민중사(1988), 『대구, 울산 지역실태와 노동운동』.

울산노동정책교육협회(1995), 『울산지역 노동운동의 역사』 제1권.

박승욱(1990), 「7~8월 노동자대투쟁을 다시 생각한다」 『창작과 비평』 1990 여름.

박현채, 「7~8월 노동쟁의의 양상과 민주화」.

심금호, 「7~8월 노동자대투쟁」.

엄주웅(1994), 「노동운동의 폭발적 고양과 민주노조운동의 구축」,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엮음, 『1970년대 이후 한국노동운동사』 동녘.

임영일, 「7~8월 노동자대투쟁과 대중운동의 고양 — 7~8월 평가논쟁」.

장명국, 「7,8월 노투와 한국사회의 변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1988), 『1987년도 노동쟁의』.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대한조선공사 노조민주화투쟁**

A2 [사건 일시] 1987.07.25~08.31

A3 [사건 배경]

A4 [전개 과정]

1986.00.00 중식 거부투쟁

1987.04.00 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구성

1987.07.25 관리자들이 벽보를 찢은 것에 대한 항의를 시작으로 부산 조선공사 노동자와 가족 3,500여 명 집회를 개최하였음. 태종로에서 연좌농성, 51명 연행. 어용노조 해체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파업농성(7/28일 까지)

1987.07.28 노동자들, 지게차와 쇠파이프로 무장, 도로 진출

1987.08.31 상여금 300%, 휴가비 60%, 노조민주화를 위한 조합원 총회 보장 등 합의

A5 [사건 내용] 대한조선공사는 엄청난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속에서도 5년 근속자의 일당이 6천원 정도에 불과하고 평균작업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로 월평균 70시간을 기록할 만큼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더욱이 1987년 2월6일 현재 진폐 환자수가 37명으로 부산지역에서의 최다발생을 기록했으며, 많은 수의 노동자가 직업성 난청환자였다. 게다가 어용노조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부산지역 금속노조 가운데 가장 크고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대한조선공사 노동조합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용후보들의 각축장이 되곤 했다. 1984년도에는 백삼주라는 인물은 자신이 찍은 단 한 표로 위원장이 되기도 하였고, 그 후 3인이 나서서 납치극까지 벌어졌다. 1986년 임금인상에서도 어용노조는 회사측과 야합하여 3~5%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였으니 노동자들의 원성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6년, 대의원에 당선된 노동자들이 서명 작업을 통한 임시총회개최요구, 도시락거부투쟁, 재교육 반대 투쟁 등의 근로조건개선과 어용노조민주화 운동을 대중의 지지 속에서 전개했던 것이다. 위기감을 느낀 회사와 어용노조는 두 사람의 조합활동과 대중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이들의 활동에 적극 동조한 한 사람과 함께 세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지속적인 선전활동을 통해 어용노조의 실상을 폭로하고 조합원들의 의식고양에 주력했다. 1987년 해고된 세 명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노동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은 계속되었다. 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는 노동자들의 성금으로 '조공 노동자 신문'을 발행하여 어용노조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를 조직화하고 조합원들을 노조민주화투쟁에 나서도록 고무하였다. 이와 같이 1986년 이래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조선공사 노동자들의 노조민주화운동은 1987년에 이르러 추진위를 구성하고 신문을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어용노조의 해악을 낱낱이 폭로하여 노조민주화만이 자신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조합원 가슴속에 깊이 심어놓았다. 이렇게 축적된 노동자들의 민주화 의지와 투쟁역량은 노동자대투쟁의 선두에 서서 정부와 자본의 폭력적인 탄압에 치열하게 맞설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국제상사 노동자투쟁**

A2 [사건 일시] 1987.07.28~08.31

A3 [사건 배경] 계속 강화된 노동운동의 탄압 속에서 1987년 임금인상투쟁과 아울러 6월 민주항쟁으로 고무된 노동자들의 투쟁은 7.8.9월에 걸쳐 집중적이면서도 치열하게 전개되는데, 부산의 노동운동은 1987년 7월 중순경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자대투쟁의 대열에 나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7월 28일 구사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전국을 경악케 한 국제상사 노동자투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태광산업, 조선공사의 승리와 함께 부산지역 노동자들은 크게 고무 받았으며 인근의 사상공단에 있는 세신실업 노동자들의 승리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투쟁소식과 매스컴, 유인물은 전 지역에 전해지고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기 시작한 가운데 구사대 폭력의 대명사로 불리는 국제상사 투쟁이 시작되었다.

A4 [전개 과정]

1987.07.28 국제상사 노동자 투쟁 시작, 금형과 40여명이 여름 휴가비 지급(100%)를 요구하며 점심시간 농성 개시

1987.07.29 사측은 휴업공고 내걸고 협상대표를 감금, 경찰에 인계하려는 등의 강경책 사용하였으나 노동자들은 굳센 단결로 협상대표를 구출,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

1987.07.30 기숙사에서 철농하던 노동자들이 휴업공고에도 불구, 출근하던 동료들과 합류하기위해 회사정문으로 대열을 지어 들어감. 회사 안에는 일당 3만원에 고용된 깡패와 관리자들로 구성된 구사대가 망치, 각목, 쇠파이프로 농성노동자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름. 구사대의 끔찍한 폭력으로 58명이 부상, 30명이 사망하였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게 됨으로써 인근의 사상주민, 지원투쟁에 나선 대학생과 노동자들은 물론, 시민들까지 밤을 지새우며 구사대의 기습에 대비.

1987.07.31 농성 노동자들의 대다수인 어린 기숙사생들이 공포분위기에 질려 동요하는 가운데 회사 측이 50% 휴가비를 지급한다는 소식에 투쟁대열은 흔들림. 회사측의 회유에 상당수 이탈, 사상성당으로 옮겨 농성.

1987.08.01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가는 동안 소수의 농성노동자만 남아 이들은 구사대의 폭력을 피해 사상성당으로 옮겨 농성을 계속. 사상성당에 모인 40여명의 노동자들은 폭력적인 탄압의 진상규명과 사후의 보복조치 금지 등을 내걸고 농성에 돌입.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성당 앞에서 집회개최,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 회사의 폭력성 등을 일반시민들에게 선전.

1987.08.06 회사 정문 앞에서 다시 300여 명이 모여 농성을 시작, 대기 중이던 전경들이 회사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와 최루탄을 쏘며 무자비하게 폭력 휘두르며 8명을 연행. 이에 노동자들은 회사 옥상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정당한 방어를 위해 신발과 화분 등을 던지며 맞섰고, 경찰을 불러들인 관리자 2

명을 구금, 교환을 조건으로 동료석방을 요구, 연행된 동료를 구해냄.

1987.08.07 조/반장 중심으로 구성된 구사위원회, 정상조업과 불순세력을 몰아내자며 성당에 농성 중이던 동료 노동자들을 해산하기위해 성당 안에 들어와 난동을 부림.

1987.08.08 8일 이후 보너스 300%지급, 사후 보복 않겠다는 합의를 얻어내고,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농성해제 결의. 17일부터 정상출근하기로 결정.

1987.08.17 농성참가자들 출근하자마자 감금상태에서 폭행을 당하면서 사장 심재영의 '사후 보복조치는 없다'는 약속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남.

1987.08.19 회사관리자들은 농성자 대표였던 김행란에 대해 '지문조회를 해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는다,' '간첩이다' 등의 악선전을 사내에 유포.

1987.08.31 8월 말까지 부당해고자가 발생, 회사 내의 작업환경은 더욱 열악해 짐.

A5 [사건 내용] 금형과 40여명이 여름 휴가비 지급(100%)를 요구하며 점심시간을 이용해 농성을 개시하자, 이 투쟁은 순식간에 2천여 명이 참여한 대중투쟁으로 발전하였다. 학교에서 태광산업의 학생노동자로부터 태광산업의 승리소식을 듣고 고무된 기숙사 야간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기숙사에서의 철야농성으로 발전하였다. 회사측은 휴업공고를 통해 협상대표를 감금하여 경찰에 인계하려는 탄압을 가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협상대표를 구출하고 계속 투쟁하고 다음날 출근투쟁을 하였으나 현장에 대기하고 있던 구사대의 극악한 폭력에 58명이 부상당하고, 30명의 사망설이 나돌 정도로 잔인한 상처를 입었다. 이에 노동자들도 후퇴하며 투석전을 전개하였지만 기숙사에까지 진입하려는 구사대에 맞서서 화염병과 각목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에 인근의 사상주민, 지원투쟁에 나선 대학생들, 노동자들이 모여 국제상사 노동자들을 지원했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1일부터 4일까지 휴가에 들어감에 농성자들은 구사대폭력을 피해 사상성당으로 옮겨 농성을 계속했다. 사상성당의 40여명의 노동자들은 폭력탄압 진상규명과 사후보복조치 금지 등을 내걸고 농성에 들어갔다. 매일 7시 30분에 성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 회사의 폭력성 등을 선전하고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소식을 전달하며 투쟁의지를 다지는 등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투쟁분위기를 고양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 과정에서 10명의 해고자를 남겼다.

A6 [관계 인물] 김행란(농성자 대표)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택시지부 전국연대 총파업**

A2 [사건 일시] 1987.08.28~09.05

A3 [사건 배경]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택시지부는 1987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만 9일 동안 전국적인 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부산택시 기사의 움직임은 7~8월 들어 꾸준히 있어왔다. 1백 13개의 택시회사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있는 1백여 개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 및 근로조건 개선투쟁이 벌어졌다.

A4 [전개 과정]

1987.08.18 택시기사들의 투쟁의지는 1987년 8월 18일 노동자 복지회관 앞에서의 어용지부 타도를 위한 부산시내 전 택시기사들의 지역집회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날 택시기사들은 “현 택시노조 지부장 퇴진”, “임금협정을 다시 할 것”, “상여금 400% 지급” 등 5개항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제지로 또 지도부의 지도력 부재로 실패로 돌아가고 2명의 기사가 구속되고, 7명이 즉심에 회부되었다. 25일 택시지부 위원장들은 중징계철폐 등11개항을 새로이 내걸고 이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8일 하오4시를 기해 운행을 전면거부하기로 하였다.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지역 택시회사 기사들은 만 9일 간의 전면파업을 전개하였다. 8일째 되면서부터 지역차원의 노사협의가 결렬되고 개별협의를 통해 영업개시를 하는 업체가 많아졌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1백9개 파업회사 가운데 29개 회사 소속 택시 1백여 대가, 상여금 50% 추가지급, 공휴일 유급휴가 실시 등 7개항에 합의하고, 하오 8시께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8개 회사 택시 500여대의 기사들은 합의사항에 불만을 표시하고 운행을 거부했다.

A5 [사건 내용]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전국자동차노조연맹 부산 택시지부가 1987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만 9일 동안 전국적인 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였다. 부산택시 기사의 움직임은 7~8월 들어 꾸준히 있어왔다. 1백 13개의 택시회사 중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있는 1백여 개 사업장에서 어용노조 민주화 투쟁 및 근로조건개선투쟁이 벌어졌다. 택시운수업의 경우 지부체계의 비민주성과 어용성이 타 지역에서도 끊임없이 문제로 되어왔다. 특히 부산택시지부의 1987년 임금협정은 조합원의 권익을 외면한 것으로, 노동자의 불만의 표적이 되었다. 1987년도 임금협정은 1986년 임금수준에 비해 도리어 4,743원 인하된 셈이었고, 법정휴일 유급휴가가 서울은 6일, 마산은 12일인데 반해 부산만이 단 하루였고,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무시한 9시간 30분으로 기본 근로시간이 임의로 설정 조인되어왔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부산본부, 「잔업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대우정밀 노동자투쟁**

A2 [사건 일시] 1988.03.23~07.12

A3 [사건 배경] 1988년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성과위에서 노동운동이 질적으로 강화, 발전해나간 시기였다. 임금투쟁, 민주노조사수투쟁, 어용노조민주화투쟁, 위장폐업 철회투쟁을 단위노조 차원의 독자적인 투쟁뿐 아니라 다양한 공동연대투쟁과 결합, 전개해나갔다. 이런 와중에 1988년 3월 하순 대우그룹 산하의 각 공장 중에서 역량있는 노조를 갖고 있던 기업의 노동자들이 임금교섭에 들어가면서 1988년 임금인상투쟁의 막이 오름. 대우정밀 노동자들은 1987년에 결성된 노조를 기반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임금인상투쟁을 준비해나갔는데, 임금인상요구안을 작성하기 위해 시장조사, 설문지조사, 공개 자료조사, 그룹 내 타사업장과 지역 내 동종업종과의 임금실태 및 근로조건 등을 직접 조사, 조합원가족과의 간담회, 전 조합원과 조합간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치밀한 사전조사와 교육은 본격적인 임투에 들어가서는 커다란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3월 23일부터 기본급 35%인상과 직급호봉 개선 등을 내걸고 '리본달기'부터 '철야농성'까지 갖가지 방법으로 투쟁하며 13차례나 단체협상을 가졌다.

A4 [전개 과정]

1988.03.23~05.19(1차 파업) : 대우정밀공업 노조는 1988. 3월초부터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수차 단체 교섭을 하였으나 타결되지 아니하여 파업을 강행하였다. 무려 12회의 교섭이 결렬되자 485명의노조원들은 김우중 그룹 회장을 직접 만나기 위하여 동년 4월 12일 상경하였다. 그러나 서울역에서 백골단과 전경들의 기습으로 인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그룹 사옥 대신에 명동성당에서 12일간의 농성에 돌입하였다. 결국 88년 5월 14일에 노조 대표들과 김우중 회장의 직접 협상이 전기가 되어 5월 19일에는 노사 간의 파업 종결 합의가 이루어졌다.

1988.03.23 대우정밀에서 단체협약과 직급호봉체계의 조정문제로 철야교섭을 진행.

1988.03.25 잔업거부, 리본달기, 특근거부 등 준법투쟁을 개시. 이후 13차례나 단체협상을 가졌으나 사측은 나서지 않음.

1988.04.11 회사측은 14차 협상에서도 나서지 않으며, 이성도위원장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고소.

1988.04.23 회사측의 무성의와 노조탄압에 맞서 상경을 강행. 상경에 임하여 노조원들은 '우리는 왜 서울로 올라가야만 하는가'라는 유인물에서 허수아비 우기범 사장과 더 이상 교섭을 해봐야 진전이 없음을 인식, 김우중 회장과 직접 담판을 지을 것을 밝힘.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출정식을 마치고 서울 대우빌딩에 도착. 노동자들을 기다리던 1,000여명의 전경과 백골단은 강제귀가와 무차별 연행을 일삼았으나 170여명의 노동자들은 명동성

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감. 또한 양산에 남아있던 1,000여명의 노동자들도 2차 지휘부의 지도아래 철농에 들어감.

1988.05.04 상경했던 대우정밀 노동자들은 11일간의 명동성당 농성을 끝내고 양산으로 돌아옴. 명동성당 농성 해제 당시 사측은 노동자들과 '고소취하', '쟁의신고철회', '상경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내려가는 즉시 교섭에 임한다'는 4개항에 합의.

1988.05.05 대우정밀 우기범 사장은 23일 이후 교섭장에 나타나지 않음. 조합원들은 다시 25일간의 철야농성에 들어감.

1988.05.12 5월12일부터 사측은 통근버스 운행중지, 단전단수, 식당운영 중지 등 사실상의 직장폐쇄를 감행,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단식농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삭발 결의로 전열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한편, 시내 전역에 사측의 무성의를 홍보하면서 5월 14일 김우중 회장을 교섭에 직접 끌어내는데 성공, 타결의 실마리를 풀었던 것.

1988.05.19 대우정밀 노동자들은 57일 간의 임금인상투쟁에서 승리. 제20차의 교섭에서 기본급 4만 1천 4백원 인상(18.7%), 생산장려수당 1만 5천원 신설, 근속수당 5천원 인상, 1호봉 승격과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기본급의 60%로 지급하는데 합의한 것이 조합원 총회에서 통과.

1988.06.30~07.12(2차 파업) : 합의서의 문안에 대한 해석이 사측과 노조측의 갈등을 불러왔고, 노조 집행부는 자신들의 합의의 잘못으로 근로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수 없다는 각오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측은 노조 위원장인 이성도와 정우영의 사직을 요구하였고 이들은 1988.6.17일 회사와의 합의하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날인 1988.6.18 09:00 경 근로자들은 두 사람의 사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사표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88.6.20 부터 작업 거부를 예고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1988.6.27 개최된 노조 임시총회 석상에서 전 조합원의 결의에 따라 사표의 철회를 수락하였고, 근로자들은 사표가 반려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거부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 조건과 다른 합의서 안대로 일방적인 임금지급 후 이성도와 정우영을 형사 고소하여 정우영은 1988.7.7 구속되었다. 수배기간중 이성도는 대표이사와의 긍정적인 협상을 끝내고 노조간부들과 대의원들에게 정상조합을 촉구 하여 1988.7.13 부터 정상조업이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성도위원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혐의로 구속 수사 되었다.

A5 [사건 내용] 대우정밀 노조는 기본급 4만 1천 4백원 인상(18.7%), 생산 장려수당 1만 5천원 신설, 근속수당 5천원 인상, 1호봉 승격과 쟁의기간 중의 임금을 기본급의 60%로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인상투쟁 승리.

A6 [관계 인물] 이성도(대우정밀 노조위원장)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6.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노동법개정 투쟁**

A2 [사건 일시] 1988.06.13~11.03

A3 [사건 배경] 1987년 말 개정된 노동법은 노조설립 및 노동쟁의의 조건을 부분적으로 보완한 데 지나지 않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심각하게 제약하였다. 1988년 10월 18일까지 발생한 노동쟁의 1,657건 가운데 합법적인 것은 314건에 불과하며, 81.8%에 달하는 1,343건이 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쟁의로 진행되었다. 이에 맞서 민주노조들의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노동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대중적인 것으로 전개되었다.

A4 [전개 과정]

1988.06.13 노동법개정전국노동조합특위 결성

1988.06.28 노동법개정 공청회

1988.07.10 마산에서 '노동운동탄압분쇄, 노동법개정촉구 및 노동부장관 퇴진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1988.08.19 20일까지 대전, '노동법개정전국회의'개최

1988.09.30 노동법개정문제를 둘러싼 노동자교육(1차)

1988.10.05 노동법개정문제를 둘러싼 노동자교육(2차)

1988.10.06 전국노운협 특위와 전국 노조특위가 전국노동법개정 투쟁본부 구성 합의

1988.10.09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부산에서 6백 명 참가

1988.10.30 노동자대회, '노동악법 개정을 위한 웅변 및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1988.11.13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 3만 명 참가 진행

1988.12.03 전국동시다발, 노동법개정투쟁

1988.12.04 8백여 명 참가, '노동악법개정 투쟁보고 및 노조탄압분쇄결의대회' 개최

A5 [사건 내용] 노조협의회들은 임금인상과 근로조건의 개선투쟁에서 보다 높은 제도개선투쟁으로, 지역적 연대투쟁에서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나아가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을 획득하고자 노동법 개정투쟁을 하반기 투쟁의 중심과제로 설정하였다. "노동법의 개정을 통한 활동영역의 확대", "제도개선요구투쟁의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정의의식 함양", "전국적 차원의 공동투쟁 전개를 통한 노동조합의 전국적 결속", "반민주악법 개폐투쟁과 결합함으로써 사회의 철저한 민주화 실현"등에 목표를 두고 본격적인 노동법개정투쟁을 준비해 나갔다. 노동법개정투쟁은 11월 13일의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및 노동악법개정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왔는데, 이날에는 3만여명이 참가하였고 이후에는 5만명으로 까지 참가자가 늘어났다. 이 노동법 개정투쟁을 통하여 노동악법개정이라는 전노동자계급의 공통된 요구를 내걸고 지역차원의 연대를 넘어 전국적 연대를 통한 전노동자들의 통일된 투쟁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각 지역에서 민주노조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투쟁에 성과를 다져나가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부산지역노조연합회, 만호제강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한독병원노조 파업사건**

A2 [사건 일시] 1988.12.01~1990.11.08

A3 [사건 배경]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고양된 지역의 노동운동은 다양한 형태의 조직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열악한 형태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변형된 형태의 노동조합 와해의 시도들은 사측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

A4 [전개 과정]

1988.12.00 40여 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

1990.02.28 노조는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병원측은 전노협 가입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 서근애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

1990.08.10 8월10일까지 39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의견을 좁히던 중 병원 측은 13일 서근애에 대해 노조업무에만 충실하다는 것을 핑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1990.08.28 서근애가 노동조합업무만 전임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고. 이에 서근애는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8월 17일부터 9월 21일 정도까지 항의 시위

1990.11.08 병원 측은 업무방해 고소를 취소, 서근애는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취소하는 것에 합의

A5 [사건 내용] 1988년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도중 회사 측은 남자 노조원들에게 차등인상분을 지급, 4명의 남자 노조원이 탈퇴하고 노동조합장마저 사퇴한다. 서근애가 후임으로 노동조합장을 맡게 되고 1988년 12월 40여 차례의 단체교섭을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된다. 1989년 임금협약에서 노조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17일간의 쟁의를 거쳐 임금을 체결한다. 90년 2월 28일부터 노조는 단체교섭을 시작했지만 병원측은 전노협 가입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 서근애에게 근무지 복귀를 지시

한다. 8월10일까지 39차례의 단체교섭을 통해 의견을 좁히던 중 병원 측은 13일 서근애에 대해 노조업무에만 충실하다는 것을 핑계로(1989년 임금교섭에 앞서 경리과장이 서근애에게 재떨이를 던져 정신을 잃은 사건이후 노조겸임에서 노조 전임으로 바뀌는 것을 인정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노조 측 징계위원회 위원을 위촉해라는 공문을 보낸다. 이에 권수정을 비롯한 20여명의 노조원들은 17일부터 1990년 8월 중순경 병원 측은 노동조합장은 노동조합업무와 고유업무를 겸임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서근애가 노동조합업무만 전임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8월 28일 해고한다. 이에 서근애는 동료 조합원들과 함께 8월 17일부터 9월 21일 정도까지 항의 시위를 벌인다(8월17일, 18일, 20일, 22일, 24일, 27일, 28일, 29일, 9월 7일, 11일, 18일, 21일) 중앙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항의시위를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또한 90년 2월 부산진구청의 노조업무 조사 실시 공문을 서근애에게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조치했다(이후 1990년 11월 8일 병원 측은 업무방해 고소를 취소, 서근애는 부당노동행위 고발을 취소하는 것에 합의했다).

A6 [관계 인물] 서근애, 권수정, 임상순, 박금랑, 이양례

A7 [관계 단체] 한독병원노동조합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백병원노조 파업사건**

A2 [사건 일시] 1989.03.06

A3 [사건 배경]

A4 [전개 과정]

1986.03.06 병원 측과 1989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임금교섭을 시작

1986.04.10 8차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

1986.04.10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쟁의 발생신고

1986.04.21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락

1986.04.27 간부 10여명은 단식농성

1986.05.01 서울과 부산 두 병원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였으나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 1백만원을 선고

A5 [사건 내용] 백병원 노동조합은 1989.3.6 부터 병원 측과 1989년도 임금인상을 위한 임금교섭을 시작하여 1989.4.10까지 8차 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어 1989.4.10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에 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다. 노조는 15일의 냉각기간 동안 노조원들의 가슴에 “89 임금투쟁기간”이라는 것을 달았을

뿐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상근무를 계속하였다. 이 냉각기간 중 노조는 흡족한 합의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89.4.21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을 설득하여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병원 측의 조정안 거부로 합의는 결렬되고 이에 노조는 1989.4.25 임시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즉각 파업에 돌입하지 아니하고, 교섭을 계속하면서 1989.4.27 부터 간부 10여명은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단식농성도 무위로 돌아가게 되어 1989.5.1 부터 서울과 부산 두 병원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임과 동시에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고소당하여 벌금 1백만원을 선고 받았다.

A6 [관계 인물] 안덕호(1987.08.28에 서울~부산의 백병원에서 노동조합설립 및 지부장)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남천병원 노동자 탄압사건**

A2 [사건 일시] 1989.04.07~25

A3 [사건 배경]

A4 [전개 과정]

1989.04.07 남천병원장에게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3회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번번이 무시

1989.04.20 노조원 약 61명은 1층 로비에서 임시총회와 준법투쟁을 진행

1989.04.25 노동쟁의 발생신고

1989.05.03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정받고, 정상근무 시작하였으나 노조위원장 이진희를 고소하여 구속

A5 [사건 내용] 1989년 4월 7일경부터 남천병원장 배완수에게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3회에 걸쳐 요청하였지만 번번히 무시되고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불응하였다. 이에 이진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조(약 61명)는 1989.4.20 13:00경부터 25일 14:20경까지 사이에 1층 로비에서 임시총회와 준법투쟁을 진행하였다. 임시총회는 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였고, 가급적이면 병원에 피해가 가지 않을 1층 로비에서 진행하면서 맡은 직무는 성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중 1989.4.25 부터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였던 바 1989.5.3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고는 이후 임시총회의 소집 없이 정상근무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노조 위원장 이진희를 고소하여 구속 수사에 이르렀다.

A6 [관계 인물] 이진희(1988.5.7, 노동조합설립 및 위원장 역임)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동신화학노조 파업사건**

A2 [사건 일시] 1989.12.05~1990.03.00

A3 [사건 배경]

A4 [전개 과정]

1989.03.20 차상호를 비롯한 27명의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 차상호(위원장), 정철우(부위원장), 임요택(운영위원)

1989.12.25 사장인 한상남과 노조간부 5명이 만나 동신화학을 7개의 회사로 나눈다는 분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노조측 에서는 단체교섭을 요구, 사장은 노조측 제안 거부

1990.01.03 08:30분경에 작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과 고소인 7명의 출근을 방해

1990.01.05 17:20경에 1층 사무실에서 노조원들이 사장을 둘러싸고 노조위원장 차상호의 주도아래 협박 및 강금을 하였다는 주장아래 노조위원장 차상호 외 부위원장 정철우 운영위원 임요택을 고소

1990.01.05 사장과의 면담에서 강금 및 협박을 한 적은 없었음 확인

A5 [사건 내용] 동신화학공업사는 완구 제조 공장으로서는 중견의 위치에 올라있었지만 열악한 근로조건과 법에 정해진 휴가는 물론 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1989년 3월 20일 차상호를 비롯한 27명의 근로자가 노조를 설립하고 차상호를 위원장으로 정철우를 부위원장으로 임요택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회사측에서는 1989년 12월 25일 사장인 한상남과 노조간부 5명이 만나 동신화학을 7개의 회사로 나눈다는 분업계획을 발표하였다. 노조측 에서는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사장인 한상남이 노조측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회사측에서는 노조가 제조 업무를 방해하고 1990년 1월 3일 08:30분경에 작업을 희망하는 비노조원과 고소인7명의 출근을 방해하였으며 출근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고소인 전원기에게 전치10일간의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1990년 1월 5일 17:20경에 1층 사무실에서 노조원들이 사장을 둘러싸고 노조위원장 차상호의 주도아래 협박 및 강금을 하였다는 주장아래 노조위원장 차상호 외 부위원장 정철우 운영위원 임요택을 고소하였다. 하지만 노조측은 회사측에서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는 휴업계를 제출한 상태였고 1월 3일 출근하는 고소인 7명을 출입을 통제하였지만 별다른 몸싸움은 없었으며 위원장 차상호는 휴게실에서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7명의 고소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몸으로 막기는 하였지만 전원기는 문을 뒤에서 미는 힘에 의해 넘어진 것이며, 1990년 1월 5일 또한 사장과의 면담에서 강금 및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A6 [관계 인물] 차상호, 임요택, 정철우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교도관 단체행동 사건**

A2 [사건 일시] 1990.02.05

A3 [사건 배경]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조직화된 형태의 노동운동이 많이 벌어진다. 이러한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교도소공무원 역시 이에 고무되어 공무원노조결성을 시도하게 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좌절을 겪게 된 사건

A4 [전개 과정]

1989.10.00 부산교도소 공무원으로 특채

1990.02.05 부산교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처우 개선을 집단행위로서 관철하겠다는 의도로 유인물 200매를 제작하여 일시 보관

1990.02.13 부산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중식을 거부하자는 유인물을 교도관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두어 교도관들 중 32명이 동일 점심을 한 끼 먹지 않게 하였음.

1990.02.17 이로 인하여 1990년 2월 1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

1990.04.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제기

A5 [사건 내용] 부산교도소 교도시보로 특채 배치된 유영규(1989.10월 특채)는 부산교도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처우 개선을 집단행위로서 관철하겠다는 의도하에 1990년 2월 5일부터 11일까지 별지와 같은 유인물 200매를 제작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1990년 2월 13일 부산교도소에 근무하면서 중식을 거부하자는 유인물을 교도관들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두어 교도관들 중 32명이 동일 점심을 한 끼 먹지 않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1990년 2월 1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구속되고 1990년 4월 12일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다(판결문 참조).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주)코파트 노동조합 탄압사건**

A2 [사건 일시] 1990.04.09~05.16

A3 [사건 배경]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고양된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 회사측은 오히려 조직적인 형태로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하고 와해시키려는 형태로 해고, 고소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의 사례 중 하나이다.

A4 [전개 과정]

1990.04.09 4월9일일부터 회사와 90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및 임금교섭을 실시

1990.05.16 5월16일까지 8차 교섭을 실시, 미합의로 파업. 회사 측은 업무방해, 화염병제조 등으로 노조를 고소

A5 [사건 내용] (주)코파트 노동조합은 1990년 4월 9일부터 회사와 1990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및 임금교섭을 실시, 5월 16일까지 8차 교섭을 하였으나 노사 간 합의를 못하여 파업을 하게 된다. 종업원이 2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회사에서 사장 대신 상무가 교섭대표로 나오는 것도 이례적일 뿐 아니라 회사측이 주장하는 인사,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타당성이 없어 노조는 법정절차를 거쳐 정당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업무방해, 화염병제조(회사측과 경찰의 불법적인 파업 파괴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 없었음)등으로 노조를 고소하였다.

A6 [관계 인물] 강선진, 최낙윤, 임철진, 송왕준, 주우종, 정대식, 최상국, 이성태, 황청수, 박태천, 유충기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풍산금속 노동자 투쟁**

A2 [사건 일시] 1990.09.08~1991.06.15

A3 [사건 배경] 1987년도의 노동자대투쟁의 과정과 1988년도의 노동법개정투쟁 등의 극변의 시기에도 방위산업체라는 특수한 조건에 있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와 상대적으로 높다는 임금으로 파업에 자주 참여하지를 못해왔다. 그러나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인상투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의 노동대중의 요구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준군대적인 사업장의 규율체계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다. 대우정밀과 풍산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라 하겠다.

A4 [전개 과정]

1990.09.08 풍산금속 파업실시

1990.09.11 노사분규 4일째 풍산금속 동래공장 공권력투입 강제 해산, 358명 연행

1990.09.15 노동자, 학생 등 부산대 운동장서 '풍산사태 규탄' 시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음.

A5 [사건 내용] 1987년 노동자 대투쟁과 노동법개정과 같은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의 특성상 (주)풍산에서의 파업이란 꿈을 꿀 수도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1990년 풍산금속 동래공장(부산)에서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자, 이에 노조에서 작업거부로 대응을 했다. 그러자 회사 측에서는 무기한 휴업조치를 취하고 공권력을 투입함으로써 학생들도 참여한 형태의 가두투쟁까지 발생하게 되었던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남연모 풍산금속 부산지부장을 비롯한 2인이 구속되었다.

A6 [관계 인물] 남연모(풍산금속 부산지부장)

A7 [관계 단체]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박창수 한진중공업노조위원장 의문사사건**

A2 [사건 일시] 1991.05.06

A3 [사건 배경] 노태우 정권은 1990년 전노협 와해공작에 실패한 후 지노협을 와해시켜 전노협을 무력화시키려 했고 이러한 1991년 전노협 무력화 공작은 영남지역 노동 운동의 중심지인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부산에서 안기부 등 공권력을 동원한 공작은 부산 노련의 핵심사업장인 대우정밀, 한진 중공업, 고려부산노조를 전노협에서 탈퇴시키기 위한 입체적 작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 조합원들이 91%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출신인 박창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28년 동안의 강요받던 어용노조가 민주노조로 탈바꿈 하며 타 노조들과의 활발한 연대활동을 전개하자 이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노태우 정권은 부산지역 노동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진중공업의 민주노조 집행부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한편 안기부에서는 노조 간부를 매수하면서 지도부를 교란·약화시켜 한진중공업을 전노협으로부터 떼어내려는 공작을 전개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조합원들의 연령이 높고 의식이 취약하며 노조의 집행력이 아직은 취약하므로 지도부 몇 사람만 매수하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른 공작은 한진중공업노조가

스스로 전노협과 부산노련을 탈퇴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아주 치밀한 정치적 계산 하에서 진행되어 실제탄압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이는 1991년 상반기에 포항제철 노조가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 회의(이하 '연대회의')'를 탈퇴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탄압공작이었다. 전노협 중앙위원이자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인 박창수 위원장이 공작탄압에 의해 살해된 1991년 5월 6일, 노동운동진영은 박창수 위원장의 죽음은 '노동운동 탄압의 집약적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1차적 투쟁 주체로 한진중공업 노조를 비롯한 전노협, 연대회의,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준비위원회 등 6개 노동단체로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노동운동 탄압분쇄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이하 '전국노대위')를 구성하였다. 전국노대위는 연세대와 안양, 그리고 전노협 사무실에 상황실을 두고 집행위원장 산하에 상황실장단, 상황, 선전, 투쟁기획, 진상조사, 연대사업, 문화, 언론홍보 등의 부서를 설치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5월 18일 전개된 투쟁은 전국적으로 총 19개 지역, 156개 사업장, 91,415명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후 5월 20일 오후 9시 집계를 보면 파업중인 사업장은 42개 사업장에 16,202명, 휴무 사업장은 20개 사업장에 458,33명(현대자동차 28,000명, 대우자동차 12,600명 등), 그리고 4시간 파업 사업장은 25개 사업장(파업 16+4시간 총회 9개 사업장), 2시간 파업 사업장은 38개 사업장, 1시간 29개 사업장, 집단 조퇴 2개 사업장이었다. 박창수씨의 의문의 죽음 이후 전개된 약 2개월간의 투쟁은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제3자 개입 등 노동 악법의 문제, 정부와 자본의 반 노동자, 반 인권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노동자에겐 민주노조(전노협)의 사수 강화의식을 높여 민주노총으로의 발전과 합법화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A4 [전개 과정]

1958.07.28	부산 출생
1979.02.00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1981.05.00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배관공으로 입사
1991.02.00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1991.05.04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1991.05.06	의문의 죽음을 당한 변사체로 발견됨. 양산 솥발산 묘원에 안장

A5 [사건 내용] 1987년부터 노조운동에 헌신하였던 박창수(당시 33세)는 28년 동안의 어용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1990년 7월 한진중공업에 민주노조를 탄생시키며 전노협과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는 대우조선의 파업관계로 긴급 소집된 대기업 노조연대회의에 참석했다가 제3자 개입금지와 집시법 위반으로 1991년 2월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임기 중에도 안기부 직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전노협 탈퇴를 종용 당하였으며, 안양구치소 수감중에도 신원미상의 몇 명과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며 계속적으로 안기부의 압력

을 받아왔고, 5월 4일 의문의 상처를 입고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 5동 613의 9에 소재한 종합병원인 안양병원에 입원한 후 5월 6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박창수씨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비관자살이라고 발표했지만 자살할 사람이 링겔병을 7층 옥상까지 가지고 간 것과 병원전체의 창문과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병원 측에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쇠창살과 열쇠로 잠겨놓았던 상태를 볼 때 도저히 자살이라고 볼 수 없었다. 또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을 당시 안기부요원이 계속적으로 접촉을 했고, 당일 저녁에 신원미상의 젊은 괴청년이 병실을 방문한 사실과 안기부 직원이 전화를 통해 계속적으로 박창수씨와 통화를 부탁해 온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전노협 탈퇴를 종용해 오던 안기부에 의해 살해된 것이 분명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병원에 백골단을 투입해 영안실 벽을 깨부수고 강제로 시신을 탈취해 강제부검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부검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동지가 계속되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으로까지 사수한 전노협의 깃발은 이제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의 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1991년 부산지역 임투의 특징적인 양상은 총 23개 사업장이 파업투쟁에 돌입한 사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는 데 있다. 이렇듯 부산지역의 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비교적 유리하게 진행된 데에는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의문사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다. 강경대 학생의 죽음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5월 투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박창수 한진중공업 위원장의 의문사는 군부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크게 증폭시켰을 뿐 아니라, 비민주적인 정부의 만행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분을 이끌어 냄으로써 5월 투쟁에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박창수 위원장이 옥중에서도 전노협 탈퇴 압력을 거부하면서 전노협 사수를 위해 투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다소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민주노조들은 전노협 사수의 결의를 다시금 확고히 하게 되었다(『부산민주운동사』: 581, 전국노운협, 『전국주간정보』, 제4호(1991.5.11), 제5호(1991.5.21), 제7호(1991.7.12). 1991년 부산지역 상반기 투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양상을 보인 것은 대우정밀 투쟁이었다. 대우정밀노조는 정부와 사용자 측의 계속된 탄압과 회유에 맞서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박창수 위원장의 옥중 살인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투쟁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진중공업 노조와 함께 지역 임투 전선을 강화하고 부산노련을 지켜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해고 43명, 구속 26명, 특례병 16명 해고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특례노동자들의 강제징집 철폐투쟁 등 저항을 계속한 대우정밀노조의 투쟁은 전투적 노동운동의 모범으로 평가된다(참조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주간 노동운동』, 제1호(1991.3.27). 전노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금인상과 물가폭등 저지 및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국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전국투본')는 '고 박창수 위원장 옥중 살인 진상규명 및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날은 전국 98개 노조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동악법 철폐와 노동부장관 구

속, 노동운동 탄압 분쇄를 내걸고 총력 투쟁하였다. 그리고 오후 9시경 안양병원 주위에서는 2만여명이 집회를 개최하야 시신탈취에 대해 항의하였다(전노협 백서 중). 당시 박창수씨의 의문의 죽음 이후 전개된 "약 2개월간의 투쟁"은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3자 개입 등 노동악법의 문제, 정부와 자본의 반노동자, 반 인권주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노동자에겐 민주노조(전노협)의 사수 강화의식을 높여 민주노총으로의 발전과 합법화의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A6 [관계 인물] 박창수

A7 [관계 단체] 전노협,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회의, 전국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박창수 위원장 옥중살인 규탄과 노동운동 탄압분쇄 전국노동자 대책위원회,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준비위원회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신발노동자 권미경 투신 사망사건**

A2 [사건 일시] 1991.12.17

A3 [사건 배경] 1991년 9월에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한 데서 확인되듯이 부산지역의 주종산업인 신발 산업장에서의 노동운동 탄압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신발산업이 점차 사양 산업화되면서 신발업계의 연쇄도산과 공장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신발사업장의 어용노조들은 '구사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상여금 반납, 토요일 연장근무, 자체 안전관리 강화, 30분 더 일하기 등의 운동을 전개하여 노동강제를 강화하는데 앞장서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대봉의 미싱사로 근무하던 권미경 양이 12월 6일 자신의 팔뚝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억압의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속에 묻어주오. 그 때만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참조 : 부산노동자연합, 『부산노동소식』제64호 (1991. 12. 17).

A4 [전개 과정]

1991.09.00 노동자 블랙리스트 발견

1991.12.06 투신자살

A5 [사건 내용] 투신자살 이후 부산노련, 부노련, 부산연합 등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구성된 '고무노동자 고 권미경 양 사인규명대책위원회'(위원장 배다지 부산연합 상임의장)는 죽음과 관련된 몇 가지 의문점을 조사 규명하는 한편, '30분 더 일하기 운동'을 철폐하기 위한 선전과 규탄집회를 계속하였다. 지역 노동자들의 독서모임인 '도서원 광장'에 나가면서 노동자의 의식에 눈을 떴고, 자랑스런 노동자의 모

습을 잃지 않았던 권미경은 신발업체인 대봉에서 1991년 11월부터 어용노조의 협조 속에서 30분 일 더하기 운동, 구사운동과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노동통제강화에 맞서 1991년 12월 공장 옥상에서 투신, 죽음으로 항거하였다. 양산 솥발산 공원 묘역에 안장되었다.권미경양의 장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12월 22일 부산노동자장으로 엄수되었다. 이러한 권미경 양의 죽음은 신발사업장 구사운동에 대한 반대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고무노민추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권미경양의 죽음의 의미를 축소 훼손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온갖 방해를 물리치고 자체 재정과 동력으로 부산노동자장을 쟁취함으로써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자긍심을 높였으며, 지역 내 노동단체와 선진 활동가들 사이에 연대와 단결의 정신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부산노동자연합, 『부산노동소식』, 제65호(1991.12.31), 「고무노동자 권미경 열사 사인규명 대책위 및 장례위 활동 평가서」참조).

A6 [관계 인물]

A7 [관계 단체] 부산노동자연합, 부산노련, 부산연합, 고무노민추

A8 [관계 자료]「고무노동자 권미경 열사 사인규명 대책위 및 장례위 활동 평가서」

A9 [관련 사건]

5. 종교계운동

<개요>

산업화와 관련한 계급세력들이 성장해 나온 데는 청년학생운동의 선도적 투쟁이나 종교계운동의 지원에도 힘입은 바 컸다. 종교계운동은 정치적 민주화 그 자체를 위한 저항운동뿐 아니라 노동이나 농민집단의 성장을 위한 지원에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의 가톨릭노동청년회(JOC, 지오세)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신치하인 1974년, 종교계는 주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나 수녀회 등의 활동, 또는 지학순 주교를 위한 기도회 형태 등을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 '인권회복'을 주제로 한 성명서 발표 등이 위주였다. 이에 가톨릭노동청년회(JOC)가 만들어지면서 노동문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의 형태로 종교계운동의 차원을 넓히게 된다. 그 후 개신교 측의 기독교도시산업선교회(약칭 도산)도 최성묵 목사(작고)와 박상도 총무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의식화와 정치문제에 대한 기도회, 대중선전 등의 활동을 활발하고 끈덕지게 벌였다.

그러던 중 1978년,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양서협동조합'이 결성되면서 지역의 종교계 활동가들과 학생운동 진영 활동가들이 자연스럽게 결합하게 되었다. 그 무렵 '도산'과 '지오세'를 중심으로 노동상담 및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되었다.

1980년에는 기독교 부산감리교단의 임기윤 목사가 보안사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응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1982년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때는 최기식 신부가 범죄인 은닉혐의로 함께 구속되기도 하는 등, 종교계가 민주화운동 과정에 많은 희생도 당하였고 민주화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1987년의 6월항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구심으로 작용하게 된 곳이 바로 '부산가톨릭센터'였다. 6월항쟁 기간 내내 농성과 시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기능했던 이곳은 부산민주항쟁의 과정 내내 일종의 야전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청년회 형태로 결집되어 있던 선도적인 학생신자들이 1980년대 중반 각 대학의 학생회가 부활하게 되면서 교회나 성당으로부터 대중적인 학생회라는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로써 종교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A1 [사건명] **중부교회 『책방골목』필화 사건**

A2 [사건 일시] 1976.02.14

A3 [사건 배경] 유신체제의 모순이 깊어져 가던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은 약간의 '합리적' 비판도 용인하지 못하는 신경질적 반응으로 일관하였고 초법리적인 '긴급조치'라는 탄압봉을 휘두르는데 여념이 없었다. 그러한 정권에게 민주주의의 원리나 기본적 인권의 관념 따위는 아예 사고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그처럼 기형적 수준의 정권 아래서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질

의 것이었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부산 중부교회(담임목사 심응섭) 대학부는 1976년 1월 중순경부터 소속 대학생에게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부 회보를 발간할 것을 계획했다. 회지의 제목은 『책방골목』으로 정하였다. 흔히 '중부교회 주보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당시 문제가 된 문건은 신도 모두를 대상으로 한 소식지로서의 일반적인 '주보'가 아니라 대학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회보'였다(따라서 '중부교회 주보 사건'은 잘못 붙여지고 알려 진 사건명이다). 창간호의 원고를 대학부 회장인 김영일과 조태원 등이 준비하여 등사판으로 70부 제작하였다. 그것을 1월 28일부터 2월 1일 주일에 걸쳐 심응섭 목사, 중부교회 교인, 대학부 회원 등 27명에게 45부 배포하였다. 그런데 2월 9일 오후 2시 중부경찰서 직원이 그 회보 2부를 가져간 후 최성묵 전도사를 중부서로 소환하여 회보 제작 경위를 조사하였다. 2월 10일 김영일(부산대3), 조태원(부산대3), 이태성(동아대2)을 연행하고, 교회 내 대학부실 서류함에 둔 나머지 회보도 압수해 갔다. 연행되었던 학생들은 2월 14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것은 회보의 서문격인 「인사의 말」을 조태원이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국적이니 유신이니 따위는 말고…" 운운한 부분이었다. 이들을 구속한 후 담당경찰서, 시경, 중앙정보부 등은 담임목사, 전도사, 가족들에게 조용히 있어야 이들이 풀려난다고 은근히 위협을 하였으며, 2월 15일에는 기관원 8, 9명이 중부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최성묵 전도사의 설교를 지켜보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하였다. 3월 13일 김광일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되었고, NCC 인권위원회와 이들이 소속한 KSCF도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3월 15~17일 인권위원회의 오충일 목사(위원), 이직형 사무국장, KSCF 안재웅 부장 등이 부산 중부교회를 방문하여 심응섭 목사와 면담하고 대책활동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가족, 담당 변호인과도 면담하였으며, 담당 재판관도 면담을 하는 등의 대책활동을 벌였다. 그 후 6월 17일, 김영일과 조태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태성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그러나 다니던 학교에서는 이미 그들을 제적해버린 후였다.

A6 [관계 인물] 조태원, 김영일, 이태성, 박상도, 최성묵

A7 [관계 단체] 부산 중부교회, 우리글방

A8 [관계 자료] [부경-종교1]구술증언록(조태원)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임기윤 목사 의문사 사건**

A2 [사건 일시] 1980.07.19~26

A3 [사건 배경] 감리교 임기윤 목사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유신치하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는 1970년 유신반대, 구속자 석방 등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시국강연회, 기도회 등을 열면서 사회의 비민주성을 꼬집고 1972년 김재준 목사와 함석헌 등 재야인사들이 '민주회복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최성묵, 송기인, 유기선, 심응섭 목사를 주축으로 '부산민주회복기독자회'를 결성, 유신헌법반대운동을 전개하며,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친다. 1974년 5월 심응섭 목사와 최성묵 등 7~8명과 함께 '부산인권선교협의회'를 결성하여 유신반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민중들의 자각을 촉구하였다. 그러던 중 1975년 2월 16일 침례교와 성결교까지 포함하여 범교단적으로 40~50명의 목회자가 조직한 '사회정의구현 부산지역기독인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함석헌 선생, 서남동 목사, 문동환 목사 등의 초청강연회를 개최하고 유신헌법폐지 청원서명 운동, 민주회복국민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시국 강연회 등을 열어서 민중들을 의식화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활동은 보수 세력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임기윤 목사가 광주항쟁에 대한 설교를 하자, 바로 며칠 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송된 적이 있다. 설교내용을 문제 삼아서 담당 형사가 찾아와 전두환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그러나 임 목사는 자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고 형사의 그런 유도성 질문에도 "나는 정치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한다"고 응답하며 국가 폭력의 부당함을 질타하였다고 한다. 임 목사는 당시 광주항쟁에 대한 설교를 하는 등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선도하는데 타협함이 없었다. 평소 "내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1980년 5·17 직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및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인사들을 연행, 조사, 구속하는 과정에서 임기윤 목사도 같이 연행되어 1차 조사를 받고 돌아 왔다. 그러던 중 1980년 7월 19일 토요일 새벽, 삼일공사(당시 보안사령부 부산분실)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는 통지서를 받고는 임 목사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후 변을 당한 것이다.

A4 [전개 과정]

1980.07.19	국군보안사령부 부산분실에 연행
1980.07.21	부산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 그 후 곧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재 이송
1980.07.26	의문의 운명

A5 [사건 내용] 임기윤 목사는 1980년 5·17 직후 연행되어 1차 조사를 받고 돌아왔지만, 7월 19일에 다시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 부산분실에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임목사의 부인 최광명 여사에 따르면 5·17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이라 굉장히 살벌한 시국이었지만 임 목사는 '참고인'일 뿐이니까 괜찮다면서 새벽 여섯 시쯤 집을 나갔으며, 그 날 저녁 선교사 다섯 분을 집으로 초대해 놓은 상태라 자신이 그 때까지 못 돌아오면 대신 알아서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나가

서는 다음 날 아침까지도 귀가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불안해하던 가족들은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임 목사의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기운 없는 목소리로, '다른 목사님을 모셔와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그것이 끝이었다. 임 목사가 의식 있는 채로 가족과 접촉한 것은. 이튿날인 7월21일, 가족들은 삼일공사로부터 임 목사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가족들이 삼일공사에 도착했을 때 임 목사는 이미 무의식 상태였다. 그로부터 5일 후인 7월26일, 임 목사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고단했던 삶을 마감했다. 당시 나이 58세였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임 목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부에 알려진 바는 일절 없고, 다만 보안사 측이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고혈압으로 쓰러졌다고만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광명 여사의 증언은 그와 정반대다. "혈압이 높긴요. 150-90으로 정상이었죠. 평소에 약 한 번 안 먹던 분이었어요. 그 때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목사님 머리를 만지다가 왼쪽 뒤통수가 심상치 않다는 걸 발견했었어요. 머리카락을 들춰보니까 한 3cm 정도 찢어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더라구요. 그 때 확실하게 알았죠. 이렇게 당했구나, 맞아서 쓰러진 거구나…." 그러나 그 상처는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은 채 장례식이 치러졌고, 수년 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족들은 임 목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7년여의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패소로 끝나고 말았다.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을 최광명 여사는 이렇게 전한다. "그 때 당했던 수난은 말도 못 하지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목사님이 그렇게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발걸음을 싹 끊더라구요. 무슨 피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너무 외롭고 속상해서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죠.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러나 임 목사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지 20년이 지난 2000년 7월 28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는 임 목사에 대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발표하였다.

A6 [관계 인물] 최광명(임기윤 목사 미망인), 송기인 신부, 유기선 장로, 심응섭 목사, 최성묵 목사

A7 [관계 단체] 사회정의구현 부산지역기독인회, 국군보안령부 부산분실(삼일공사)

A8 [관계 자료]

주간기독교 http://www.cnews.or.kr/1445/contents/senggak/senggak1445-2.htm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http://www.ugh.or.kr/ja/jaya4.html#임기윤

A9 [관련 사건]

6. 학술운동

<개요>

1950~60년대에는 산수 이종율 선생과 그 문하의 학술 써클이 부산·경남지역의 진보적 학술운동을 대표하는 독보적 집단이었다. 그러나 3·4월항쟁이나 10·16부마항쟁, 그리고 6월항쟁의 시기를 거치면서 각종 성명서나 선언문 형태의 현실참여가 두드러졌다. 1971년 전국 대학의 자유와 교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학자주화선언운동은 교수들의 학원자유수호투쟁으로 전개되기도 했고 교수협의회를 통한 '대학의 자율성보장 및 교수처우개선'을 위한 요구들로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다 1987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호헌조치' 철폐운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협의회의 형태로 대두한 학술운동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약칭 민교협)로 공식 등장하게 된다. 민주화에 대한 뚜렷한 지향을 가진 새로운 조직이 한국 교수사회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민교협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수들은 다양한 형태의 '시국선언'과 '성명서' 등을 통한 문제제기 집단으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한편 6월항쟁을 거치면서 조직적인 발전을 통한 학술연구모임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1987년 부산대학교 내 진보적 대학원생들이 결성한 '인문사회과학연구회'(약칭 인사연), 1988년 부산·경남지역 진보적 학자들의 모임인 '지역사회연구회'(약칭 지사연), '부산대학교 시간강사협의회' 등이 창립되어 학내외 이슈에 대한 진보적 관점의 개입과 진보적 학술연구 및 토론을 수행해 나갔다.

A1 [사건명] **부산대·수산대교수 교권수호투쟁**

A2 [사건 일시] 1971.08.23~31

A3 [사건 배경] 제3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반민주적 개헌과 선거를 통하여 3선째의 임기를 맞이하는 1971년이 되면서, 전국 각지의 대학가는 교련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 문제도 있고 하여 학생데모가 그칠 새 없이 일어났다. 그러는 가운데 8월에 들어서 서울대 교수들을 선두로 전국 각 대학에서 대학의 자유와 교권을 확보하자는 교수들의 '대학자주화 선언' 운동도 잇달아 일어났다.

A4 [전개 과정]

1971.08.23 부산대 교수협의회, 대학자율성을 요구하는 건의문

1971.08.27 교권수호 투쟁선언이 본격화

1971.08.28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도영주), 임시총회를 갖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수처우 개선 등 5개항의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

1971.08.31 부산 수산대학교 교수협의회, 대학자주성의 제도화와 교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8개 항목의 건의안을 문교당국에 제출

A5 [사건 내용] 1971년 8월 18일 서울대 문리대 교수들의 '대학자주화 선언'을 시발로, 8월 23

일에는 부산대 교수협의회도 대학자율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게 된다.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3일 ▲교수연구수당의 인상 ▲기성회비를 교수연구 비로 조성할 것 ▲대학운영관리의 자율성 보장 등 3개 건의안을 채택, 총장과 문교당국에 건의키로 결의했다. 이날 하오 2시 교수협의회 이사 16명과 회장단 등 19명의 교수들이 참석한 교수협의회 이사회는 서울대학교 각 단과대학 교수들의 결의를 검토, 이를 지지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지난 7월 동 교수협의회가 건의한 바 있는 연구수당 인상 등의 처우개선방안을 재확인했다. 한편 8월 27일에는 교권수호 투쟁선언이 본격화 된다. 부산 수산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김장량 교수 등 교수 19명은 25일 하오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강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학장이 교수(전임강사)를 파면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교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 교권확립과 학원의 자유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8월 28일 부산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도영주)는 27일 하오 3시30분 동교 도서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 및 교수처우 개선 등 5개항의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8월 31일에는 부산 수산대학교 교수협의회가 대학자주성의 제도화와 교육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8개 항목의 건의안을 문교당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A6 [관계 인물] 김장량(수산대학 교수협의회장), 도영주(부산대 교수협의회장)

A7 [관계 단체] 부산대 교수협의회, 수산대 교수협의회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7. 인권운동

<개요>

본 보고서에 수록된 부산·경남지역 민주화운동의 사례 가운데 인권운동은 7건으로서 양적으로는 노동운동과 청년학생부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비중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독재정권 치하에서는 인권유린이 일상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모든 민주화운동이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본 보고서가 칭하는 '인권운동'은 국가권력이 아닌 국가폭력에 의한 인명살상과 그에 준하는 행위, 피혐의자 스스로 적극 부인하는 간첩단 사건이나 그에 준하는 조직사건, 비전향 장기수 복역사건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산·경남지역 인권운동은 대부분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부산·경남 일원에서 일어난 보도연맹원 및 지리산 산간마을 주민학살사건과 이를 1960년 4월항쟁 후 공개적으로 문제화시킨 유족들에 대한 탄압 및 투옥사건들로 구성된다. <마산피학살자유족회 사건>에서부터 밀양, 동래, 창원 등의 피학살자유족들이 탄압받은 사건과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1975년의 <부산대재일교포간첩단 사건(일명 김오자 사건)>과 1981년의 <부림사건> 등 1970~80년대의 극단적 독재권력들이 정권안보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삼은 간첩사건 또는 대규모 조직사건들이 있다.

A1 [사건명] **마산피학살자유족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0.07.12~1961.05.16

A3 [사건 배경]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양민학살사건이 벌어졌는데 6.25를 전후하여 마산지역에서 양민들이 좌익 등의 혐의로 부당하게 대량 학살된 것이 배경임.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마산지구양민피학살자유족회에 가입하여 회장으로 활약하던 한기범이 1960년 7월 12일 마산상공회의소회의실에서 마산유족회결성대회를 개최하고 처형자의 호적정리, 처형일시 및 장소파악, 합동묘 설치 및 위령비 건립, 처형관련 군경의 색출과 처단 등을 주장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전개함. 같은 해 8월 27일 마산역 앞에서 마산지구합동위령제 거행하면서 추도사 낭독. 같은 해 9월 초순 노현섭 등과 함께 6.25 당시 마산지구주둔군경의 행방을 조사한 후 집단 고발한 사건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됨.

A6 [관계 인물] 한범석, 노현섭

A7 [관계 단체]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피학살자전국유족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밀양피학살자장의위원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0.07.15~1961.05.16

A3 [사건 배경] 전국적으로 6.25를 전후하여 진행된 많은 형태의 학살사건이 있었는데 밀양 지역에서 양민들이 좌익 등의 혐의로 부당하게 대량 학살된 것이 배경임.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60년 5월 하순 김봉철이 밀양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7월 중순 경남밀양지구피학살자장의위원회를 조직하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7월 19일 다수의 유골을 발굴하여 유족들과 합동위령제를 거행한 후 처형관련자 엄중처벌, 유족에게 국가 보상금 지급 요구, 합동위령제와 위령비건립에 당국의 협조요청, 사망자 명단과 집행일시와 장소를 명시, 호정정리 등을 주장.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됨.

A6 [관계 인물] 김봉철, 도경섭, 최영훈

A7 [관계 단체]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피학살자전국유족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0.08.00~1961.05.16

A3 [사건 배경]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양민학살사건이 벌어졌는데 6.25를 전후하여 영남 각 지역에서 양민들이 좌익 등의 혐의로 부당하게 대량 학살된 것이 배경임.

A4 [전개 과정]

1960.06.16 경북을 포괄하는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결성

1960.08.28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결성

1960.10.20 경상남북도의 시군 유족회 대표 50여 명이 모여 '전국유족회'를 창립 합동묘역을 조성, 지역별로 합동위령제 지냄.

1960.05.23 제4대 국회는 제19차 본회의에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반, 경북반, 전남반으로 나누어 조사에 착수

1960.05.31 1960년 5월 31일부터 11일 동안 현장을 조사한 후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포함한 <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를 제출

1961.05.16 5 · 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진상규명은 좌절

A5 [사건 내용] 6.25를 전후하여 대량 학살된 경남과 경북 각 지역 양민들의 유족들이 1960년 4·19항쟁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서로 연대하여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학살자 처단 등을 요구하며 유족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족회가 학살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 유족에 대한 감시 해제, 보상금지급 등을 주장하며 활동을

전개하다가 5.16군사쿠데타 이후 오히려 유족들이 구속, 처벌되는 어처구니없는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의 시말이다. 전국의 유족들은 경남의 동래, 진영, 마산, 창원, 김해, 거창, 밀양, 함양, 경북의 문경, 경산, 경주, 대구 등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를 결성하게 되었고, 1960년 6월 16일에는 경북을 포괄하는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8월 28일에는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서울 종로의 전 자유당 회의실에서 경상남북도의 시군 유족회 대표 50여 명이 모여 '전국유족회'를 창립하고 유골을 발굴하여 합동묘역을 조성, 지역별로 합동위령제도 지냈다. 한편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런 노력의 결실로 1960년 제4대 국회가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학살사건을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유족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1960년 5월 23일 제4대 국회는 제19차 본회의에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경남반, 경북반, 전남반으로 나누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특위는 1960년 5월 31일부터 11일 동안 현장을 조사한 후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포함한 <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는 경남의 거창, 거제, 함양, 동래, 산청, 울산, 충무, 구포, 마산, 산청 등지에서 3,085명, 경북의 대구시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등에서 2,200명, 전남 함평군에서 524명, 전북 순창군에서 1,028명, 제주도에서 1,878명 등 총 8,715명의 양민이 학살됐고 10,041호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피해 신고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하여 4대국회는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을 특위에 출석시켜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 이를 행정부에 이관하여 장시일에 걸쳐 정확하고 상세한 실정을 조사토록 결의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진상규명은 좌절되고 만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혁명공약을 내세운 5.16 쿠데타 정권은 극우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유족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북측을 이롭게 하고 좌익용공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8개 유족회 간부 27명에 대해 사형, 무기 등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수반국가행위죄'를 적용하여 사형 1명, 징역 15~5년 12명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박정희 쿠데타정권은 유족들을 검거하면서 유골발굴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명부, 유족회원 가입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 상자 등 학살 진상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을 남김없이 압수, 폐기하여(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 이후의 학살 진상조사를 원천 봉쇄하여버렸다. 또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사르거나 바다에 내다버리고 비석을 뽑아 부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민간인학살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가 되어버렸고, 1987년 이후까지 진실이 은폐된 채 강요된 침묵의 세월이

계속되어 왔다.

A6 [관계 인물] 권중락, 이원식, 이삼근, 이용오, 이복녕, 김현구, 이효철, 노현섭, 탁복수, 문대형, 하은수, 이병기, 오음전

A7 [관계 단체]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항도일보, "보도연맹 학살" 시리즈 ,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0.08.00~1961.05.16

A3 [사건 배경] 6.25를 전후하여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형태의 많은 학살사건이 있었는데, 동래지역에서 양민들이 좌익 등의 혐의로 부당하게 대량 학살된 것이 배경임.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송철순, 한원석, 김세룡, 추월량 등이 1960년 8월 부산시 동래구 우동 소재 김여근 집에서 회동하여 사망자의 사망일시 장소 규명, 유골 발굴, 사망자의 호적 정리, 합동위령비 건립, 합동위령제실시, 처형 관련 군경의 색출과 처단 등을 목적으로 동래유족회를 조직. 9월 5일 동래장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유골 발굴과 이장, 위령제 등을 거행. 상기 인물들이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된 사건임.

A6 [관계 인물] 송철순, 한원석, 김세룡, 추월량

A7 [관계 단체]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족자주평화통일경남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동래협의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창원피학살자유족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0.08.15~1961.05.16

A3 [사건 배경] 전국적으로 많은 형태의 양민학살사건이 있었는데 6.25를 전후하여 창원 지역에서 양민들이 좌익 등의 혐의로 부당하게 대량 학살된 것이 배경임.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60년 8월 중순 김봉조가 창원지구피학살자유족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취임한 후 창원군 창원면 면사무소회의실에서 유족회결성대회를 개최한 후 사망자의 사망일시 장소 규명, 사망자의 호적 정리, 유족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처형관

련 군경의 색출과 처단 등을 결의. 1960년 8월 28일 부산에서 개최된 경남유족회결성대회에 참석. 1960년 10월 20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유족회결성대회에 경남 각 지구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됨.

A6 [관계 인물] 김봉조

A7 [관계 단체]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 피학살자전국유족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 제4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부산대재일교포간첩단 사건(일명 김오자 사건)**

A2 [사건 일시] 1975.10.10

A3 [사건 배경]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재일교포 사회에서 조총련의 세력 확산을 견제하기 위해 다수의 재일교포 대학생들을 고국으로 불러들여 유학을 시키며 체제우위 선전을 시도하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그 전해인 '74년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하고 반 유신 데모가 비등한 시점에서 '절묘하게' 터진 '간첩단 사건'이었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1975년 10월 10일 부산대에서 '반정부 유인물 배포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1975년 11월 22일 소위 '서울의대 재일교포간첩단 사건'과 함께 조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이 사건으로 김오자(재일교포 유학생, 사학과 3)는 무기징역, 이원이(경제학과 4)는 징역 5년, 김정미(철학과 3)는 징역 3년 6개월, 김준홍(정외과 3), 노승일(정외과 3), 박준건(철학과 3) 등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2년여 동안 수감되었던 노승일의 증언에 따르면, 1975년 봄에 부산대 법정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났는데, 이때 노승일이 선두에서 주도하는 광경을 보고 김오자가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노승일의 관심은 거꾸로 김오자를 통하여 나라 바깥의 소식,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한국에 관한 소식을 듣고자 한데 있었고, 그 때문에 김오자와 계속 만나게 되었다. 특히 엄혹한 언론통제 아래에 놓여 있던 당시로서는 일본의 유명 잡지인 『세계』지에 시리즈로 실리고 있었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을 번역하여 돌려보는 것이 사회적 지식의 허기를 채워나갈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975년 가을 부산대학내 이념 써클인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모 토론회에서 최태열, 안승운 등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안승운, 최태열, 윤대원, 노승일 등은 '씨알의 모임' 이라는 자생적 소조직을 만들게 되고 모임을 상징하는 뱃지도 달고 다녔다. 소위 '김오자 전단 살포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즉 1975년 10월 10일 재일동포 '김오자'가 전단을 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이 곧 바로 추적당한 결과 노승일 등이 체포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11월 22일에야 비로소 언론에 발표되는데, 소위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으로 명명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총 24명이 연루된 것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는 한신대의 나도연, 전병생 전도사, 대학원생 김명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원이 같은 경우는 전혀 별개의 단독사건을 같이 묶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에 재학 중 영문도 모르고 조직사건에 연루되어 6년간 감옥생활을 하다, 1980년 석방되어 현재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김종태(현 동경 거주, 사업)는 당시 사건의 성격을 "일본서 불러들인 재일교포 2세들의 사상의 자유스러운 특징을 감안하지 낳고 간첩으로 몰아세운 사건으로, 다수의 재일교포들을 결과적으로 분열시키고, 고국에 대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노승일은 10월 18일 중정 대연동 분실로 연행되어 박명근, 박준건, 김정미, 김준흥, 하일민 등과 함께 수영비행장에서 특별기로 서울로 압송된다. 18일 저녁부터 중앙정보부 5국의 주도아래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11월 1일에 서울구치소에 미결감으로 수감되었고, 하일민, 박명근 등은 석방되었다. 결국 노승일은 소위 ’김오자 간첩’ 방조혐의로 구속되어 1심에서 7년 실형을 구형받고 실형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집안에서의 백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도 기각되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리하여 2년여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1977년 11월 3일 출감하게 되나, 같이 구속된 박준건, 김준홍은 상고 포기로 20여일 먼저 출소하였으며, 김정미는 3년 6월을 선고받아서 그대로 다 살고 나왔다.

A6 [관계 인물] 김오자, 노승일, 안승운, 최태열, 윤대원, 박명근, 박준건, 김정미, 김준흥, 하일민, 나도연, 전병생, 김명수, 이원이 등.

A7 [관계 단체] 부산대 이념 써클 ‘아카데미’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pp.302-303, 395

A9 [관련 사건] 서울의대 재일교포간첩단 사건

A1 [사건명] **부림사건**

A2 [사건 일시] 1981.09.07~1982.04.00

A3 [사건 배경] 부산의 학림이라 불리는 부림사건은 용공조작사건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광주민중항쟁의 충격 속에서 부산의 민주세력들이 새로운 운동조건에서 새로운 운동목표를 설정하면서 운동 역량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1979년 부마민주항쟁은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고통을 받던 부산시민들이 느끼던 정치적 반감 속에서 당시 부산지역의 대학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과학계열의 서클멤버들이 주축이었던 민주운동그룹의 활약으로 촉발된 대사건이었으며, 부마민주항쟁으로 구속된 운동가들이 10.26대통령피격사건 이후 속속 풀려나오면서 부산지역 민주운동의 주도그룹으로 등장하려던 차에 부림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이 사

건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은 사람들은 크게 1970년대 후반부터 서울에서 내려와 부산지역의 민주화운동을 후원하던 그룹과 부산지역 대학가 출신의 자생적 민주화운동가 그룹으로 대별된다. 이 두 그룹은 부림사건을 겪으면서 일부는 환경운동이나 노동자후원단체 등 공개적 운동기구의 간판을 달고 실제로는 민주화운동의 부흥을 꾀하였고, 다른 일부는 노동현장에 투신하여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변혁운동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제 다양한 형태의 민주화운동에서 중심축으로 성장하게 된다.

A4 [전개 과정]

1981.09.07 부림사건 발표 당시 이상록, 고호석, 송세경, 설동일, 송병곤, 노재열, 김희욱, 이상경 등 8명이 1차로 구속됨.

1981.10.15 2차로 김재규, 최준영, 주정민, 이진걸, 장상훈, 전중근, 박욱영, 윤연희 등 8명이 구속

1982.04.06 3차로는 당시 도피중이던 이호철, 설경혜, 정귀순 등 3명이 구속되고, 이미 다른 사건(학내 시위)으로 구속되어 있던 김진모, 최병철, 유장현과 군탈영한 김영 등도 부림사건에 병합 연루되었다(총 23명 연루, 구속).

1982.06.22 부림사건 공판에서 이호철에게 10년 구형

1982.06.26 부림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고 징역 6년, 집행유예 결정

1982.10.27 대법원, 부림사건 상고기각 원심확정

A5 [사건 내용] 부마민중항쟁을 거치며 부산에서 형성되던 대중적인 운동의 싹을 잘라버리고 지역의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서로 일면식조차 없던 사람들이 같은 조직원이라고 묶어서 만들어진 조작사건이었다. 연루자의 구속과 입건이 3~4차례로 나누어져 이루어진 것은 수사를 진행해 가면서 사건을 하나하나 짜맞추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1982년에 있었던 6월 22일의 부림사건 공판에서 이호철에게 10년 구형을 선고하였지만 판결에서는(1982.06.26) 부림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최고 징역 6년,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으며, 1982년 10월 27일에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었다. 당시에 최고로 많은 수의 구속자를 만들어내었던 이 사건은 사실상 조직적인 체계나 형태를 갖추지도 못한 엉성하게 조작된 사건이었음을 재판과정에서 드러낸다. 이로 인해 지역의 자생적인 운동역량은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지역의 운동가 그룹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의 구속과정에서 지역적인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가협과 같은 인권운동조직도 구성되었고, 출소이후에 이들이 지역의 운동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일부는 영장없이 체포·구속돼 20~63일 동안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으며, 독서모임이 반국가단체의 찬양활동으로 조작되고 송년회가 사회불안을 야기할 집회로 규정돼 처벌됐다고 주장하며 참여정부 들어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6 [관계 인물] 이상록(2006년 작고), 고호석, 송세경, 설동일, 송병곤, 노재열, 김희욱, 이상경,

김재규, 최준영, 주정민, 이진걸, 장상훈, 전중근, 박욱영, 윤연희, 이호철, 설경혜, 정귀순, 김영(소설가 김하기), 유장현, 최병철, 김진모

A7 [관계 단체] 전민노련, 전민학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A8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pp433~34.

A9 [관련 사건] 무림, 학림사건

8. 통일운동

<개요>

미군정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단절되었던 민족통일을 위한 운동은 이승만정권이 퇴진한 이후 자생성을 획득하고 조직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김상찬 등이 주도한 부산 및 경남의 '민주민족청년동맹'과 '민족자주통일협의회' 등이 추진한 통일운동사업은 정치영역의 혁신계 정당활동과 더불어 활성화되어 나갔다.

그러나 통일운동을 위한 조직건설과 새로운 사업의 틀을 마련하려는 그와 같은 시도들은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로 일거에 좌절을 겪게 된다. '반공'이라는 네거티브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삼은 반통일적 국가권력의 폭력적인 탄압과 국가보안법 등의 제도적 억압장치들은 민족통일운동 세력에게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군사파시즘적인 국가권력은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보다 오히려 더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를 반공주의 이데올로기로 차단해왔다.

30년 가까운 세월동안 차단되어온 민간의 통일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부터였다. 6월항쟁을 통해 성장한 대중적인 학생운동은 학원민주화와 사회민주화운동의 성과를 통일운동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고, 이를 1988년 6월 10일의 <남북청년학생회담 개최>로써 실천하려 하면서 학생운동이 통일운동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다. 노태우 정부의 불허와 방해로 이 남북청년학생회담은 성사되지 못하였으나 1989년에는 평양에서 개최된 '평양축전'에 한국외대의 임수경이 불법이기는 하나 전대협 대표로 참가하게 되면서 전대협은 국가권력의 집중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학생운동은 그 해 8월 12~15일의 범민족대회 등을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며 통일에 대한 시민과 학생들로부터의 대중적 지지를 얻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

A1 [사건명] **경상남도민족자주통일협의회 사건**

A2 [사건 일시] 1961.02.00~05.16

A3 [사건 배경] 1960년 이후 지역의 자생적인 운동그룹에서는 작은 규모의 통일관련 모임과 조직결성을 위한 시도들이 진행된다.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은 그러나 1961년의 군사쿠데타로 좌절되게 되는데, 그 이전의 초보적인 조직결성의 시도들이 다양한 경로와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A4 [전개 과정]

A5 [사건 내용] 유혁이 1961년 2월 민자통 결성 이후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민족통일운동을 벌인 것에 대하여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구속된 사건

A6 [관계 인물] 유혁

A7 [관계 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A8 [관계 자료]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한국혁명재판사』제4집, 1962

A9 [관련 사건]

A1 [사건명] **6 · 10 남북청년학생회담개최 투쟁**

A2 [사건 일시] 1988.05.01~06.10

A3 [사건 배경] 극단적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전두환 · 노태우의 신군부정권은 19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최소한이나마 민주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급격하게 성장한 학생운동은 독재타도와 호헌철폐를 넘어선 새로운 운동의 과제를 '통일운동'으로 설정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대중적 형태의 통일운동이 시작되었다.

A4 [전개 과정]

1988.05.11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부산시민 대토론회' 부산대에서 개최, 이 대회에는 부총협에서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남북한 청년학생 상호교류성사 및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특별위원회'(조통특위)를 발족

1988.05.14 고려대에서 6 · 10 남북청년학생회담 실무회담 성사 및 공동올림픽 개최를 위한 범시민 학생결의대회 개최, 부산학생들 포함 1만 5천 여명 참가

1988.05.15 서울대생 조성만 투신자살

1988.05.26 부산대 총학생회장 김성근을 포함한 8명의 간부가 광주학살진상규명과 6 · 10 남북청년학생 체육대회 실무회담 성사 결의를 위한 단식농성

1988.05.29 동아대에서 6 · 10 학생교류 성사를 위한 민족동아결의대회를 가지고, 동아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남북청년학생교류쟁취특별위원회'발족(위원장, 김종보)

1988.05.30 전대협 산하의 '조통특위'가 주도한 '6 · 10 남북청년학생체육대회실무회담'에는 부산대 학생 150여명을 포함한 2만 여명의 학생들이 서울로 집결하여 가두투쟁 벌임

1988.05.30 부산대에서 6 · 10 항쟁계승 및 6 · 10회담 성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1988.06.04 치안본부, 6 · 10남북학생회담을 불법집회로 간주, 추진학생 35명 수배

1988.06.08 야3당 총재, 6 · 10학생회담개최 연기 촉구

1988.06.08 6 · 10남북학생회담출정식, 전국 78개 대학에서 2만 여명 시위, 정부의 강력저지로 무산

A5 [사건 내용] 1961년 초에 솟아오르던 통일운동의 열기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반공이데올로기로 단절되어 왔으나,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최소 민주주의라는 조건을 확보하면서 통일운동은 급속히 성장한 대중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자 학생운동의 중심세력은 스스로의 운동의 방향을 '통일운동'으로 설정하고 88올림

픽과 연계한 '공동올림픽 개최' 및 판문점 '6·10남북청년학생회담' 개최를 공개적으로 요구·선언하면서,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갔다.

A6 [관계 인물] 조현래, 김성근, 김종보

A7 [관계 단체] 부총협, 전대협, 조통특위

A8 [관계 자료]

A9 [관련 사건] 평양축전, 범민족대회, 8·15회담

A1 [사건명] **8·15 민족축전 기념행사**

A2 [사건 일시] 1989.08.12~08.15

A3 [사건 배경] 1960년 4월항쟁 이후 자생적으로 진행되던 통일운동은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등의 군사쿠데타 정권 아래서 반공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적 지배로 좌절되고 억눌려왔다. 그러나 1987년 6월의 시민항쟁은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었고, 학생운동은 통일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한 와중에 학생운동진영은 1988년의 남북청년학생회담 개최를 위한 투쟁을 시작으로 북한바로알기운동 등을 펼쳤고, 1989년에는 8·15기념식을 통일운동의 출범식으로 선포하며 통일운동을 고조시켜 나갔다. 부산·경남지역 대부분의 대학가와 통일운동단체들도 물론 여기에 동참하였다.

A4 [전개 과정]

1989.05.31 반미자주화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협의회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경성대에서 부산대학생 300여명, 부산·울산지역대학생 800명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개최

1989.06.30 한국외국어대 임수경 학생 전대협의 평양축전대표자격으로 평양에 도착

1989.07.07 전대협, 건국대서 남북학생공동선언문 기습발표

1989.08.12 울산지역 대학에서 길놀이, 해방 굿 등의 통일 문화제, 조국분단과 핵이라는 주제의 강연회 개최

1989.08.13 통일 염원 연합 예배

1989.08.14 부산·경남지역의 대학가 통일관련 집회개최, 울산대 총학생회, 교직원노조와 '반통일 세력과 통일세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

1989.08.15 부산·울산지역의 각 대학가 기념식개최, 울산대 체육대회. 태화강 둔치에서 민족자주통일의 날 선포식 후 태극기를 흔들며 평화대행진

A5 [사건 내용] 대중적인 학생운동이 '통일운동'을 학생운동의 주요방향으로 설정하고, 민족해방(NL)계열의 학생운동은 1988년도의 남북청년학생회담을 기점으로 남북 학생간 직접교류를 주장하게 되었다. 또한 평양축전에 전대협 대표로 참가한 임수경 학

생이 8·15를 기념해서 판문점으로 귀환하였다. 이로부터 학생운동은 8·15를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을 서울, 광주, 울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개하게 되었다(8월 12일~15일). 이에 전대협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되면서 오히려 학생운동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이 통일운동에 선도적이라는 면모를 부각시킨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였다. 부산·경남지역 대부분의 대학가와 통일운동진영도 여기에 동참하였음을 물론이다. 노동운동의 중심지인 울산지역도 이 사건으로부터 통일운동이 점화되었다.

A6 [관계 인물] 임수경

A7 [관계 단체] 부산·울산지역총학생회연합, 울산사회선교실천협의회, 울산문화운동연합

A8 [관계 자료] 『울산대신문』 제158호

A9 [관련 사건] 1988년 남북청년학생회담, 범민족대회, 평양축전

Ⅱ. 단체 항목 기초조사

1. 연합운동

O1 [단체명]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O2 [약칭] 부민련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O5 [존속 기간] 1988.12.03~1991.12.00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대의원총회(10개 단체)
의장단 고문단
상임집행위 특별위
사무처
조직국 정책국 선전국 총무국

O9 [강령] 본 연합은 부산지역 제 부분운동, 제 사회단체의 연대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라의 자주화, 민주화, 통일을 성취하고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중적 삶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O10 [결성과정] 부산민족민주연합이 오후 3시, 동오빌딩 4층에서 결성. 출범 당시 부민련에는 부산민주시민협의회,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자주통일 부산회의, 영남지역 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부산지구 기독청년협의회, 원불교 사회개벽 부산청년단, 진보정치연합 부산지부, 부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 등 10개 단체가 참가하여 88.12.03 부산민족민주연합 결성

O11 [주요 활동]

1989.02.26 부민련 및 부총협 주최로 대각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태우 정권 규탄 국민대회'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무산

1989.04.00 이경현양 살인진상보고 및 폭력경찰 규탄 시민대회

1989.05.00 이철규 열사 살인고문 진상규명 및 광주민중항쟁계승 제 2차 국민대회와 가두시위

1989.06.00 6월 항쟁 2주년 기념 시국강연회

1989.09.00 전교조 탄압저지 및 참교육실현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

1989.10.00 노동악법, 전노협 건설을 위한 영남지역 등반대회

1989.11.00 광주, 5공주범 구속과 동의대 진상규명 및 민중생존권, 전교조 합법성 쟁취 시민대회

1990.02.22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저지 및 민중기본권 쟁취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를 결성. 김정한, 송기인 신부 등 6명을 고문으로, 임정남(부민련 의장) 하일민(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회장) 박순보(전교조 부산지부장) 이성도(부산노련 의장) 등 각계 대표 8명 공동대표

1990.02.25 시민운동본부가 국민연합부산본부로 개명. 시민운동본부는 부산대 신축 학생회관에서 노동자, 학생,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부산시민대회를 개최 -> 시민운동본부는 '민자당 일당독재 음모 분쇄 및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 부산본부'로 개명. 출범당시에는 부민련 이외에 부산노련, 전교조 부산지부, 부울총협,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부산여성회, 기독교 부산인권위원회 등이 참가단체로 참여하였고,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위한 의사회, 민중당, 평민연 등이 참관단체로 참여

1991.07.08 1991년 서울범민족대회 추진과 관련하여 남북 해외동포들이 7월 20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기로 하였다. 이 회담에 남측 대표의 한사람으로 배다지 부민련 상임의장을 파견하기로 하자 부민련 상임의장 배다지 구속

1991.10.26 수입개방반대, 수입상품배격 결의대회. 부민련, 부울총협, 전교조 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7개 재야단체소속 회원 3 백여 명 부산역광장에서 수입개방반대 수입상품배격 결의대회

O12 [주요 활동가] 배다지, 김재규

O13 [관계 단체]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부산민주청년회,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부산노동자연합, 부산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부산노동단체협의회, 부산울산총학생회협의회, 부산민족문화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 부산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부산기독교사회운동연합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부산민주시민협의회**

O2 [약칭] 부민협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5.05.02~1988.00.00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O8 [조직체계]

O9 [강령] 결성선언문에서 “지금 핵 공포와 외세의 침입이라는 어려운 조건하에서 남북의 평화통일과 자유민주국가의 건설이라는 커다란 과업을 성취해야 될 역사의 시점에 서 있음을 보면서, 그러나 사회 전반이 시민들의 총체적인 의사와는 무관한 힘의 독단으로 진행되어 그 그늘에서 시민의 자유의지가 시들고 근로자의 신성한 권익이 무참히 희생되어 이런 현실에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끼는 시민들이 뜻을 모아”출범

O10 [결성 과정] 부림사건을 통해 지역에서의 활동가들을 보위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조직이 없었기에 지역의 운동역량 전체가 초토화되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구속자들이 출소하면서 또,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재야운동가 그룹이 형성되면서부터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기초를 마련하는데 아주 많은 기여를 하였음

O11 [주요 활동]

1985.12.06 ‘민주헌법 쟁취운동의 의의와 방향’이라는 강연회, 경찰제지로 무산.

1986.03.21 부민협을 비롯한 부산의 인권단체들이 동양고무의 ‘노동환경개선, 임금인상’등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해직되고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부산진구 노동자 생존권확보투쟁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항의 및 성명서 배포

O12 [주요 활동가] 송기인, 박우순, 서상환, 유기선, 손덕만, 윤성재, 백금숙, 심응섭, 김영곤, 김광일, 박순금, 박광선, 오수영, 문재인, 김정한, 우창웅, 허봉, 노무현, 최성묵, 최기준, 조돈만, 이흥록, 김기수, 염영일, 김세창, 윤정규, 이원걸, 전병호, 배환균, 김희로

O13 [관계 단체] 노동자생존권확보투쟁공동대책위원회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O2 [약칭]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민주공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8.28~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총회
|
자문위원회 — 이사회(이사장/부이사장) — 감사
특별사업위원회/기회위원회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상임이사회
민주공원수탁사업단 ┴ 사무처
|

민주공원관장
|
경영기획팀/교육기획팀/관리운영팀/시민사업팀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79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항쟁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부마항쟁 관련자, 부산지역의 주요 사회운동단체와 종교계, 학계 인사 등이 모여 1989년 7월 25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발기인대회를 열고, 8월 28일에는 부산일보 대강당에서 그 창립대회를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들어와 부마항쟁 뿐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발전에 결정적 기여를 해 온 1960년의 4·19 민주혁명, 1979년의 부마민주항쟁, 1987년의 유월항쟁 모두를 기념하고, 그 항쟁들마다 보여 준 부산 시민의 숭고한 민주 희생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확대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O11 [주요 활동] 부산광역시 당국과 공동으로 <민주공원> 및 그 내부의 <부산민주항쟁기념관>을 건립하고 <민주주의사회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들을 기념사업회 산하에 두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민주주의의 이론과 역사 및 운동과 제도 등을 연구하고 민주화의 산실인 부산의 역사적 위상을 드높이는 일에도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19 기념사업

＊ 4·19 희생자위령탑 참배, 문화제, 전시회, 학술심포지움 개최 (매년 4월)

(2) 6월민주항쟁 기념사업

* 부산지역 6월항쟁 관련 자료 출판 (일지, 자료집, 사진집, 문학작품집, 연구논문집 등)

* 6월항쟁 기념식 및 학술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개최 (매년 6월)

(3)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 부마민주항쟁 10주년~25주년 기념행사 (기념식, 학술제, 문화제, 전시회, 시민 대동굿의 형태로 매년 10월 개최)

*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 발간

(4)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 및 기타

* 5·18 광주민중항쟁 기념사업 (기념식, 강연회, 전시회, 공연, 성지순례)

* 제주 4·3항쟁 기념사업 (진상규명 촉구, 기념서화전, 초청공연, 현장답사)

*역사 기행 (항쟁의 현장을 찾아서 - 제주에서 백두까지)

*해외 역사 기행 (민족문제 - 베트남/중국/이스라엘/독일/영국 등)

*부산인권문화제 공동 개최

*부산민주시민상 시상 (2006년 12월 현재까지 13회 시상)

*민주화운동 관련 희상자, 피해자, 유공자 생활보호 및 자녀 장학사업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 개최

(5) 부산민주공원 조성 및 운영 수탁 사업

* 부산민주공원 조성 범시민추진위원회 구성 (1996년 7월 19일)

* 부산민주공원 준공 개관식 (1999년 10월 16일)

* 민주공원 개관 기념 행사 (1999년 10월 15일 ~ 11월 7일)

* 민주공원 수탁 운영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5월 15일까지)

* 민주공원 관리·운영 통합 수탁 (2002년 5월 16일부터 2006년 12월 현재까지)

O12 [주요 활동가] 최성묵(작고), 송기인, 이규정, 김재규, 설동일, 차성환, 김종세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10주년기념자료집』, 1989

(사)부산민주항재기념사업회 http://www.ohminju.or.kr/Main.asp

2. 청년학생운동

O1 [단체명] **민주민족청년동맹**

O2 [약칭] 민민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60.06.12~1961.05.16.

O6 [주요 활동지역] 부산경남 지역 일원, 나중에 중앙으로 조직 확대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부산에서 결성된 민주민족청년동맹이 중앙맹부의 역할을 하다가 중앙맹부를 서울로 옮기면서 부산에 있었던 중앙맹부는 나중에 경남맹부로 조정. 민민청 경남맹부는 부산진지부, 동래지부, 영도지부, 마산지부를 거느림. 맹원의 수는 부산에만 1천여 명에 달함.

O9 [강령] <基本綱領> ① 우리는 未來社會를 擔當할 그 民主役軍으로서의 正大한 人格과 前進的인 科學力의 養成에 努力한다. ② 우리는 祖國 오늘의 歷史過程이 特權保守가 아닌 또 觀念論的 社會主義革命이 아닌 庶民性資本民主主義革命임을 이해하며 그 面에서의 民族父兄母妹들의 政治活動을 勸善懲惡하기에 批判과 忠言과 時間的인 協力等으로써 한다. ③ 우리는 靑年의 經濟 統治 및 社會上에 있어서의 利益의 獲得과 그 保障을 期하며 特히 勞力靑年 및 女性靑年의 그 利益獲得과 保障에 置重한다. ④ 우리는 世界民主方向의 靑年運動과 提携한다.

<戰略綱領> ① 민주인간으로서의 민주 민족인 으로서의 심상과 그 사회적 생활기능의 배양. ② 청년 자주적이며 통일적인 청년운동의 전개 ③ 민주민족통일 정치조직방향의 지지와 동시에 청년의 파당적 정치도구화 경향의 반대 ④ 청년의 사회적 및 정치적 깡패화 경향의 철저단속 및 선도 ⑤ 청년선동 구성원의 만29세선 연령의 제한 ⑥ 고교까지의 국가경비에 의한 의무교육제 실시 및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개인부담경비의 철저경감 등에 의한 중퇴학 방지 ⑦ 청소년의 정신적 및 육체적 발육에 유해한 사회빈궁과 그 노동 지옥적 조건의 제거 ⑧ 만18세 이상 여남의 선거권 및 만23세 이상 여남의 피선거권 향유 ⑨ 일절 봉건제적 청년처우의 개정 ⑩ 신효도 신부부애 등 신흥적 인간윤리의 건설 ⑪ 『반둥』체제지역들의 청년운동과 제휴한 세계민주방향 청년운동에의 일익성 견지 ⑫ 우리는 의협과 평화와 시와 사랑을 좋아하는 우리 『민주화랑』의 푸른 기개를 세계만방에 과시한다.

O10 [결성 과정]

1960.03.00 3 · 4월 민주주의 항쟁

1960.05.00 민주항쟁이후, 민족문화협회를 주도하였던 이종률이 1960년 5월 초순 새

로운 정치투쟁을 전개하고와 그 정치조직을 뒷받침해 나갈 청년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칭 민주주의민족운동청년협의회의 결성을 제기

1960.06.12 부산상공회의소 강당에서 결성. 統委議長 김규원(金圭元), 執委議長 박상우(朴相雨), 조문기(趙文紀) 등이 선출.

O11 [주요 활동] 1960년 3·4월민족항쟁 이후 새로운 정치투쟁의 전개와 그 정치조직을 뒷받침해 나갈 청년조직으로서 역할을 함을 기본으로 하였지만, 1961년 2월에 출범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조직결성의 핵심적 역할을 함. 9월 30일 항일투사 백민 황상규 추모제 개최를 통한 반제자주의식의 고취. 10월 30일 동광초등학교에서 '각 분야에서 보는 민족통일의 긴절성과 그 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회 개최

O12 [주요활동가] 이종률, 하상연, 김상찬, 배다지, 조현종, 김규원, 박상우, 조문기, 박창증, 손의현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부경-청학7] <민주민족청년동맹 강령과 결의>(1960.6.12 김상찬 등 민민청 발기인단 작성)

O1 [단체명] **부산민주청년회**

O2 [약칭] 부민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8.05.29~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8.05.29 오후 3시 부산대학교 효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가지고 결성.

O11 [주요 활동] 분과활동의 목표달성과 청년학교의 활성화. 청년학교는 부민청의 거의 유일한 대중교육공간임. 또한 부민청 신입회원 유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단위로서 조직확대공간으로 활용. 교육사업: 신입회원교육, 분과/반단위교육, 중간간부교육, 청년학교 등 대중교육. 기타 투쟁사업.

O12 [주요 활동가] 최종태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사랑 공화국(도깨비 집)**

O2 [약칭] 사랑 공화국(내부 구성원들이 자칭한 조직이름) / 도깨비 집(조직 외부의 일반 학생들이 이 조직에 대하여 호기심을 실어서 부른 이름)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78.03.00~1981.09.00

O6 [주요 활동지역] 부산대학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부산대 법학과 이상록(74학번)이 주도한 부산대 학내 지하 학생운동써클로서, 1,2,3,4학년의 학년별 체계를 갖춘 지속적인 학생운동 '재생산 체제' 확립을 목표로 1978년 봄부터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1978년 가을에 2학년(77학번)과 1학년(78학번)으로 구성된 2개의 독서회 그룹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고, 12월부터는 서울농대를 휴학하고 귀향중이던 설동일이 가세하여 학습세미나를 지도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9년 2월에는 양서조합을 통해 알게 된 영문학과 고호석(76학번)이 이 조직에 결합하여 힘을 합치고, 따라서 1979년 봄부터는 1학년(79학번 정귀순, 손동준, 이정애, 최민성, 김화석, 김동현, 부경란 등))-2학년(78학번 김진모, 정수철, 김영, 최병철, 남경희, 유장현, 김임선, 유동현 등)-3학년(77학번 이호철, 노재열, 송병곤, 윤연희, 주정민, 설경혜-부산교대생 등)-4학년(이상록, 고호석)의 학년별 재생산 구조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어, 1979년 여름에는 대략 50~60명의 구성원과 비교적 안정된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O11 [주요 활동] 이들 구성원의 상당부분은 당시 중부교회와 부산양서협동조합 등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상록, 고호석, 이호철, 노재열, 윤연희 등이 모두 그런 케이스이며, 이들에게 사회과학 학습 지도로 도움을 준 송세경이나 설동일과의 만남도 중부교회를 통해서였다. 또 1979년 10 · 16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된 당시 학내시위의 준비 및 촉발과정에서 이 도깨비 집의 구성원들은 부산대학 내의 공개 써클의 중심인물들과 의논하고 토론하여 널리 접촉하였다. 이 때 도깨비집의 이호철이나 노재열과 접촉한 공개기구로는 아카데미의 김종세, 성아(成我)의 안승운과 신재식, 상대 경제사학회의 정광민, 그 밖에 부산의 선구적 노동야학인 가야야학 팀, 전통예술연구회, 동문써클 동녘의 이진걸, 영목(嶺木,고호석)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학내시위의 중심세력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시위가 엄청난 규모의 부마항쟁으로 발전하게 되자 즉각 경찰과 정보당국에 체포되었다. 극적인 10 · 26의 발생으로 이들이 풀려난 뒤에도 계속 감시상태에 놓여있다가 마침내 1981~82년의 부림사건의 주요 연루세력으로 모조리 투옥됨으로써 모처럼 확립된 부산 운동권의 인적 기

반에 거덜이 나버릴 정도였다. 하지만 출옥 후 이들은 대부분 1980년대 부산운동권의 중견 혹은 중심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O12 [주요 활동가] 도깨비 집 내부 인자로는 이상록, 고호석, 이호철, 노재열, 송병곤 등이 있고, 부산대 공개써클의 정광민, 김종세, 신재식, 이진걸, 중부교회와 양서조합 쪽의 김형기, 송세경, 설동일, 조태원 등이 있었다.

O13 [관계 단체] 부산양서협동조합, 중부교회, 부산대 공개써클 성아, 아카데미, 경제사학회

O14 [관계 자료]

[부경-청학9]구술증언록(이상록, 설동일, 송세경, 이호철, 노재열 부분)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pp.324~41; pp.394~401.

O1 [단체명] **한얼**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69년 말~1972년 봄

O6 [주요 활동지역] 부산대학교(학생 써클)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박정희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3선에 나서던 무렵, 학생운동의 활성화와 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제작, 배포한 '지하신문'들의 존재를 들 수 있다. '70년 2학기부터 '71년 10월의 위수령 발동 때까지 번성했던 이 부정기 프린트 신문들은,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언론부재의 상황에서 보도전달의 기능과 아울러 대학사회내의 여론선도 기능을 발휘하면서 학생운동의 전개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시에 쏟아져 나온 신문들로서는 서울법대의 '자유의 종'('70년 10월 3일 첫호), 서울문리대의 '의단'('71년 7월 첫호),서울상대의 '활화산'('71년 9월), 이화여대의 '새얼'('71년 4월 첫호), 연세대의 '내나라', 고대의 '산지성'('71년 9월 창간), 교회청년협의회의 '광야의 소리'(' 71년 3월 27일 창간호), 서울문리대의 '전야'('71년 9월 창간), 서울대 교양과정부의 '횃불', 부산대의 '한얼' 등이 있었다. 부산대 '한얼'의 경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15년의 장기형을 선고받고 '70-'8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 김재규(당시 상대 재학)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김재규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이 박정희 정권의 철저한 탄압으로 무산되자 학생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써클을 부산대학에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뜻과 행동을 같

이하던 선후배들과 함께 회의 골격과 회칙을 만들고 명칭을 '한얼'로 결정지었다.

O11 [주요 활동] '한얼'은 1970년에 들어서면서 그 조직을 학생대중에게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회보를 발간키로 하였다. 회보의 이름 역시 같은 「한얼」로 하고, 다루는 내용은 학내문제를 포함한 사회문제들을 중심으로 제작하였는데, 학생운동의 당위성, 교련문제, 통일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한얼」회보는 부산의 여러 대학에 소문이 났다. 그 해 여름 동아일보는 각 대학의 이념써클 회보를 소개하면서 부산대 「한얼」의 기사 내용들을 특별히 다루고 그 대중적 시도를 호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한얼」을 해체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강구했다. 결국에는 지도 교수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지도교수가 김재규 등을 불러 모임의 해체를 종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학생들은 지도교수 없는 불법 써클로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회보를 한차례 더 내고 몇 차례의 세미나를 하는 걸로 해를 넘기고 말았다.

O12 [주요 활동가] 김재규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구술증언록(김재규)

3. 노동운동

O1 [단체명] **부산노동단체협의회**

O2 [약칭] 노단협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4.01~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운영위원회

의장단 자문의원

사무국

각 기획팀

(교육기획팀/대노조지원사업기획팀/행사기획팀)

O9 [강령] ① 우리는 부산지역 노동단체간의 통일성을 바탕으로 노동자투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호하기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 우리는 노동조합과 굳건히 연대하며, 노동단체의 지역적 전국적 연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생략 ④ 우리는 민족의 자주화와 조국통일,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적극 동참한다.

O10 [결성 과정]

1989.04.01 10여개의 부산지역 노동관련 단체들이 모여 결성.

O11 [주요 활동] 노동자투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노조결성 및 운영에 대한 상담, 교육, 문화활동(풍물지원지도), 소속단체회원의 소모임활동지도 등을 통해 몇 개 단체가 연대, 공동사업을 기획, 집행. 노조 및 노동단체와의 지역적, 전국적 연대 ; 부민련과 전국노운협에 참가, 사업을 진행.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 고양과 단결. 노동운동에서의 역할 ; 자주화, 민주화, 조국통일 위한 싸움에서의 승리는 노동자들의 주도적 역할을 높여나가는데서 보장.

O12 [주요 활동가] 하동삼,

O13 [관계 단체] 가톨릭노동상담소, 사랑방노동자학교, 동래노동상담소, 노동자복지연구소, 노동법률상담소, 여성노동자의 집, 일꾼도서원, 햇살도서원, 들불도서원, 일사랑도서원, 놀이패 '일터' 부산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부산택시기사연합회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부산노동자연합**

O2 [약칭] 부노련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4.16~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04.16 '부산노동자협의회'의 발전적 해체과정을 통해 선진노동자들의 조직체 구성을 위하여 1989년 4월 16일 창립.

O11 [주요 활동]

- 부노련 자체활동 ; 삼화고무투쟁, 양산부영투쟁, 금사동 부영투쟁 등
- 지역연대사업 ; 부민련, 전국노운협, 영남회의, 각종대책위에 참가
- 부노련 창립이후 선진노동자들의 조직이라는 틀이 채 갖추어지기도 전에 고무공장 폭행추방이라는 슬로건 아래 두달 가까이 삼화고무투쟁을 철저히 전개.

1989.04.30 노동자대회에는 조직적으로 많은 수의 선진 노동자들이 참가, 노동자의 사상과 의식을 고양.

1989.08.00 전교조 공동대책위에 실무 간사를 파견하면서 가두홍보와 서명운동, 각종 집회에 결합

1989.00.00 병원 쪽의 파업투쟁에는 지지방문.

1991.09.00 부노련에 의해 '현대판 노예선'이라고 불리는 원양어선에서 선상 폭력의 실태가 폭로됨(10월 14일에는 영등포산업선교회에서 선원피해대책협의회가 결성).

O12 [주요 활동가] 김진숙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부산지역 노조연합회**

O2 [약칭] 부산노련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8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양산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O [결성 과정] 1987년 6월 항쟁과 7,8월에 폭발적으로 진행된 노동자대투쟁의 열기가 1988년 들어 다양한 형태의 사회운동을 촉발시키게 된다. 산발적으로 제기되는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공동대응과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연합체를 만들어나기기 위한 필요성도 있었다.

O11 [주요 활동]

O12 [주요 활동가] 이성도, 이정호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부산지역노동조합총연합**

O2 [약칭] 부산노련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9.30~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인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21개 노조 6,909명의 조합원으로 탄생(초대의장 이성도)

O11 [주요 활동]

1989.10.08 영남권 등반대회

1989.10.14 부산노련 창립보고 및 출범대회

1989.11.03 부산노련 단병호 초청강연회

1989.11.17 부산노련 전국총회투쟁

1989.11.26 부산노련 '89민중대회 참가

1990.01.11 부산노련 제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전노협 파견대의원 87명을 선출하고 90년 상반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확정

1990.02.22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저지 및 민중기본권 쟁취 부산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다. 김정한, 송기인 신부 등 6명을 고문으로, 임정남(부민련 의장) 하일민(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회장) 박순보(전교조 부산지부장) 이성도(부산노련 의장) 등 각계 대표 8명 공동대표로 선출

1990.03.08 부산노련 소속 11개 노조 대표자와 간부 20여 명이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며 농성

1990.05.01 전노협 주최로 전국적으로 '노동운동 탄압 분쇄 및 민중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와 겸해서 열린 '세계노동절 101주년 기념대회'에서 부산노련 소속 노조원 3000여 명은 집단 조퇴를 하고 사업장을 빠져 나와 부산대 운동장에 모여 집회를 가졌다. 이후 노동자들은 학생 시민들과 함께 시내 곳곳에서 시위

1990.11.04 동래산성에서 부산 양산지역 노동자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노련 창립 1주년기념 부산양산지역 노동자 등반대회'

1991.02.23 부산노련 주최로 부산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노협, 연대를 위한 대기업 노조회의 구속 동지 구출과 91 임금투쟁 완전 승리를 위한 부산양산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1991.03.06 부산지역 민주노조들은 부산노련의 왜소화된 틀을 극복하고 공동임투를 통해 지역의 민주노조운동을 조직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20개 노조, 2개 노민추, 3개 노동단체가 참가하고 5개 노조가 참관하는 '임금인상과 물가 폭등 저지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부산양산지역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결성

1991.12.06 사하구 신평동 신발제조업체 (주)대봉 노동자 권미경 정부의 일더하기 운동에 반발, 작업환경개선 요구하며 투신자살(이후 부산노련, 부노련, 부산연합 등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구성된 '고무노동자 고 권미경 양 사인규명 대책위원회' 결성

1991.12.14 부산지역 재야 11개 단체 연합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이 발족, 부산노련은 참가단체로 구성

O12 [주요 활동가] 이성도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4. 종교계운동

O1 [단체명] **부산기독교인권위원회**

O2 [약칭] 부산인권위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O5 [존속 기간] 1984~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및 경남일원

O7 [법적 상태] 반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O [결성 과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가 지역인권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전주, 광주, 대구에 각1 개소 씩 인권단체를 설치하였는데, 그 중 부산지역에 설치된 인권단체가 바로 부산기독교인권위원회이다. 부산인권위는 최성묵 목사(중부교회)를 비롯한 부산지역의 목사들로 구성되었으며, 실무간사는 고호석, 김석호였다.

O11 [주요 활동] 제5공화국 아래에서 발생한 인권탄압사건을 고발하고 법률구조활동을 벌였다. 삼민투관련자고문사건, 택시기사사건 등 연이어 터지는 고문 및 인권문제를 쟁점으로 민주화운동에 일익을 담당했다.

O12 [주요 활동가] 최성묵, 고호석, 김석호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부산기독교청년회(YMCA)**

O2 [약칭] 부산YMCA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한국YMCA전국연맹

O5 [존속 기간] 1945~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O [결성 과정] 1945년 부산진교회에서 기독교 지도자, 기독청년 200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엶으므로서 결성되었다. 현재 국내 66개 지방YMCA 중의 하나이다.

O11 [주요 활동]

1)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청소년을 위하여

어린이-Y, 고교-Y, 대학-Y, 십대의 전화,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논단, 청소년 문화교실, 동구밖 교실,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기자단, 어린이 합창단,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보람을 일구는 회원활동

2) 전문성을 갖추는 지도력 개발

회원모집캠페인, 자원봉사센터, 학부모 교양교육, 각종 취미·문화강좌, Y-회보발송, 유지 지도력 훈련, 전국간사회(AOS)교육, 청소년 지도사 양성 주민자치

3) 민주시민사회를 향한 시민단체 연대사업

낙동강살리기 운동, 공선협 활동, 버스요금 실사, 지하철안전 시민운동, 의정참여단, 딸사랑운동, 언론개혁시민운동, 부산경제살리기 운동, 아파트공동체만들기, 8·15 통일 대축전

4) 아름다운 지역 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 개발

어린이놀이터 실태조사, 북한동포돕기 모금운동, 시민논단, 청소년환경의식 조사, 교육개혁정책, 2002문화시민운동, IMF- 재충전의 집, 외국인 노동자 큰잔치, 노인대학

5) 비전있는 선교와 지구촌 국제협력 사업

국제YMCA지도자회의, 한·일 어린이 문화교류, CCM페스티벌, 평신도신학대학, 신앙강좌, 목회자 포럼, YM/YW합동 기도주간, 직원경건회

6) 형제YMCA방문교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시민권익 보호

무료 법률상담, 상담원 교육, 이동중계실, 시민중계실 상담, 교통생활개선 캠페인, 시민운동위원회, 각종 모니터 활동, 소비자의식조사, 무료변호사상담

7) 이웃사촌을 실현하는 사회복지

청소녀장학금, 김장 서비스, 결연 후원금, 사랑의 먹거리나누기, 노인안부전화, 상담실 운영, 영세아동 산타보내기, 결식아동 자장면나누기, 녹색가게, 실직가정 산모도우미 교육

8) 균형잡힌 인격을 위한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장애인생화체육, 각종 캠프활동, 아기스포츠단, 레크레이션 대학, 수화교실, 소년축구단, 유아체능교실, 수영 웰리스, 에어로빅, 째즈댄스, 시민생활체육

O12 [주요 활동가] 임동규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부산YMCA http://www.psymca.or.kr/index.asp

O1 [단체명]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YWCA)**

O2 [약칭] 부산YWCA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부산진구종합복지관, 강서구종합복지관,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부설어린이집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YWCA)연합회

O5 [존속 기간] 1946~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O [결성 과정] 1946년 4월 1일 부산 동대신동에서 회원 20여명으로 창립되었다. 7월 1일부터 부산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기독교 여성지도자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 최초의 여성 단체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대한 YWCA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54개 지방YWCA 가운데 하나이다.

O11 [주요 활동]

1) 회원활동

어린이와 청소년12개 학교 클럽, 대학 캠퍼스 조직, 성인 노인 등 연령별 조직으로 건전한 문화활동과 사회교육,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 이슈 참여 활동 등 전개

2) 지역사회 개발활동

시민사업 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이슈 시민 참여 활동.(지역 환경 가꾸기, 교통문화 개선, 의정참여활동, 소비자 인권 운동, 지역 시민 사회 단체 연대 활동 등)

3) 사회교육/문화활동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 참여 건전한 문화 활동.(어머니 역사 탐방, 문화기행, 어학교실, 문학 여성을 위한 한글교실 등)

4) 생활협동조합 활동

안전한 생활재 확보와 소비자 생산자 권익보호, 지역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생활협동조합 운동

5) 지부를 통한 지역활동

4개 지역 지부의 고유사업과 함께 주민 대상으로 한국YWCA와 부산YWCA 목적사업 전개(공명선거 운동, 생태환경 가꾸기 활동, 평화 교육 등)

O12 [주요 활동가] 김관숙, 이선규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부산YWCA http://www.psywca.or.kr/

O1 [단체명] **진주기독청년회**

O2 [약칭] 진주YMCA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47.03.15~

O6 [주요활동지역]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1. 사랑과 희생에 입각한 생활을 바탕으로 완숙한 인간 및 시민육성. 2. 교파, 정당, 신앙, 인종, 성별에 차별 없이 종교, 사회, 체육, 문예, 교육(사회교육・평생교육), 교양, 농촌, 유아・아동보육사업, 어린이, 청소년, 복지, 관광, 환경운동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힘쓴다.

O10 [결성 과정]

O11 [주요 활동]

1) 아기스포츠단 유아교육사업 ;
- 유아캠프 등 교육 활동 (총 5회)
- 물사랑평화사랑 거북이 마라톤대회
- 평화축제 한마당
- 유아교육사업
- 토요 열린교실 2회, 방학교실 년 2회
- 어머니 모임 (년 9회)

2) 대학Y 동아리 활동 및 환경

3) 시민사업 / 시민운동 및 시민 문화운동
- 시민사업위원회
- 시민토론회 등
- 415총선활동 (유권자 정치교육, 선거축제 홍보단 등)
- 시정참여활동
- 6.5 재보궐선거 활동
- 시민문화활동
- 남강가족사진 촬영대회, 시민정치교육, Sweet Kimchi 축제
- 정보시민운동 (컴퓨터교육 등)
- 연대활동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용천돕기 등
- 615운동본부 통일맞이 주민노래자랑 등

4) 사회교육사업 / 평생교육 및 어린이 사회교육사업
- 평생교육원 성인 교양강좌 (다도, 도예, 스피치, 디카 등)
- 전문지도자 과정 (레크리에이션, 유아체육, 동화구연 등)
- 캠프활동 (국제캠프, 과학, 생태, 스포츠, 극기 캠프 등)
- 어린이 토요교실 및 특강 (수영, 축구단, 중국어, 스피치 등)

5) 청소년사업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영상미디어학교
- 청소년 어울마당 및 진주시 청소년 문화축제
- 바람직한 학교축제 만들기
- 깨끗한 생활세계 만들기
- 애드립 방송제
- 고교Y 동아리 활동

6) 시민중계실 /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 소비자 보호활동 (이동소비자 상담, 소비자물가조사 등 15회)
- 소비자 상담 (년 1107건)
- 신용캠페인 및 소비자교육
- 해피패밀리 교육 및 캠프

7) 어린이집 유아교육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진주여자기독교청년회**

O2 [약칭] 진주YWCA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78.06.23~

O6 [주요활동지역]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O10 [결성 과정]

O11 [주요 활동]

1) 여성을 살리는 운동 ;
- 여성가장 취업 지원활동
- 여성 노인 소비자 의식 실태조사 및 결과 언론 홍보
- 6.15 실현 여성위원회 활동
- 실버(여성노인) 도우미 파견

2) 외국인근로자 인권바로세우기 ;
- 외국인 근로자 쉼터 매주 1회 자원봉사
- 외국인 근로자 한가위 한마당
3) 환경사랑음식점 선정사업 ;
- 환경음식점선정, 시민홍보
4) 아파트분양원가공개토론회
- 아파트분양원가 실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계획 세움.
- 전면적인 분양원가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받음.
5) 환경사랑가족신문공모전
6) 노인소비자 사업 ;
- 노인소비자 모니터단 교육
- 노인소비자 의식조사
- 노인의 날 기념 아나바다
- 노인소비자 권리 찾기 토론회
7) 결식청소년 돕기
8) 늘해랑 어린이 토요교실 운영
- 구연동화, 어린이 요가, 베이커리 교실, 인라인 교실 등 운영
9) 청소년이 만드는 난짱 축제
- 청소년 기획단 교육
- 난짱 페스티발 진행
10) 고령자 인재은행
- 연중 실시
- 취업훈련, 취업알선, 구인처 발굴, 구직자 상담
11) 할머니 홈시터 파견 사업
- 취업자 모집, 취업 훈련, 실습, 구인처 발굴 등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천주교정의구현 부산교구사제단**

O2 [약칭] 정의구현 부산사제단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O5 [존속 기간] 1974~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반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O [결성 과정]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 구속을 계기로 60여명의 소장신부들이 1974년 9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과 역사현실 속의 사명을 새삼 다짐하면서 결성됐다. 9월 26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순교자 찬미 기도회'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과 소명을 믿는다." 로 시작하는 제1시국선언을 발표하여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 긴급조치의 전면적인 무효화,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 존중, 서민 대중을 위한 경제정책 확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제단은 「정의구현」에 뜻을 같이 하는 사제들의 협의체이지 천주교의 공식기구는 아니다. 산하에 <부산교구사제단>을 포함한 15개 지역별 사제단과 1개 수도회사제단을 두고 있다.

O11 [주요 활동]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1974년 발족된 이래 민주화와 인권문제 등과 관련 수많은 선언적 의미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신체제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사제단의 현실참여활동은 ◇현실고발 ◇시국선언 ◇기도회 등이 주된 활동이다. 1979년까지는 서울 명동성당을 중심한 인권운동에 주력, 지학순주교 함세웅 신부 사건, 시노트시부 사건, 인혁당 사건, 동일방직 사건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은 여하한 경우에도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사제단의 일관된 인권운동정신이다. 부산에선 송기인, 이재만, 손덕만, 박승원 신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시국사건에 성명서를 내는 등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1987년 4.13조치 발표 후에는 「직선제 개헌을 위한 단식기도」를 함으로써 부산의 민주세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O12 [주요 활동가] 송기인, 이재만, 손덕만, 박승원 신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http://www.sajedan.org/main.htm

5. 교육운동

O1 [단체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O2 [약칭] 전교조 부산지부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 05.28~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비합법 노동조합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5년 1월 28일 창립된 중등교사협의회는 전국총회, 지역연수회 등 교류와 연대를 쌓으면서 소모임 활동수준에서 전국적 통일성과 연대성을 가진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부산초등교사협의회가 1989년 3월 25일에 결성,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된 후 1989년 3월 26일 대연동 성당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교사협의회(부산교협)가 발족. 부산교협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법 개정 서명자 결의대회를 열기도 하며(2천 여명의 서명을 받음)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란 제언아래 교사의 노동3권보장,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 사학교원의 분명한 신분보장, 학생들의 자주성,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생자치제 실현 등에 대한 결의를 다짐. 1989년 3월 29일 부산교협은 1차 대의원대회를 거쳐 결국 1989년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결성.

O11 [주요 활동]

1989.05.14 전교조발기인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대회

1989.05.2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연세대에서 결성식, 위원장 전남고 교사 윤영규. 1989년을 '참교육 원년'으로 선언.

1989.06.02 '이경현 학우 살인테러 진상규명 촉구 및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 결성탄압 규탄 대회(1부)'와 '5.28 전국교직원노조 건설보고 및 탄압규탄대회(2부)개최

1989.06.10 부산대학교 금정회관 앞에서는 교사 6백여 명 등 1천 5백여 명의 교사, 교수 그리고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전교조 부산지부 결성(부산과 경남에서 60여명의 교수들이 가입)

1989.06.29 권경복 전교조 부산지부장 파면

1989.07.12 부산 구덕고등 고교생, 전교조교사 징계항의 교내시위

1989.07.24 부산시교위, 신용길 교사등 전교조교사 4명 파면.

1989.08.03 전교조지지, 부산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부산고교생대표자협의회 발족(의

장 황순주, 용인고 학생회장)

1989.08.29 부산학산여고, 금사여중생 전교조교사 해직항의 집단수업거부

1989.08.30 전교조가입 출근투쟁교사 박동익에 첫 사전영장

1989.09.01 울산전교조지회에 괴한 침입. 교사, 근로자 등 폭행, 4명 중상.

1989.09.14 전교조탄압저지와 노동악법개폐 및 테러규탄대회(태화강 고수부지)

1989.09.24 제2차 전교조국민대회 개최, 전교조 사수 및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제2국민대회, 전국 21개소에서 동시 개최

1989.11.12 '광주학살 5공 주범 구속과 동의대 진상규명 및 민중 생존권, 전교조 합법성 쟁취 시민대회'가 부울총협, 부민청, 부고협, 부교조 등 8개 단체에서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부산대학교에서 개최.

1989.12.22 마산지법거창지원, 전교조해직교사에 복직 판결

1990.05.27 국민연합 부산본부 민자당 해체 노태우 퇴진 전교조 합법성 쟁취 국민대회 개최(남포동 대각사 앞, 원천봉쇄로 중부교회에서 약식집회, 300여 명 가두시위)

1990.07.01 경남도교위, 전교조 교사 복직, 서명운동 주도한 교사 39명 징계

1991.10.26 부민련, 부울총협, 전교조 부산지부 등 부산지역 7개 재야단체소속 회원 3백여명 부산역광장에서 수입개방반대 수입상품배격 결의대회

1991.12.01 민련, 전농, 전교조, 전대협 등 13개 운동단체와 8개 지역운동연합운동단체, 민중운동의 단일조직연합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건국대, 연세대에서 결성출범식

1991.12.12 경찰, 전교조부산지부의 자금줄 조사 위해 거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 시작

1991.12.14 부산지역 재야 11개 단체 연합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발족, 부산연합은 배다지, 박순보 2인의 상임의장과 김진숙(부노련),하동삼(노단협), 윤부한(전교조 부산지부), 오상훈(민교협), 손병호(부경총련(건)), 조성래(변호사) 등의 공동의장으로 지도부를 구성. 참가단체로는 부산노련, 부경총련(준), 전교조 부산지부, 부노련, 노단협, 민교협, 여성회, 부민청, 민자통, 민가협, 기청협)와 3개 참관단체(부문협, 대불련, 민중회의(준).

1992.06.23 부산경남 민교협 부산교사추진위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대 사대학생회 대표, 전교조지부 사무실에서'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부산본부'결성

O12 [주요 활동가] 신용길, 이광호, 김영주, 권경옥, 박순보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울주지회**

O2 [약칭] 전교조 울산울주지회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민주노총

O5 [존속 기간] 1989.05.28~

O6 [주요 활동지역] : 경남 울산시 및 울주군 일원

O7 [법적 상태] : 비합법 노동조합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9.6.3 하오3시를 기해 전교조 경남지역 14개 지회 결성, 울산울주지회 조합원 58명 참석, 지회장 정찬모(38세, 언양국교)선출, 결성.

O11 [주요 활동]

1989.06.02 농소중, 전교조가입 교사 이원영씨 학부모에 의해 구타, 참교육 실천을 위한 교직원노조 지원을 위한 울산 시인협의회 결성, 준비모임. 울사협교육관 18개 단체 참석

1989.06.11 제일고 권정오 교사 불퇴근, 단식수업 돌입, 양정중 가입교사 교무실서 단식수업

1989.06.13 ~14 울산 18개 학교서 50여명 교사 불퇴근, 단식수업 돌입. 울산여중 최혁진 교사, 언양국교 김현정 교사, 울산중 서정대교사, 울산여중 박영선교사, 옥동국교 김영숙 교사, 학성중 호정진교사, 우정국 양미희교사, 울산중 박경령교사 실신.

1989.06.21 이원영 부지회장(농소중) 남부경찰서 수감(구속)

1989.07.03 한강범 교육연구부장 불법 강제연행

1989.07.05 성충호 지회장 강제연행 울산경찰서 구속

1989.07.28 이원영 부지회장 옥중 삭발, 단식농성 돌입

1989.07.31 정찬모(언양국 전지회장), 성충호(남창고 지회장), 이원영(농소중 지회장), 장인권(학성중 지회장직무대리), 한강범(양정중 연구부장) 5명 파면. 해임교사 권정은(제일고), 유숙희(삼광국), 박은영(용연국) 등 3명 전 조합원에 징계위 출석요구서 발부

1989.08.05 공업탑로타리(3시), 주리원백화점 앞(6시) 서명운동 돌입

1989.08.05 징계위회부된 전조합원 직위해제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전체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eduhope.net/

『울산대신문』제158호

6. 문화예술운동

O1 [단체명] **민족문화협회**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54~1958

O6 [주요 활동지역] 부산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민족문화협회는 1954년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 이종률을 따르던 부산대와 동아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창립하였다. 회원으로는 부산대의 김종수, 허수복, 이규섭, 김진영, 김상찬, 하상연, 배다지 등의 학생과 동아대 나선길, 최원규, 임형규, 김홍주, 이춘섭 등 20여명이었다.

O11 [주요 활동] 민족문화협회는 미국공보원에서 '추사 김정희 및 슈만 100년제의 밤'을 개최하여 부산교육대의 고태국 교수와 제자를 중심으로 항진의 노래를 부르는 등 역사 전진의 방향에서 행사를 치르렀다. 1956년에는 영남극장(현 보수동 소재)에서 민족문화의 밤 행사를 가졌으며, 이듬해 시민관에서 제2회 민족문화의 밤, 1958년에는 민족문화인 부산망년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민족통일과 민족자주의 정신을 고취시켜 나갔다.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부산민주운동사』, 1998, p.222

O1 [단체명]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O2 [약칭] 부문협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03.28~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운동이 비교적 뒤늦게 일어난 부산지역에서는 86년 이래 시민사회 속에서, 생산현장 안팎에서 끊임없이 활동을 펼쳐왔었고, 오래전부터 하나의 문화운동 조직틀을 생각해왔던 바, 1989년 3월 28일 부산지역에서 각기 나름대로 민중문화운동을 벌여오던 7개 단체가 모여 부문협을 발족.

O11 [주요 활동]

1989.05.00 임투시기에 부문협 임시위원회인 '현장지원모임'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놀이와 문화행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주민 '민투문화활동안내서' 발간

1989.06.00 6월~ 부산역 광장에서 치러진 '6월항쟁 계승 부산시민대동제' 주관

1989.07.00 '제 1회 민족문화학교' 개최

1989.09.00 부문협(6개 참가단체, 한 곳은 자체해산)과 '부마민중항쟁기념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부마항쟁 10주년 맞이 '부산민족예술대동굿'개최.

1989.11.00 부문협 기관지인 '부산민족문화' 첫 호 발행

O12 [주요 활동가] 박동혁, 이숙진, 송문익, 강희철, 이수빈, 윤명숙, 배한열, 김영배

O13 [관계 단체] 노래야 나오너라, 부산민족민술인협회, 민족굿텃 신명천지, 영화창작단 꽃다림, 극단새벽, 놀이패 일터, 극단자갈치

O14 [관계 자료]

7. 인권운동

O1 [단체명] **인권위원회 부산지부**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4~
O6 [주요활동지역]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부림사건을 통해 부산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부산에서의 인권운동의 효시가 되는 단체를 조직하기 시작
O11 [주요 활동] 부림사건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O2 [약칭] 민가협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5.12.12~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81년 초의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은 1970년대 후반의 상황과는 달리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발전해왔다. 선진적인 활동가들의 숫자와 역량역시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운동과정 속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나 역할분담이 비체계적인데다가 가족주의적인 편향성까지 지니게 되면서 부산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적인 실천과 지지구조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발생한 부림사건은 탄압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론과 양심세력의 조

직이 부재함으로 인해서 무자비한 탄압에 노출되고 말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자들의 부모님들과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만가협)가 발족되게 되었다. 부림사건을 계기로 연대활동을 벌여오던 부산지역의 구속자 가족들과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민가협을 결성. 민가협은 1985년 12월 12일 6개 시국사건 구속자 가족모임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단체이다. 민가협은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수호하고 가족 상호간의 연대와 상호부조 및 올바른 현실 인식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복역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 탄압의 사례를 고발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과 같은 인권변호사가 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 졌다.

O11 [주요 활동]

1988.04.12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민정당 일당독재 저지를 위한 부산시민 단결본부' 발족식 및 시국대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단결본부에 민가협 참여.

1988.09.02 올림픽을 앞두고 민가협은 "양심수를 잡아두고 벌이는 민족화해, 평화제전 올림픽은 사기다"라는 제호의 성명서를 발표. 성명서에서 부산 민가협은 "우리는 노태우가 올림픽을 끝내고 나서야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발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항상 주장해온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인류평화의 대제전이며 민족화해의 장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고 분단올림픽을 극복하여 진정한 민족화해의 올림픽을 주장한 수많은 양심수를 이 시간에도 암흑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올림픽을 인류평화의 대제전이니 민족화해의 장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은 기만에 찬 허구일 수밖에 없다. 올림픽을 진정한 인류평화와 민족화해의 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양심수와 수배자를 즉각 석방, 해제하라."고 주장

O12 [주요 활동가] 김광남, 허운영, 김해몽, 노무현, 김광일, 문재인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8. 통일운동

O1 [단체명] **경남노인회**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O5 [존속 기간] 1960년 4월항쟁 이후

O6 [주요 활동지역] 부산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60.03.00 1960년 초에 만들어진 부산노인구락부가 4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경남노인회로 조직을 확대. 가입 자격은 친일경력이 없고 통일을 지향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가능. 한때 『민생시보』라는 주보를 발행하기도 함.

O11 [주요 활동] 직접 민주화 시위를 통해 민주항쟁의 대열에 참여하기도 하였지만 통일운동에 대한 사회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된 중심을 둠.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민족자주통일경상남도협의회**

O2 [약칭] 민자통경남협의회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회)] 부산시 지부를 포함하여 12개 지부에 달함.

O4 [상급 단체, 가입 단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O5 [존속 기간] 1961.4.15~5.16

O6 [주요 활동지역] 경상남도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 체계] 상임의장, 의장, 수석부의장, 사무국장, 총무부장, 조직책, 부산진구조직위원

O9 [강령]

O10 [결성 과정]

1961.01.15 민자통 의장단의 한사람인 정순종이 책임을 맡고 부산에 내려오면서 본

격화 되는데 1961년 1월 15일 경남민자통결성준비위원회을 조직하였고

1961.04.18 부전동 소재 월세계예식장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성대회의 경과 보고는 유혁이 하였다.

O11 [주요 활동]

1961.04.19 평화통일운동, 2대 악법 반대투쟁 등의 대중운동 전개, 4.19 1주년 기념 행사 개최 등.

O12 [주요 활동가] 상임의장에는 정순종(5 · 16으로 옥사), 의장에는 권손 · 전호일 · 문희중(사대당 재정부장, 한미경협반대공투위, 2대악법반대공투위) · 김수현(사대당부위원장, 당사제공) · 김용겸이었다. 수석부의장에는 裵鍾建(변호사), 사무국장 이능휘, 총무부장 유혁, 조직책 이영석(사대당 동래 창당위원, 민민천 중앙간사장, 인혁당 경남도당 조직책), 부산진구조직위원에는 김한덕(통민청, 사대당부산진구 조직위원장, 64년 인혁당 경남당 교양책)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9. 시민운동

O1 [단체명] **부산흥사단**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부산흥사단 여성회, 부산흥사단 청년단우회, 부산대학교 아카데미, 부경대학교 아카데미, 금성고등학교 아카데미, 가야고등학교 아카데미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흥사단본부

O5 [존속 기간] 1963.10.05~

O6 [주요활동지역] 부산시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흥사단은 무실(務實),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질 향상과 민족사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할 지도적 일꾼을 양성하여 국가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10 [결성 과정] 1963년 9월 22일 흥사단 부산분회 결성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1963년 10월 5일 흥사단 부산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초대 분회장 김광업). 1974년 3월 30일 부산지부 승격(초대 지부장 강재호).

O11 [주요 활동] “도산추모식 및 존경받는 인물상 시상식,” “물에산에 YKA등반,” “흥사단 전국대회,” “3대운동”(교육운동, 투명사회운동, 통일운동)

O12 [주요 활동가] 류청로, 김건호, 배영호, 조점동, 김영조 등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부산 흥사단』; 부산 흥사단 http://www.ykabs.or.kr/

O1 [단체명] **진주흥사단**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67.10.15~

O6 [주요활동지역]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흥사단은 무실(務實), 역행(力行), 충의(忠義), 용감(勇敢)의 정신으로 국민의 자질 향상과 민족사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봉사할 지도적 일꾼을 양성하여 국가 부흥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O10 [결성 과정]

O11 [주요 활동]

1) 도산추모식 및 연수회 : 매년 3월 초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그리는 추모식 및 회원 연수회
2) 고교아카데미 활동 : 흥사단 목적을 기반으로 청소년 자질향상 및 동아리 활동 추진
3) 대학 아카데미 활동 : 흥사단 정신을 계승하며, 역량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 추진아카데미 활동
4) YKA등반대회 : 월별 일반인 및 회원대상으로 아름다운 산을 지키자는 뜻으로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자연보호캠페인 전개
5) 하계수련대회 및 봉사활동 : 단우의 친목을 도모하며, 개개인의 자질 및 역량 발전에 수련대회 및 봉사활동에 목적을 둔다
6) 청소년 '기러기백일장' 개최 : 2004년 제5회째 개최하였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소중한 우리글의 우수성을 전파, 문학소질을 계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함
7) 지역교류사업 : 다양한 지역 문화를 함께 교류함으로써 국민통합과 지역 간의 화합을 추진
8) 남강사랑 전국웅변대회(94년 제1회) : 남강의 소중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이 자기의 주장을 통하여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몸소 실천 할 수 있는 계기와 웅변 및 토론 문화를 보급하는 자리를 마련함
9) 이당 안병욱 교수 서예전 : 진주 흥사단 회관 건립 기금모음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10. 환경운동

O1 [단체명]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O2 [약칭]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환경운동연합 진주 및 서부경남 지역조직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환경운동연합

O5 [존속 기간] 1991.09.25~

O6 [주요활동지역] 진주시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합법, 비영리민간단체

O8 [조직체계]

O9 [강령] 시민들의 눈을 피해 뿜어대는 각종 매연과 농약으로 범벅된 먹거리 오염 그리고 그동안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기형화된 도시계획은 남강권역의 전반적인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의 무관심과 이기주의가 계속된다면 대구의 페놀사건과 전국 각지의 여러 가지 공해문제가 멀지않은 날에 닥칠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자신과 후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공장의 검은 연기와 폐수를 더 이상 지역의 발전이나 희망으로 보지 않으며 그 동안의 무관심과 이기심 가운데 자행되어 온 남강과 남강권역의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남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며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되돌려 주는 일이다. 남강과 남강권역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오염원을 방지, 제거하여 자연과 공존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참된 인간상을 정립하고 남강 물을 먹고 자랄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할 남강을 가장 자랑스런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 남강과 함께 해 온 사람들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의연히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을 창립한다.

O10 [결성 과정]

1991.09.25	‘남강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창립대회

O11 [주요 활동]

1991.10.25	남강물고기 떼죽음사건 대책회의 및 특위구성
1991.11.14	신무림제지 펄프폐수 방류사건발생 특위구성
1992.03.07	대곡 석포리 농지 쓰레기 불법매립사건 발생 특위구성
1992.05.01	지리산 양수발전소 반대운동
1992.05.01	지리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1992.07.09	남강보전을 위한 사회단체연합 창립
1992.09.24	정기총회
1993.04.02	환경운동연합 창립. <진주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변경
1993.09.08	지리산 양수댐 건설반대를 위한 서부경남 대책위 결성

1995.01.30 금성초등학교 부지보존운동 대책위원회 결성
1996.05.25 국제 와이즈맨 한국동부지구 환경대상 수상
1997.03.29 둔철골프장반대 진양호보존을 위한 대책위 결성식
1998.03.04 에너지절약·자원재활용을 위한 녹색운동 발대식 및 특위구성
1999.03.15 상평공단 폐수 무단방류 사건발생 및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1999.05.15 지리산 식수댐계획 백지화 투쟁본부 발대식
1999.06.05 부설기구 서부경남 HAM 환경감시단 창단
2000.12.29 푸른진주시민위원회 환경상 수상
2000.02.23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댐반대 투쟁강연회 개최
2001.03.14 평거동 자연녹지지구 공장설립 반대 대책위원회 결성
2001.04.17 하동 핵폐기물처리장 반대 영·호남 대책위 발족식(동)
2003.01.02 덕이농산 폐수유출 실태조사단 구성, 활동
2004.10.19 물사랑 실천사례 우수상 수상(수자원공사)

O12 [주요 활동가]

O13 [관계 단체] '진주환경운동연합'으로 명칭 변경(1993.04.02)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부산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

O2 [약칭] (부산)공추협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및 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반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는 한때 '부민협'(부산민주시민협의회)의 공해분과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6월항쟁 이후인 1989년부터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약칭 '부산 공추협')로 개편된다. 그 이후 1993년 4월 전국의 8개 환경단체를 통합하여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네트워크 단체로 재편되면서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로 자라나게 되는 데, 여기에 그 네트워크의 부산지역 기구로서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성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O11 [주요 활동] '부산 공추협' 시대인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사태로부터 부산・경남의 환경문제 전반을 다루는 창구로서 역할하기 시작하였고, 삼랑진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기 위해 달리는 경부열차를 몸으로 막으면서 건설의 부당성을 알려내

었는가 하면, 금정산에 들어서는 골프장과 사격장, 임도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불도저 앞에 드러누워 개발을 저지·백지화시켰다.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환경교육의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여성공해학교, 어린이환경캠프, 시민환경교실, 수요환경강좌 등을 개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운동을 펼침과 동시에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 등에의 참여와 국제적 교류를 시도하면서 환경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모색하고, 각종의 캠페인을 통해 환경에 대한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대에 들어와서는 현장활동을 강화시켜 기동환경감시단과 환경통신원을 발족시키는 한편, 환경운동이 시민운동의 중심에 서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황령산살리기 시민단체대책위원회 결성과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저지 부산경남총궐기본부의 결성,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시민운동협의회, 에너지시민연대, 온천천살리기 네트워크 등의 활동은 환경문제가 환경단체만의 영역이 아닌 전 시민사회의 자각과 동참 속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공유하고 해결하고자 한 실천적 결과물이었다.

O12 [주요 활동가] 구자상

O13 [관계 단체] '부산환경운동연합'으로 승계됨

O14 [관계 자료] 부산환경운동연합 http://pusan.kfem.or.kr/

O1 [단체명]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

O2 [약칭] (부산)공해문제연구소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

O5 [존속 기간] 1984~

O6 [주요활동지역] 부산 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반합법

O8 [조직체계]

O9 [강령]

O10 [결성 과정] 부림사건을 계기로 부산지역에서의 재야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하자 1984년 부산에서 환경 및 인권운동의 단초가 되는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소가 형성되었다. 부산지역 인권변호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김광일 변호사가 노무현 변호사를 연결시키고, 부림사건에 연루 희생된 최병철, 이호철 등을 중심으로 결성되고 이후 구자상 등이 합류하였다. 초창기의 실제 목적은 공해문제보다는 정치적 민주화운동에 있었으나, 산업화의 심화와 더불어 공해 및 환경문제가 대중의 관심사로 크게 부상하면서 환경운동 자체의 비중이 회복되어 갔다. 공해문제연구소 부산지부는 한때 부민협의 공해분과로 들어가기도 했으나 6월항쟁 이후인 1989년에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약칭 '공추협')로 개편된다.

O11 [주요 활동] 초창기에는 낙동강하구언 개발과 온산병, 고리 핵발전소 핵폐기물 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며 활동하다 1989년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로 창립을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O12 [주요 활동가] 손덕만, 송기인 신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최병철, 송영경, 구자상, 주경미 등이 실무간사를 맡았다.

O13 [관계 단체] 부산 공해추방시민운동협의회로 승계됨.

O14 [관계 자료]

11. 보건의료운동

O1 [단체명]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산경남지부**

O2 [약칭] 부경건약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부산보건의료연대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O5 [존속 기간] 1989~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경남지역

O7 [법적 상태] 합법

O8 [조직체계]

총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조직국 실천분과 -산업보건분과

-지역보건분과

-의료보장분과

O9 [강령]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설립 초기에는 노동자 건강에 대한 문제로 산업재해 활동, 도시 빈민을 위한 진료소 활동, 의료보장제도의 연구와 실현을 위한 실천 활동을 펼쳤다. 현재 8기를 맞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천문호)는 전반적 보건의료체계의 변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의료가 상품으로 취급되고 의료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역할은 적지 않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약이 있음에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 현실은 완전히 비정상적이라고 보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알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들, 그리고 사회진보를 위해 힘쓰는 단체들과 연대해, 의료의 상품화를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데 힘쓰고자 한다.

O10 [결성 과정]

1987.06.19 87년 6월 19일 부산/광주에 이어 경인지역 약사 150여명의 이름으로 4.13호헌철폐 성명발표, 87년 6월말 4.13호헌철폐서명을 시발로 하여 88년 부산/광주의 약사모임연석회의를 통해 지역간 교류 및 실천적 활동의 협조 차원에서 부산 AIDS 계몽활동에의 공동참여와 농촌문제 교류를 합의, 88년 부산약사모임인 '약성'이 주관한 AIDS계몽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가 89년 부산대출신의 약사 10명 내외 중심으로 약성(약사의 소리) 창립, 90년 전국조직으로 건약 결성

1990.01.21 6월 항쟁 이후 서명을 주도했던 약사들은 자신들이 있는 지역 곳곳에서 뜻있는 약사들을 규합해 단체를 형성하는데, 부산 <약성(약사의 소리)>, 서

울 <건강사회실현약사회>, 대전 <타래>, 광주전남지역 <건강사회실현약사회>, 대구 <청년약사회> 등이 그것이었다. 이들 지역 약사 조직들은 88년부터 서로 교류하다가 1990년 1월 21일 전국 단일 조직으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를 창립한다.

O11 [주요 활동]

1990.01.21 1990년 부경 건약 창립대회(참여인원 50여명, 임종철 의장 초청강연), 삼랑진 산업폐기물 매립 반대집회, 성명서 발표, 울산 듀폰사, 한국티타늄사 설립저지 성명서 발표, 보건의료단체 광주 참배 ; 최초의 보건의료단체 공동참배(부경건약 17명, 건치 5명 참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규탄 성명서 발표

1991.00.00 1991년 걸프전 군의료 인단 파견반대 3단체 성명서 발표, 건약/건치/일건의(인의협)), 부산대 약대 농활교육 ; 학부연대 주체 설정 후 최초의 사업 민족보건학교 실시, 참건강나눔회와 연대 시작, 녹향제 기간중 향약 강연, 부경건약 학술세미나 참석, 약사교실 준비모임, 범천 4동 진료소 활동

O12 [주요 활동가] 임종철(제1기 1988 ~ 1989, 회장), 조수월(제2기 1992. 3 ~ 1994. 2, 회장), 박남운(제3기 1994. 3 ~ 1996. 2, 회장), 임종철(제4기 1996. 3 ~ 1998. 2, 회장), 최인순(제5기 1998. 3 ~ 2000. 2, 회장)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O1 [단체명]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경지부**

O2 [약칭] 건치 부경지부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O5 [존속 기간] 1989~현재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O8 [조직체계]

상임대표 -정효경 공동대표-차상조
사무국장-오형진 사무차장-김희준
교육부장-하현석 기획부장-조병준
연대 사업부장-박태식

O9 [강령] 회원 간의 민주적 활동을 통하여,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보건의료현실의 모순을 극복하여 올바른 보건의료체계의 정립 및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 각 부문과 공동 협력하여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올바

른 의료인상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O10 [결성 과정]

1989.04.00 4월말~5월 초, 각 지역별로, 서울 치대 비등록 역사연구회, 등록 연극부 편집부 중심의 인맥으로 졸업 후 부정기적인 만남으로 사회운동과의 결합을 모색, 전두환 정권의 호헌조치에 전국의 지식인 교수 등의 시국선언이 이루어질 때 의료인 최초의 시국선언을 부산의 개원치과의사들이 발표. 이어 부산의 약사, 의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 이를 계기로 의료인 대중조직이 태동.

1989.04.26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창립

1989.05.00 더불어,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확대와 지역주민, 노동자와 함께하는 부경지부 결성

O11 [주요 활동]

1988.00.00 보건의료운동 연구, 우리교회 안에 '우리진료소(지역주민대상)' 개소

1989.00.00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부산경남지부 결성

1990.00.00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작

1991.00.00 지역의원으로서 '푸른치과'를 설립

1992.12.00 대통령선거에서 보건의료단체 공동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요구함

1993.00.00 공중구강보건법 제정,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대국민 구강보건 캠페인 등 전개

1994.00.00 노동자 구강검진, 학교 불소 양치사업 전개

1995.00.00 경남 양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인 무궁애학원에 진료실 설치

1996.00.00 연산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치과진료 시작, 부산 외국인 노동자 진료 시작

1998.00.00 양산 덕계 혜성원,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 장기수, 유가족에 대한 무료 치과진료 시작/실직자를 위한 진료사업 및 거리 건강상담

1999.00.00 구강보건법, 전문치의제 실시 등에 관한 간담회 개최, 수돗물 불소화 추진위 활동, 진우도 생태기행, 영축산 통도사 역사기행, 울산, 김해 정수장 견학, 지역내 51개 사회단체와 건강치아연대 결성

2000.00.00 수돗물불소화 시민캠페인 10여 차례, 부산시 12개 <장애인 생활시설>, 800여 장애인 구강검진 후 보고서 발표와 간담회, 시설장애인 대상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사업, 시설 - 치과 맺어주기 사업

2001.00.00 사하구장애인복지관 진료소 시작

2002.00.00 아빠치과 만들기(부산시내 아동시설 구강교육 및 홈메우기 사업), 쪽방 거주자 자활을 위한 사업 진행

2003.00.00 2차 아빠치과 만들기(부산시내 아동시설 구강교육), 부산시내 장애아동 및 학부모 구강교육, 보철사업 진행

O12 [주요 활동가] 이강주(부산지부 회장, 구서 치과), 이상봉(이상봉 치과), 차봉환(서면 중앙 치과), 조기종(조기종 치과), 전장화(한겨레 치과), 정효경(정효경 치과) 등이 역임

O13 [관계 단체]

O14 [관계 자료]

동아일보, 중앙일보

O1 [단체명]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일꾼회**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단체명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일꾼회'**였으나, 1994년도에 '건강사회연구회'(약칭 '건사연')로 개칭)

O2 [약칭] 노건일

O3 [소속 단체 또는 지부(지회)]

O4 [상급단체, 가입단체] 산재추방운동연합회(약칭 산추련, 산재추방운동협의회로 출범) 회원단체

O5 [존속 기간] 1991~2002

O6 [주요활동지역] 부산과 경남 일원

O7 [법적 상태] 비합법

O8 [조직체계]

대표

사무국장 - 기획실

교육홍보부 조사연구부 연대사업부 총무부

O9 [강령] (설립목적) 산업재해/직업병문제 즉 노동자건강권에 관심을 가지는 보건의료인, 노동상담인, 일반시민 등으로 구성된 모임으로서,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10 [결성 과정]

1988.00.00 1988년 문송면군 수은중독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노동자의 건강권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고양되면서 1990, 1991년을 거쳐 전국 각지에 산재추방운동단체들이 결성되기 시작,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라는 노동자의 건강, 생존권이란 문제가 부각되기에 이르렀음.

1991.08.00 이에 부산대학교내 '인해'(인간해방실천의료인회 : 예비 의사/약사들로 구성)라는 동아리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야학활동을 주로 해오면서 위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던 중 1991년 부산지역에서 노동자를 위한 치과진료를 위해 문을 연 '푸른치과'에서 상담실 한켠을 빌려 2-3개월 동안 활동해오다 1991년 8월 '노건일'이라는 이름으로 부산 전포동에 사무실을 개소,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O11 [주요 활동]

1992.00.00 홍보활동 ; 1992년 상반기 산재추방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 거의 없었던 부산양산지역의 척박한 현실에서, 노동자/노동조합을 상대로 부산양산지역의 각 공단마다 민주성향의 노동조합을 찾아 산재추방운동단체인 노건일(건사연)을 홍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해석과 직업병,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산재처리 등 초보적인 활동을 통해 건사연을 인식, 지역 내 산재추방운동의 토대를 마련. 상담활동 ; 산재 및 직업병인정과 노조의 산업안전보건활동 등에 대한 실무적 상담. 교육활동 ;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찾아가서 교육홍보활동을 해오다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 상반기/하반기 년 2회 매회 한 달 동안(보통 주1회 월4회) 교육 사업을 시행. 홍보활동 ; [부산노건]회지를 격월로 발간, 노동조합 및 회원, 단체 등에 배포. 기타 사안별 유인물 만들어 지역내 홍보활동. 조사활동 ; 부산양산지역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를 통해 자료집 제작 등 부양지역에서 최초로 산업안전보건조사자료집이 발간되는 등, 작업공정조사, 건강실태조사, 직업병연구 등을 통해 노조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정리, 제공하는 활동. 연대활동(대책활동 포함) ; 매년 7월 문송면군을 기리는 '산재추방의 달' 행사. LG전자부품(주) 노동자 유기용제 집단중독 대책활동. 한진중공업 폭발사건 대책활동

O12 [주요 활동가] 강문국 이철호 오차재 정숙자 김태혁 남선미 조영희 이정순 이순화 김경란

O13 [관계 단체] 서울 노건연, 인천 산보연, 대구 산보연, 마창 마창노건, 광주 노건상, 보건의료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등

O14 [관계 자료]

「부산양산지역 산업안전보건의식실태조사』-부・양지역 최초의 관계분야 자료집

「작업환경측정』-전국최초의 관계분야 자료집 <1992년 발간>

「산재직업병 사례모음집-상담사례/투쟁사례/판례』-전국최초의 관계분야 자료집 <1995.4.15. 발간>

「LG전자부품(주)노동자유기용제집단중독사건 자료집』<1996.7.1.발간> (LG전자부품(주)솔벤트중독피해자협의회/LG전자부품(주)노동자유기용제집단중독사태해결과모성보호・노동자건강권확보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34개 노동시민단체로 꾸려짐))

「부산노건』/「건사연포럼』회지를 격월 제작

◉ 참고문헌

架磾 宋基寅神父 華甲紀念論叢 刊行委員會, 《歷史와 敎會》, 현암사, 1997.

강대민, 1997 『부산 역사의 산책』, 경성대학교출판부

강만길 외, 2004 『한국노동운동사』 1·2, 지식마당

강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형성사

강중일·황진식 〈부산지역 문화운동론〉 , 《토박이》2집, 동보서적, 1986.

강흥석 등, 〈부산대학교 민주주의 학생연맹 조직사〉,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거제시사편찬위원회 편, 2000 『거제시사』

거창군사편찬위원회 편, 1997 『거창군사』

건국청년운동협의회 편, 1989 『대한민국건국청년운동사』

경남도사편찬위원회 편, 1988 『경남도사』

경상남도 편, 1996 『도정백년사』

경성대학교사십년사편찬위원회, 1995『경성대학교 40년사 1955~1995』, 제일인쇄

경제기획원 편,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각 년도)

고 최성묵 목사 10주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고 최성묵 목사 추모집》

고광훈,〈노사분규가 부산지역 수출에 미치는 영향〉,《부은조사》129호, 부산은행, 1987.9.

고명진, 1994 『신문사진 100선』, 서울언론인클럽출판부

고무노동자협의회, 1995『고무노동자 투쟁자료모음』

고성국,〈6월민주항쟁의 정치사적 의의와 그 역사적 계승〉,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고운석 등, 〈80년대 부산대학교 학생운동의 흐름 - 조직노선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고최성묵목사10주기추모사업준비위원회 편, 2002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구해근(신광영 역),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국립부산공업대학교칠십년사 편찬위원회, 1994『국립부산공업대학교칠십년사』, 소문출판

국민연합부산본부 외, 1990『부산지역 현실과 민중생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1971 『한국전쟁사』 1~4

국제신문사, 《국제연감》, 1970~1989.

권종헌 등, 〈학생운동의 과제와 전망 - 운동의 위기와 그 극복방향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조사〉,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권형택, 〈80년대 변혁운동에 있어서 학생운동의 역할과 과제〉, 《전환》, 사계절, 1987.

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 동광출판사, 1986.

기쁨과 사목연구소 편, 1996~2001 『암흑 속의 횃불』 1~8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1(74~75년), 기쁨과 희망, 1996.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2(76~77년), 기쁨과 희망, 1996.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3(78~79년), 기쁨과 희망, 1997.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4(80~81년), 기쁨과 희망, 1997.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5(82~83년), 기쁨과 희망, 1998.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6(84~85년), 기쁨과 희망, 1998.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7(86년), 기쁨과 희망, 2000.
기쁨과 희망 사목연구소, 《암흑속의 횃불》8(87년), 기쁨과 희망, 2001.
김경희, 2005「1970년대 노동 : 여성노동자의 작업장 생활과 성별분업 - 1970년대 제조업을 중심으로」『산업노동연구』 11권 1집, 한국산업노동학회
김대래, 〈부마민주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김대상, 1981 『부산경남언론사연구』, 대왕화사
김무용, 2000「해방후 9월총파업의 지역별 전개와 성격」『역사연구』 8, 아세아문화사
김병호 등, 〈사회운동에 관한 학생의식 조사〉,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김삼웅, 1994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김석민, 〈노동자의 입직경로에 따른 노동행위의 특징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제조업체 생산직노동자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 1987.
김석준, 〈6월항쟁 주체의 계급적 성격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6월민주항쟁10주년 부산범시민추진위원회 외, 《6월민주항쟁과 한국(지역)사회》, 1997.
김석준, 〈6월항쟁 주체의 계급적 성격(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김석준, 〈부산시 계급구조 분석시론〉, 《사회과학논총》제4권, 부산대, 1985.6.
김석준, 〈부산지역 교수서명운동의 전개과정〉, 《신부님 거기 있었네》, 1997.
김석준, 〈부산지역 노동자의 생활실태와 의식〉,《부산사대논문집》, 부산대, 1990.6.
김석준,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부산법조》15, 부산지방변호사회, 1997.12.
김석준, 〈부산지역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연대와 실천》제77호, 영남노동운동연구소, 2000.11.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 1993
김석준,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아카데미, 1993.
김석준,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 출판부, 1999
김석준,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출판부. 1999.
김석준, 1990「부산지역 경제구조와 노동운동 - 1980년대를 중심으로-」『사회과학논총』 제9권 1호, 부산대학교
김석준, 1993 『부산지역 계급구조와 변동』, 한울
김석준, 1999 『부산지역 현실과 지역운동』, 부산대 출판부
김성욱·이성철, 〈부산지역 도시빈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부》제2집,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1988.12.
김성한 외, 1984 『1960년대』, 거름

김영경 등, 〈80년대 부산대학교 도서관개혁운동〉,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김영명, 1992 『한국 현대 정치사』, 을유문화사
김영수, 1989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모색』, 백산서당
김윤환, 〈항만 하역사업 노사관계의 기본성격 : 부산 ·인천 ·군산을 중심으로〉, 《노동문제연구》7, 1982.4.
김장한 외,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도서출판 조국, 1989.
김장한 외, 1989 『80년대 한국노동운동사』, 조국
김정주, 1986「80년 봄 - 동국제강에 타오른 함성」『토박이』 2집, 동보서적
김종윤, 〈언론노조운동에 관한 한 연구:부산일보 노동조합운동에 관한 자원동원론적〉, 서강대 석사, 1989.
김지수, 1988「한국 여성노동운동의 현황과 과제」『여성』 2호, 창작과비평사
김진국·정창현, 2000 『www.한국현대사.com』, 민연
김진규, 1995「민주주의의 종소리는 국민 속에서 되살아 난다 - 김영삼 총재 제명파동」『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 1945-1995』(한국기자협회 편)
김진균·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론 - 현대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적 변동』, 한울
김천영 편저, 1985 『연표 한국현대사』, 한울림
김태경,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김태경, 〈부산지역 경제구조의 활성화〉, 《부산지역 현실과 민중생활》, 들샘신서, 1990.
김태경, 1989「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언론과비평』 6
김하경, 1999 『내 사랑 마창노련』, 갈무리
김하기,「부마민주항쟁 13주년 기념 특별대담 / 항쟁을 준비한 고독한 서생 — 황선용」『부마광장』 제5호(1992. 10),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3, 1993
김형균 편, 1993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3미디어
김혜숙·조순경, 1995「민족민주운동과 가부장제」『광복 50주년 기념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여성학회
김호철,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노사분규 이슈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 1990.2.
나까오 미찌꼬, 1991「1950년대 한국노동운동의 분기점 : 조선방직 쟁의 연구」『역사비평』 12, 역사문제연구소
나철회, 1997「1920년대 동래지역 청년단체의 조직과 활동」『문화전통논집』 제5집, 경성대학교
남진현, 〈노사협력을 위한 노사협의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기업실태를 중심으로〉, 경성대 무역대학원 석사, 1988.
내무부 치안본부 편, 1985 『한국경찰사』
노기현 등, 〈부산대 문예운동사 - 문화의 대중화를 중심으로〉,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노동부, 《1988, 1987년 여름의 노사분규 평가보고서》
노민영, 1991 『우리나라 노동운동사』, 현장문학사
대한민국 국회 편, 1960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동래고등학교 편, 1978 『동래고등학교 80년사』
동아대학교 50년사편찬위원회 , 《동아대학교 50년사》, 세종문화사, 1998.
동아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편, 1998 『동아대학교 오십년사』
마산시 편, 1999 『마산개항 100년사』
마산시사편찬위원회 편, 1997 『마산시사』
말지 편집부, 〈1987, 부산 : 학생시위에서 거대한 시민 주도투쟁으로 폭발〉, 《말》12호, 1987.
문재인, 〈부림사건과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성〉, 《역사와 교회》, 현암사, 1997.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열사회보》1~11권, 1999
민주공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산지역 민주인사 데이터베이스 작업》, 2003
민주공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산지역 민주인사 데이터베이스 작업』(미발간)
민주공원 편, 2003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민주공원, 1970·8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자료목록집, 2003
민주노총 편집부 편, 2001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 1970~2000』, 현장에서미래를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10년사》, 2001.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2001『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 10년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부산본부 노동문제특별대책위원회, 1987『잔업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 부산지역 7, 8월 노동자 투쟁 자료집』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1996『 민교협 10년사』, 관악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유적지 부산지역 기초조사·발굴작업 보고서》(미발간) , (주)동진프린텍,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2 『민주화이행과 과거청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1차 학술토론회 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03 『민주화운동유적지 부산지역 기초조사·발굴작업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억 속에 날아 오르다》, 서울문화사,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관련인사 구술사료수집사업》,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사료목록집》(전 4권), (주)역사만들기,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유적지 부산지역 기초조사·발굴작업 보고서》,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기독교사회참여운동관련문헌해제》,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생운동관련문헌해제》,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민주화운동 유적지 부산지역 기초조사·발굴작업 보고서』(미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민주화운동사료목록집』(전 4권), (주)역사만들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한국기독교사회참여운동관련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한국노동운동관련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한국정치운동관련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한국학생운동관련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료 전국순회전시회 자료집 《기억 속에서 날아오르다》, 20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화운동사료 전국순회전시회 자료집 《기억 속에서 날아오르다》, 2002
민주화운동자료관, 2000 『한국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구조』, 성공회신학대학교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99『양심수 없는 나라』, 살림터
밀양지편찬위원회 편, 1987 『밀양지』
박경문, 『노사협의제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기업에 실태를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1984.
박석분, 1989「차별의 사슬을 뚫고 전진하는 여성노동자운동」『여성』 3, 창작과비평사
박승옥, 〈80년대 노동조합 운동의 새로운 출발〉, 전태일기념사업회 편,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1.
박원표, 부산의 고금, 현대출판사, 1965
박인규, 〈'부일사태'와 언론노조운동〉,《월간조선》, 조선일보사, 1988.8.
박재율, 〈부산지역사회운동의 현황과 과제〉, 부마민주항쟁 16주년 기념행사, 1995.
박재헌, 〈부산지역 관광호텔의 노사관계 개선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 1991.
박재환, 1992 『갈등의 사회학』, 한울
박정기 · 박래군, 1997『철아, 아부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이』, 개마서원
박철규,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과 부산지역의 사회운동〉,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박철규, 1995「해방 직후 부산지역의 사회운동」『항도부산』 제12호
박태순, 1989「남도의 죽음과 부활 : 마산의 3 · 15항쟁과 4월혁명을 찾아」『사회와사상』 7
박현채 외, 1987『전환 - 6월 항쟁과 민주화의 진로』, 사계절
박현채 편, 1987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 1945-1991』, 소나무
박현채 · 조희연 편, 1989 『한국사회구성체논쟁』 1~2, 죽산
박형준 · 권기돈, 〈6월항쟁과 21세기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방문신, 〈군부독재 기세 꺾은 장엄한 민중의 분노 - 6월 민주항쟁〉, 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 1945-1995》, 1995.
부두노동사편찬위원회 편, 1969 『부산부두노동약사』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92『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 부마민주항쟁십주년기념사업회 편, 1989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

념자료집』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97 「부마민주항쟁, 그날의 역사」, 『부산 민주광장』 통권17호 (10.1.),
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 1989『사상공단지역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부산경남역사연구소, 1999『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 도서출판 늘함께
부산경영자협회, 《속보, 노사동향》, 1988.6.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1998『부산의 역사와 문화』, 부산대출판부
부산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1『부산뿌리찾기 1 -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
부산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편, 2001 『부산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10년사』, 뉴-워드사
부산대학교 오십년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 오십년사》,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편, 1985 『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 10월 부마민중항쟁사』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1985『거역의 밤을 불사르라 - 10월 부마민중항쟁사』
부산대학교민주화추진위원회 편, 1984「올려라! 부마항쟁의 새 깃발을 - 79년 10·16 부마민중항쟁의 사회 경제적 배경」『새벽 함성』
부산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편, 1997 『부산대학교 오십년사』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민주주의운동연합, 부산울산총학생회협의회, 1991『너희가 물러나야 우리가 산다』, 도서출판 힘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0~90년대 공안사건 공판기록 색인》(미발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관련 신문자료 모음집》(미발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1980~90년대 공안사건 공판기록 색인』(미발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관련 신문자료 모음집』(미발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97 『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97『유월의 노래』, 도서출판 유월자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1998 『부마민주항쟁 19주년 기념식 및 학술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4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부산경제사》, 1989.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1982.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82『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1989『부산경제사』
부산상공회의소, 《87년도 부산경제 전망과 '86년도 동향 - 제조업 중심으로》, 1986.
부산상공회의소, 《노동정책에 관한 업계의견 조사보고》, 부산상공회의소, 1983.
부산상공회의소, 《노동조합과 기업경영간 상관관계》, 1989.7.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 현황과 발전과제》, 1988.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의사 : 1889년~1982년》, 1982.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의 상공업 백년: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념화보》,1989.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운수업 현황과 당면과제》, 1987.
부산상공회의소, 《사상공단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부산경제연구총서 17), 1982.
부산상공회의소, 1982『부산상의사 : 1889년~1982년』
부산상공회의소, 1982『사상공단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부산경제연구총서 17)
부산상공회의소, 1983『노동정책에 관한 업계의견 조사보고』
부산상공회의소, 1986『87년도 부산경제 전망과'86년도 동향 - 제조업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 1987『88년도 부산지역 경제전망과 87년도 실적 - 제조업 중심으로』
부산상공회의소, 1987『부산지역 운수업 현황과 당면과제』
부산상공회의소, 1988『부산경제 현황과 발전과제』
부산상공회의소, 1989『노동조합과 기업경영간 상관관계』
부산상공회의소, 1989『부산의 상공업 백년: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00주년 기념화보』
부산상공회의소《88년도 부산지역 경제전망과 87년도 실적 - 제조업 중심으로》, 1987.
부산상공회의소・부산경제원, 《부산경제사》, 1989
부산시 부산진구청 편, 1989 『부산진향토지』
부산시검찰청 편, 1991 『부산검찰사』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편, 1989~1991 『부산시사』 제1권~4권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편, 1995 『부산약사』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4권, 1989~199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1989~91
부산시사편찬위원회, 《부산약사》, 1965
부산여자대학교삼십년사편찬위원회, 1995『부산여자대학교삼십년사』, 소문출판
부산여자대학교삼십년사편찬위원회,《부산여자대학교삼십년사》, 소문출판, 1995.
부산일보노동조합 편, 1989 『부산언론의 횃불을 들며 - 부일노조 투쟁백서』, 부산일보사 출판국
부산일보사 기획연구실 편, 1984 『(비화)임시수도천일』 상・하, 부산일보사
부산일보사, 《부일연감》, 1970~1989.
부산지방 검찰청, 1991『부산검찰사』
부산지역유월항쟁자료발간위원회 편, 1995 『6월항쟁』 1~3, 도서출판 유월자료
부산직할시경찰국, 〈釜林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釜山大民民鬪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釜山大不穩組織'愛社'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釜山美文化院放火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釜山美文化院占據企圖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釜山美文化院占據籠城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朝總聯間諜團事件〉, 《공안사건기록(1980~1987)》,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공안사건기록(1980~1987)》, 부산직할시경찰국, 1988.
부산직할시경찰국, 1988『공안사건기록(1980~1987)』

부산카톨릭노동상담소, 《사상공단지역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1989.
사계절 편집부 편, 1984 『80년 전후 격동의 한국사회』, 사계절
사천시사편찬위원회 편, 2003 『사천시사』
산별노조운동연구팀 편, 2003 『산별노조운동의 역사와 현재』, 현장에서미래를
서관모, 1990「한국사회의 계급구조」『한국사회론 :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와 역사적 변동』(김진균·조희연 편), 한울
성기철, 1995「유신 종말의 서곡, 여성 근로자들의 비명소리 - YH사건」『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 1945-1995』(한국기자협회 편)
손병호, 〈한총련운동의 의의와 전망〉,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손봉숙, 1985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손장권, 〈부산시의 도시화 현상과 사회문제〉, 《인구문제연구》제4집, 동아대 인구문제연구소, 1988.4.
송기인신부은경축・화갑기념문집간행위원회, 《신부님이 거기 있었네》, 1997
송남헌, 1985 『해방3년사』, 까치
송윤석 등, 〈80년대 부산대학교 학생운동사의 정리를 위하여 - 대중성 확보과정을 중심으로〉,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송인철 등, 〈부산대학교 조국통일운동의 전개과정〉,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시사문제연구회 편, 1985 『상황통신』, 화다
신라대학교 민교협 편, 1998 『신라대학교 민교협 10년 : 1988.6-1998.6』
신병현, 2003「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사회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주요 역사적 담론들 : 근대화와 가부장적 가족주의 담론구성체를 중심으로」『산업노동연구』9권, 한국산업노동학회
심현철 등, 〈학원자주화운동사 - 사회학과 교학협의회 건설 투쟁을 중심으로〉,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안승천, 2002 『한국 노동자 운동, 투쟁의 기록 - 전태일에서 민주노총까지』, 박종철출판사
안정남, 1993「부산지역 여성노동운동에서 나타난 여성문제에 관한 연구 : 80년대 부산지역의 고무사업장을 중심으로」, 계명대 석사논문
안철현, 1998「이승만정권하의 정치과정과 부산의 정치・사회운동」『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경성대학교
양산시사편찬위원회 편, 2003 『양산시사』
역사문제연구소 편, 1993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영남편』 1, 여강
역사문제연구소, 《한국근현대지역운동사》 1. 영남편, 여강, 1993
오근석,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논장, 1988.
오근석, 1988 『80년대 민족민주운동』, 논장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편, 2002 『울산광역시사』

유영국, 1997「6월항쟁과 부마항쟁의 비교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한국 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유월자료
6월민주항쟁10주년 부산범시민추진위원회 외, 1997『6월민주항쟁과 한국지역사회』
유팔무,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6월항쟁의 특징〉,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한국의 민주화와 부산의 6월항쟁》, 1996.
유팔무, 〈한국의 사회운동과 6월항쟁의 성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윤우경,「부산 발췌개헌 파동의 진상」『중앙부산교육』 147(1988년 4월호), 중앙일보사
윤중걸, 〈부산지역 산업동향 - 최근 노사분규의 현황과 대처방향〉, 《부산상공》, 부산상공회의소, 1987.9.
윤지현, 〈부산지역 제조기업의 인사, 노무관리 실태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 1989.
윤택림, 2002「1970년대 여성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노동운동의 의미 :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여성연구논총』 17집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편, 200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1~4
이동규 등, 〈80년대 부산대 학생운동사 - 사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이방식, 〈부산지역 관광호텔 노사관계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노동조합제도를 중심으로〉, 이방식, 《관광·레저연구》1, 한국관광레저학회, 1989.12.
이병창, 〈6월항쟁의 이념 - 국민운동 부산본부 이념을 중심으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이병창, 〈부산지역 6월항쟁의 특징과 한국민주화 과정에서의 의미〉,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한국의 민주화와 부산의 6월항쟁》, 1996.
이성철, 〈대도시 무허가 정착지 내의 노동력의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 1985.
이수언,「부마사태의 장막을 벗긴다」『신동아』 308(1985년 5월호)
이신행, 〈87년의 정치변동에 나타난 학생운동의 성격〉, 민준기 편, 《한국정치의 민주화》, 법문사, 1989.
이옥지·강인순, 2001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
이윤식 등, 〈80년대 부산대 학생운동사 - 시기별 투쟁사를 중심으로〉,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이은진, 1994「현대그룹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현대그룹 노사관계 진단 보고서』
이은진, 1998「3·15마산 1차 의거 누가 왜 참가하였는가」『3·15의거』 6호
이은진, 1998「구조냐 행위 주체냐 : 10·18 마산민주항쟁의 해석」『사회연구』 11집
이은진, 1999「1960년 3·15밤의거」『3·15의거』 7호
이은진, 2003「지역성과 사회운동 : 3·15 마산의거의 재조명」『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1 : 한국 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김진균 편), 문화과학사
이은진, 2004 『근대 마산 : 압축된 모순의 폭발지』, 경남대학교 출판부

이일구, 《현순간정치문제소사전》, 국제신보사, 1960
이일구, 1960 『현순간정치문제소사전』 국제신보사
이정식, 1993 『새로운 학생운동사』, 힘
이종률, 《민족혁명론》, 들샘, 1989
이종률, 1989 『민족혁명론』, 들샘
이태호, 1986 『최근 노동운동 기록』, 청사
이행봉,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운동적 배경〉,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이행봉·김형균·유영국, <유신체제하 197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부산민주운동사》, 부산대, 1998.
이흥록, 1991 『세상에 평화』, 들샘
이희영, 2005「체험된 폭력과 세대간의 소통 — 1980년대 학생운동 경험에 대한 생애사 재구성 연구」『경제와사회』 68호
일송정 편집부, 1988 『학생운동논쟁사』
장남수, 1984 『빼앗긴 일터』, 창작과비평사
장미경, 2003「여성주의 윤리와 한국 여성노동운동 (1987-1999)」『아시아여성연구』 42호, 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소
장미경, 2004「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노동자 : 여성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경제와 사회』 61호, 이론과실천사
장상환·정진상, 《한국의 사회운동》, 경상대 출판부, 2001
장상환·정진상, 2001 『한국의 사회운동』, 경상대 출판부
장을병,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사적 의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최 부마민주항쟁 15주년 기념심포지움 발제논문, 1994.
장을병,「부마민주항쟁의 정치사적 의미」(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최 부마민주항쟁 15주년 기념심포지움 발제논문, 1994년 10월 17일)
전교조 부산지부 교과위원회, 1990『 부마민주항쟁사』(지역사회교육자료집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편, 1990 『한국 교육운동 백서 1978~1990』, 풀빛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육운동 백서(1978~1990)》, 풀빛, 199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민족열사·희생자 추모(기념) 단체 연대회의, 1997『민족민주 열사·희생자 자료집 - 살아서 만나리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편, 2001 『민주노조 투쟁과 탄압의 역사』, 현장에서미래를
전노협·업종회의·공대위 편, 1991 『한국 노동운동 탄압 백서』, 이웃
전사편찬위원회,《한국전쟁사》, 1967
전수영 등,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운동사〉,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전순옥, 2004 『끝나지 않은 시다의 노래(They are not machines)』, 한겨레신문사
정관용, 〈87, 88년 민족민주운동의 활동평가〉, 한국사회연구소 편, 《대중정당》, 백산서당, 1989.

정광민, 〈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 《부마민주항쟁10주년기념자료집》, 1989.
정국로, 1995 『한국학생민주운동사』, 도서출판 반
정기문, 2004 『내 딸들을 위한 여성사』, 푸른역사
정미숙, 1993「70년대 여성노동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경험 세계적 연구 - 섬유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정의헌, 〈민주노조운동의 동향과 부산지역 노동조합총연합 건설의 방향〉, 《동향》제5호,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1989.
정인백, 〈인사·노무 관리의 구조적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부산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동아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7.
정철희, 〈조직적 동원과 6월항쟁〉,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정현백, 1996 『새로운 여성사, 새로운 역사학』, 역사학회
조갑제, 1987 『유고!』 1, 한길사
조보상,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부산지역 여성단체 활동중심으로)〉, 《부산여전논문집》5, 부산여자전문대, 1984.
조성관, 〈김현장과 문부식 :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그후 7년〉, 《월간조선》106, 1989.1.
조옥라, 1994「가부장적 기업구조와 여성노동운동」『사회과학연구』 3권,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지훈, 1989 『80년대 후반 청년학생운동』, 형성사
조진경, 1988 『민족자주화운동론』, 백산서당
조희연 편, 1990 『한국사회운동사』, 죽산
조희연, 1993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울
지역사회문제 자료연구실,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1989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편, 1989 『80년대 부산지역 노동운동』, 친구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부산 7-8월 노동자대투쟁의 특징〉, 《동향》1집, 1988.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부산지역 현실과 민중생활》, 들샘신서, 1990.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1988『뭉치면 이긴다: 88 상반기』(부산·양산지역 노동자 연대투쟁 자료집)
지역사회문제자료연구실, 1990『부산지역 현실과 민중생활』, 들샘신서, .
진덕규·김학준 외, 1981 『1950년대의 인식』, 한길사
진주시사편찬위원회 편, 1994 『진주시사』
진해시사편찬위원회 편, 1991 『진해시사』
차배근 외, 《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2001
차배근 외, 2001 『우리 신문 100년』, 현암사
창녕군지편찬위원회 편, 2003(증보판) 『창녕군지』
창원시사편찬위원회 편, 1988 『창원시사』
채수홍, 2003 『여성, 노동자, 여성노동자 : 여성주의 민족지의 젠더와 계급』, 한국여성개발원

초의수, 〈6월항쟁 이후 부산지역 사회운동단체의 발전과 과제〉,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초의수, 〈부산시민의 정치의식과 6월항쟁의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발표〉,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한국의 민주화와 부산의 6월항쟁》, 1996.
최상덕, 〈부산지역 운수업계의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시내버스, 택시, 지하철을 중심으로〉, 부산대 경영대학원 석사, 1989.8.
최인호, 〈부산·경남지역 학생 연대운동사〉,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최일성 외, 2002 『한국 여성사』, 백산자료원
최정기, 2001「한국의 정치변동과 사법적 처벌의 변화」『한국민주주의의 구조와 동학』,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최태룡, 1990「한국사회의 계급구조」『한국사회의 이해』(장상환·정진상 외), 한울
통영시지편찬위원회 편, 1997 『통영시지』
편집부 엮음, 《80년 전후 격동의 사회》, 사계절, 1984.
편집부, 《격동의 한국사회》, 사계절, 1984
표인주 외, 2003 『 전쟁과 사람들 -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한울아카데미
하일민, 〈한국민족민주운동과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와 부산의 6월항쟁》, 1997.
하일민, 〈한국민주주의와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 사단법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한국의 민주화와 부산의 6월항쟁》, 199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7 『1970년대 민주화운동』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편, 1984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198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87년 한국정치사정》(87년 자료모음 5), 198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 《기사연 리포트》 제1호, 198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6월민주화대투쟁》, 민중사, 198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부산지역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198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2『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6 『부산지역 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7 『기사연리포트 - 6월민주화대투쟁』 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7『 6월민주화대투쟁』, 민중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8 『대구·울산 지역실태와 노동운동』, 민중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88『 87년 한국정치사정』(87년 자료모음 5)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98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 기사연 리포트 3집》, 민중사, 198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리포트2-6월민주화대투쟁》, 198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리포트2-6월민주화대투쟁》, 198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7『 7~8월 노동자 대중투쟁』 기사연 리포트 3집, 민중사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86『 1986년도 인권주간 자료집 - 민주쟁취와 인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편, 1979 『한국노동조합운동사』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편, 1986 『한국학생건국운동사』,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출판국
한국사사전편찬회 편, 1990 『한국근현대사사전 (1860-1990)』, 가람기획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근현대사사전》, 가람기획, 1990
한국사편집위원회 편, 1994 『한국사』 26 (연표2), 한길사
한국언론연구원 편, 1988『 외국신문의 한국보도(1987.1~12)』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1 『한국현대사』 1-4, 풀빛
한국해양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1995『한국해양대학교오십년사』, 소문출판
한국혁명재판사편찬위원회 편, 1962 『한국혁명재판사』
한길사 편집부 편, 1989 『80년대 사회운동논쟁』, 한길사
한영현 등, 〈학생운동에 대한 시각 - 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우대중과의 공감대를 위해〉,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한종구 편, 1989 『노동조합운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백산서당
합천군사편찬위원회 편, 1995 『합천군사』
해방20년사편찬위원회 편, 1965 『해방 20년사』, 희망출판사
허명구,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현황과 과제〉,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세계, 1991.
허상수, 2001「한국민주주의와 노동운동」『한국민주주의의 구조와 동학』,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허승도, 〈유신 앞에서 폭발한 민중의 변혁의지 - 부마민중항쟁〉, 한국기자협회, 《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 1945-1995》, 1995.
허승도, 1995「유신 앞에서 폭발한 민중의 변혁의지 - 부·마 민중항쟁」『언론에 비친 한국정치 : 1945-1995』(한국기자협회 편)
허태일 등,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건설과정〉, 김형균 엮음, 《우리들이 쓰는 80년대 학생운동사》, 여름 3, 1993.
홍상태, 〈부산지역 제조업의 노동분쟁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 1994.
홍순권, 〈6월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 6월민주항쟁10주년 부산범시민추진위원회 외, 《6월민주항쟁과 한국(지역)사회》, 1997.
홍순권, 〈부산지역 사회운동의 정신사적 흐름과 과제〉, 부마민주항쟁 16주년 기념행사자료집, 1995.
황한식,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82.
황한식, 1982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연구』,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경남대학보》 , 1984년 10월 25일 · 1985년 6월 6일자

《국제연감》, 각년도, 국제신문사
《동아대학보》, 1985년 10월 21일자
《민주화의 길》 (1~16호 합본호)중 호별 연표(1980년대)
《민주화의 길》 (17~26호 합본호)중 호별 투쟁일지(1980년대)
《부대신문》, 1985년 6월 3일자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부산 MBC, 1999.10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외신 보도 자료》, 1990
《부마항쟁자료집(동아대 편)》, 민주공원(미발간)
《부일연감》, 각년도, 부산일보사
《사료목록》민주공원(미발간)
《소장문서사료등록집》1, 민주공원(미발간)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26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PSB, 1999.10
《월간 조선》, 1987년 8월호
《6월민주항쟁참여기》(부민협동지회 국본관계자 중심), 민주공원(미발간)
《6월항쟁 다큐멘터리 "그 뜨거웠던 여름"》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비디오테잎, 1995.6
《청산되지 못한 역사》, PSB 광복 50주년 보도특집, 1996.8.13.
《KBS 10·26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박정희 3편》, KBS
《한겨레》, 1988년 10월 15일~22일자

지역 민주화운동사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 부산•경남

발행일: 2006년 12월 28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T: 02-3709-7500 E-mail: edit@kdemo.or.kr F: 02-3709-752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빌딩 A동 6층

이 책자의 내용은 본 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
본 연구소의 승인 없이 전제 및 인용을 금함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비매품
05300
9 791187 593201
ISBN 979-11-87593-20-1 (PDF)